研究報告書 95－06

각계각층의 統一論議에 대한 硏究

警察大學治安硏究所

《研 究 陣》

연 구	김 승 호(교육학 박사)
	이 시 운(숭의여전 강사)
연구지도위원	전 석 린(전 경 무 관)
연 구 실 장	김 윤(총 경)
연 구 관	박 병 국(경 정)

目　　次

Ⅰ. 緖　論 ····· 3
1. 問題의 提起 ····· 3
2. 硏究의 方法 ····· 4
3. 槪念의 定義 ····· 5

Ⅱ. 政治社會陣營의 統一論議 ····· 8
1. 統一論議의 歷史的 展開 ····· 8
2. 統合形態의 諸類型 ····· 49
3. 主要 統一方案의 比較 ····· 74

Ⅲ. 運動陣營의 統一論議 ····· 89
1. 民族解放運動陣營의 統一論議 ····· 89
2. 民衆解放運動陣營의 統一論議 ····· 119
3. 運動陣營의 統一論議 比較 ····· 143

Ⅳ. 結　論 ····· 159
1. 政治社會陣營의 統一論議 ····· 159
2. 運動陣營의 統一論議 ····· 161

參考文獻 ····· 167

附　　錄 ····· 170
1. 남북한 통일정책 연표
2.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A)
3.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4.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B)
5. 2단계 통일에 기초한 통일과정
6. 대표적 통일방안 비교
7. 다른 국가의 연방제 방안과 차이점
8.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의 완결 이전의 북한통일방안과 비교
9. 통일문제의 3차원과 3대혁명 역량
10. 조국통일과 남조선 혁명전략전술
11. 분단국 통일유형 비교
12. 범민련과 범청학련의 강령대비

Ⅰ. 緖 論

1. 問題의 提起

세계화의 내외적 과제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으로 민주발전이며, 밖으로 통일(Unification)[1]이라 할 수 있다. 민주발전이 문민시대로 개막됐다면 통일은 실마리를 찾기에 바쁠 뿐이다. 그 이유가 통일은 남·북한의 공동사업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1975년 베트남이 무력적으로 흡수통일된 후 90년대는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의 민주화 결과로 우리와 수교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과도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특히 90년 독일의 평화적 흡수통일과 예멘의 합의적 통일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94년 예멘은 수반적 갈등의 무력적 해결이라는 내전을 겪음으로써 다시 한번 통일의 어려움을 실감케 하였다.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김정일은 북·미간 핵문제 해결의 경수로 건설을 타결시킴으로써 남·북관계의 걸림돌을 치우는 변화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정세를 반영하듯이 한편으로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2]을 94년에 새롭게 발표했으며, 대북경협 추진은 물론 세계화의 대국적 차원에서 조건없는 쌀 제공 등의 대도를 걷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이 정부와 다른 통일논의를 다양하게 확산시켜려 하고 있음도 피할수 없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먼저 기존의 통일논의는 역사적 상황과 관련시켜 그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또 그렇게 나타난 다양한 통일방안의 형태별 유형화와 주요 통일방안의 내용분석으로 각각의 특징적 성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운

1) 여기서 통일(Unification)은 역사적으로, 재통일(Reunification)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
2) 정부의 새 통일방은 94년 8. 15 경축사를 통해서 밝혔으며, 그 명칭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이나 '민족공동체방안'으로 약칭되며, 이전의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에서 '3단계 통일방안'을 거쳐 완성되기에 이르렀음.

동진영의 통일논의는 그 실상을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는 등이다. 이밖에도 일차자료를 부록으로 덧붙임으로써 다양한 정책개발은 물론 연구와 교육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2. 硏究의 方法

이 연구의 방법은 정치사회진영의 경우에 첫째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통일논의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였다. 대체로 통일논의의 변화는 당시의 주변상황적 여건과 밀접히 관련되어지는 바 이들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주요 상황요인으로는 국제질서의 변화, 남북관계의 상태, 그리고 남한내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가지 상황요인에 의거하여 통일논의의 변화추이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둘째, 각 통일논의에서 주장하는 통합방법은 형태별 유형화로 통일논의가 내포한 특징적 성격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치사회권에서 제기하였던 최근의 다양한 통일논의 가운데 종합적인 통일프로그램으로 제시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갖춘 방안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사회에서 진행되는 통일노력의 방향과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운동진영의 통일논의에 있어서는 실상을 다룬다는 맥락에서 분석적 접근법(Analytical approach)과 그 대비적 고찰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비교적 접근법(Comparative approach)을 원용하고자 하였다. 첫째, 운동진영의 통일논의를 분석하는 기준은 '진영'별로는 민족해방운동과 민중해방운동으로, '계파'별로는 전자의 민족해방(NL), 후자의 민중민주(PD) 및 민족민주(ND)[3]로 상정하였다. 둘째, 운동진영의 통일논의[4]는 일차 및 그 관련자료를 대상으로 삼았다. 셋째, 서술은 운동진영 및 그 계파별로 먼저 통일논의의 역사적 고찰을 하며, 다음으로 통일논의의 주요개념을 추출하게 되며, 그 다음으로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인식을 밝히며, 끝으로 운동진영의 통일론 및 그 비판과 통일방안에 대한 분석 등의 순

3)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사랑방 통일학과 자료집, 1991, 8쪽.

4) 운동진영의 통일논의란 통일과 관련된 운동진영의 통일논의사, 주요 개념, 남북한 통일논의에 대한 인식, 통일론과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음.

서로 이루어졌다. 넷째, 이렇게 서술된 결과는 그 진영간의 비교로 명료화하려 하였으며, 필요시 남북한의 통일논의와 비교하려 하였다. 다섯째, 이렇게 드러난 진영 및 그 계파의 통일논의를 결론으로 정리하므로써 그 정책적 대안의 시사점도 얻으려 하였으며, 그 밖에 실상이나 자료들이 교육과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진영과 운동진영의 통일논의에 대한 실상연구가 지금까지의 개별적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며 균형적으로 접근하려는 가히 그 효시적 시도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3. 槪念의 定義

본 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개념은 정치사회진영의 경우에는 내용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운동진영의 경우에는 그 실상의 기초연구라는 점에서 일차자료의 정의를 그대로 추출해 사용하려고 하였다.

먼저, 운동은 "사회적 모순을 해결,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집단적 지속적 실천활동"[5]이며, "현재의 모순을 극복하여 바른 사회를 지향하고 건설하려는 목적의식적 변화의 노력"[6]이며, "역사속에 모순이 있기에 생성되는 모순변혁의 실천"[7]이다. 이와같은 개념의 정의와 같이 여기서 운동은 '현재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집단적 실천적 활동'으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모순(Contradiction)을 해결하겠다는 운동론[8]은, 첫째로 한국이 식민지반(半)자본주의 사회성격이므로 존재되는 미국과 민중간의 '민족모순'을 해결하겠다는 운동은 '민족해방(NL)운동'[9]이다. 둘째로 한국이 신식민지국가독점점자

5) ○○대학교 총학생회, 민족자주학교 Ⅰ, 광주 : 남풍, 1989, 75쪽.
6) ○○민주교육실천협의회, 고교생민주학교, 1989. 2 쪽.
7) 한국불교사회교육원, 불교사상의 새로운 발견, 서울 : 정토, 1989, 101쪽.
8) 혁명문헌(Ⅱ) 上권, '전진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이정표에 대하여', 1989, 116-123쪽.
9) NL(민족해방)은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의 약칭.

본주의 사회구성체이므로 존재되는 자본가·관료·지주와 민중간의 '민중모순'을 해결하겠다는 운동은 '민족민주(ND)운동'[10]과 '민중민주(PD)운동'[11]이다. 셋째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간에 존재되는 '체제모순'을 해결하겠다는 운동은 '통일운동'이다. 넷째로 자본가계급와 노동자계급간에 존재되는 '계급모순'을 해결하겠다는 운동은 '사회주의운동'이다.

여기서 운동의 성공은 혁명이며, 주요모순이 당면 해결의 모순이라면 기본모순은 주요모순 해결 후에야 해결될 모순이다. 운동의 목적은 사상에, 그 실현의 방법은 이론에 담아져 있다. 이와같이 여기서 통일운동이란 '체제모순을 해결하려는 운동'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체제모순도 민족모순이냐 아니면 계급모순이냐, 계급모순 또한 민중모순이냐 노·자(勞·資)모순이냐에 따라 통일운동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동진영은 "혁명적 사회주의진영", "반자본주의적 좌파진영",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진영"[12]으로, 또 "식민지반자본주의 진영",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진영"[13]으로 구분되었다. 이와같이 여기서는 진영별로 '민족해방운동'과 '민중해방운동'으로, 계파별로 민족해방(NL), 민중민주(PD), 민족민주(ND)[14]로 사용되었으며, 이와같은 개념은 〈표 1-1〉과 같다.

---

10) ND(민족민주)는 NDR(민족민주혁명=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의 지칭이나 93년 5월에 NDR이 SR(사회주의혁명) 초기단계로 전환됐다고 발표되었다. 즉 NDR은 SR(사회주의혁명=Socialism Revolution)의 초입으로 단계전화됐다는 결의로 사회주의혁명단계에 들어 섰다고 밝혔음.

11) PD(민중민주)는 PDR(민중민주혁명=People,s Democratic Revolution)의 지칭으로 AIAMCPDR(반제반독점민중민주혁명=Anti-Imperialism Anti-Monopoly Capital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와 AIAFPDR(반제반파쇼민중민주혁명=Anti-Imperialism Anti-Fascism People,s Democrtic Revolution)로 세분됨.

12)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김00체제의 성격과 사회주의자의 전술", 1993, 4쪽.

13) 전국00직원노동조합 00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8쪽.

14) 여기서 민족민주(ND)는 "민족민주과제를 포함하는 사회주의 혁명(SR)단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그 근거는 1993년의 사노맹 결의임. 남한사회주의자동맹, 전게자료, 6쪽.

〈표 1－1〉　　진영 및 계파개념표

사회성격/구성체	진　영	계　　파	영문약칭
신민지반자본주의	민족해방운동	민족해방	NL
신식민지국가독점	민중해방운동	민중민주	PD
자본주의	노동해방운동	사회주의(민족민주포함)	SR(ND)

이 〈표 1－1〉과 같이 노동해방운동진영은 민중해방운동진영에 포함해 다루려 하였다.[15]

15) 노동해방운동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민중해방운동에서 PD와 차이를 지니는 ND의 통일논의로 취급한 것은 사회구성체를 같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운동진영 스스로도 통일논의를 NL/PD계파로 구도화 시켰음에 따랐음이다. 그러나 앞으로 노동해방운동진영도 자신들의 통일논의를 체계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관찰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II. 政治社會陣營의 統一論議

1. 統一論議의 歷史的 展開

가. 分斷確定期(1945－1953)의 統一論議

1) 狀況的 與件

해방과 더불어 미·소점령군에 의해서 분할된 한반도는 당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던 이들 강대국의 영향아래 각기 상이한 이념과 제도를 바탕으로 두개의 독립된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정치적 분단이 공식화되었고, 이후 두 체제간의 적대적 대립속에서 과도한 분단극복의 욕구는 북한에 의해 전쟁이라는 무력적 통합정책으로 구체화되었으나 결국 무력통일의 방법은 민족 분열의 비극적 결과만을 가중시킨채 좌절되고 한반도의 분단상태는 더욱 고착화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측에 대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났으나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2차대전의 전승국인 미·소에 의해서 또다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점령됨으로써 남북분단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후 전개된 분단해소노력은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과정의 일환으로 이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경쟁하였던 미·소 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밖에 없었다. 사실 미국은 2차대전 종전 직전까지도 전후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일관된 정책을 갖지못한 상태였다.[16] 이러한 미국의 모호한 태도는 이지역에서 소련의 개입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즉 미국의 요청으로 대일전에 참전한 소련군이 동북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진하고 북한지역까지 진입하게 되자, 소련의 팽창이라는 새로운 사태에 직면한 미국은 소련과의 직접적 충돌은 피하면서 한반도에서 소련세력의 확장을 저지할

16) 2차대전 종전 직후까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용석, "38선 획정과 미국" 양호민(외), <민족통일론의 전개>, (형성사, 1982), PP.224－250을 참조할것.

수 있는 견제정책을 모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항복이 공식화되자 미국은 그동안 검토되어왔던 한반도의 분할점령 결정에 의거, 점령군의 통치강령으로 일반명령 1호를 공표하였다. 그 내용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소양군은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고 그들의 무장해제를 실시한다는 군사적 편의조치를 언급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분할된 두 지역에서의 민정업무에 대한 행정기능은 그 지역에 진주한 미·소양군 사령관 각자의 책임사항이 된다'[17]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분할점령 정책의 기본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분단이 정치적 분단으로 진행될수 있는 소지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소련군에 의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지역에서의 소비에트화 과정과는 달리 남한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미군정 정책의 미숙은 미국의 일관된 분할정책의 실시를 어렵게 만들어 주었다.[18] 이에 미국은 미·소 점령군의 직접통치를 기초로한 한반도 분할정책대신 카이로회담(1943.12)이래 강대국간에 논의된 바 있던 한반도 신탁통치문제를 재검토하게 된다. 사실 한반도 문제해결의 국제적 신탁통치방식은 일본점령지에 대한 전후 처리방안의 일환으로 연합국 사이에서 자주 거론된 바 있었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전환은 1945년 12월 미·영·소 모스크바 외상 회의에서 채택된 4대강대국에 의한 한반도 신탁통치안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신탁통치안에 대한 격렬한 민족적 거부운동과 이에 따른 남한내에서 심각한 좌우대립 현상이 표출되자 미국은 신탁통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17)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1988), P.12. 재인용

18) 분할점령 정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당시 미점령군 사령관인 하지장군이 1945년 9월 24일 맥아더장군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전보문에서도 잘나타나 있다. 〈나는 전혀 다른 정치체제 아래 두 점령 지역으로 나누어진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한반도를 통일시키는데 있어 극복될수 없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당장에 필요한 조처는 국제적 수준에서 긴급조치가 이루어져 점령군에 의해 전적으로 지원받는 거국적 임시정부가 공동정책 하에 수립되는 것이다……적대적 이데올로기 하에 한 국가를 두 지역으로 계속 분리해 놓는다는 것은 파멸을 자초하는 일일 뿐이다〉 조순승, "한국분단의 기원" 양호민(외), 〈민족통일론의 전개〉, 앞의책, PP.213-214. 재인용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나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회의참가를 소련측이 거부함으로서 동 회의는 결렬되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동안 국제적 신탁통치를 실시한 후 한반도에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던 미국의 신탁통치정책은 좌절되었다.

이후 미국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소련과의 협상노력을 제한하면서 당시 자신들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던 유엔에 한국문제를 상정하여 유엔을 통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국제적 여건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반도 문제의 주무대는 표면상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새로이 창설된 유엔으로 이관되었다. 한국의 독립문제는 미국에 의해 유엔에 상정되였고 유엔은 소련측의 반대[19]에도 불구하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설치와 한국의 총선거에 관한 결의를 채택(1947.11.14)하였다. 유엔결의에 따라 한국전역에서 총선거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입국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 활동이 소련측에 의해서 거부되자 새로운 유엔결의[20]에 의하여 남한에서만 총선거(1948.5.10)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정부수립과 함께 미국에 의한 군정은 종결되었고 유엔 제3차 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한반도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유엔의 선언은 이후 전개된 남북간의 정통성 논쟁에서 한국정부의 합법성을 주장하게 되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다. 한편 북한지역에서도 소련측에 의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결국 한반도 내에 두개의 독립된 정부를 갖게되어 한반도는 영토적 분단은 물론 정치적 분단으로 공식화되었다.

남북한에 단독정부가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분단체제가 확정되자 남북한은 자신의 체제강화와 함께 정치군사적 대립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북한의 김일성정권의 형성과정은 동구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소련에 의해 철저히 '밖으로

19) 유엔에서의 한국독립문제 논의는 전후처리를 다룰수 없도록 규정한 유엔헌장 107조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좌절시키려고 노력하였다.

20)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는 찬성 51, 반대 2, 기권 11으로 한국내 접근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였다. 국토통일원, 〈민족통일로의 전진〉, (1989), P.543.

부터의 혁명'[21] 방식에 의해 의도적이며 강압적으로 구축된 것이다. 소련은 동구권으로의 공산혁명수출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자 한반도에서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북한지역을 우선적으로 소비에트화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산화 통일을 구상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김일성정권 초기부터 소위 '민주기지론'[22]을 내세우며 한반도의 공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미약한 국내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출발한 이승만 정부는 극심한 경제적 피폐와 정치적 혼란으로 정권적 차원의 위기를 맞게되자 이에 대한 돌파구로서 남북통일을 위한 무력불사론을 내걸고 국민적 단합을 꾀하고자 하였다. 즉 대한민국만이 유엔결의에 따라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북한지역만의 총선거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은 통일을 위해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도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23] 그러나 이와같은 무력통일론에 대한 언급은 당시 남한내에서 남북협상과 미군철수등을 주장하는 국내반대세력을 견제하기위한 상징조작을 통한 통치기술적 측면과 남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우려라는 측면을 안고 있었다.[24] 따라서 이는 실질적 의미를 갖고있는 북진 주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치적 구호였던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남북상황에서 일련의 평화통일 공세를 전개하던 북한이 소위 '민족해방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기습적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남북한 관계는 3년간에 걸친 무력통일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무력을 통한 분단해소의 방법은 민족적 비극만을 남긴채 오히려 한반도의 분단고착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

21) 서구의 정치학자 블랙(Cyril Black)은 혁명에 의한 권력획득 방법으로 네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동구권의 공산혁명을 <밖으로부터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22) 김일성은 '북조선 공산당의 당면사업'과 관련된 한 보고문에서 우선적으로 북한지역에서 혁명적 민주기지를 건설하고 이를 전국적 범위로 확대하고자 주장한 바 있다. 〈김일성 저작집〉 1권, P.487.

23) 국토통일원, 〈민족통일로의 전진〉, 앞의책, P.42.

24) 윤근식, "한국정부형태" 김운태(외), 〈한국정치론〉, (박영사, 1977), p.251.

2) 統一論議의 傾向

분단 초기의 통일논의는 주로 군정의 종식과 38선 철폐등 분단의 직접적 원인 제거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간의 뚜렷한 통일논의의 차이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군정의 지속과 더불어 제정치세력간의 이념적 대립과 정치주도권 장악을 위한 전략적 대립등으로 남한내에서의 통일논의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정부수립 이후 통일논의를 주도하고 있던 정부통일론의 초기적 특징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내세워 북한에 대한 주권 확장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방후 대다수의 한국민들이 한반도 분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최초로 38선의 철폐를 주장한 것은 1948년 9월 안재홍을 위원장으로한 국민당이 맥아더사령관에게 전달한 38선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결의문에서였다.[25] 당시 일반대중이 미·소군에 의한 38선 분할점령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을때 통일문제를 제기한 것은 통일운동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다. 이를 계기로 모든 정당들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독립, 38선의 철폐, 군정의 종결등과 같은 분단의 직접적 원인제거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분단초기 국내의 각당, 각파에서 나타난 통일논의는 통일을 위한 뚜렷한 정책의 제시라기보다는 하나의 운동노선이나 목표에 불과하였다.[26] 이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군정당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모스크바 외상회의(1945.12)에서 강대국들에 의한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이에 대한 찬반양론을 중심으로 국내 좌우익세력간의 분열과 대립이 첨예화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통일논의에 대한 개별적 의견도 개진되기 시작한다.

신탁통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남한내부의 심각한 분열상태에 직면한 미군정 당국은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위해 좌우합작

25) 송건호,"한국정당의 통일정책", 양호민(외), 〈민족통일론의 전개〉 앞의 책, P.287.

26) 민병천,"한국의 통일론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 안보연구 제14호(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84) P.6

운동을 지원하여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입법 및 행정기관을 창설하고자 하였다.[27] 이에 따라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1946.10.7)되고 이들은 강대국들의 후견적 신탁통치를 인정하고 좌우합작에 의하여 민주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미군정 당국의 적극적 지원을 받은 좌우합작위원회의 노력은 당시의 좌우 주도세력을 흡수하지 못한 중간세력의 결합체로써 신탁통치문제와 토지개혁 문제에 대한 내부의 심각한 의견대립을 해소하지 못한 채 좌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이를 계기로 한국인으로 구성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을 구성(1946.12)하여 향후 독립정부수립을 위한 일련의 행정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모스크바 협정에 따른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승만을 비롯한 일부 우익세력은 당장의 통일정부수립에 어려움을 들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다.[28] 사실 이승만의 극우적 성향에 대한 미군정의 견제와 여타 국내 정치세력들의 질시로 국내에서 뚜렷한 정치적 기반을 갖지 못하였던 이승만에게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승만은 자신의 '선정부수립 후통일'이라는 입장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승만은 미군정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당시 미군정이 추진하고 있던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전략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일련의 행정조치에 협력함으로써 단정수립 및 정권장악을 위한 기반 구축에 성공한다. 결국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계획은 이후 유엔의 '접근 가능지역에서의 총선거 실시'라는 결의에 의해 현실화 되어졌고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단독정

27) 당시 미군정 사령관인 하지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소련의 지배에 대한 우려에 따라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 이전에 자신의 권한아래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한국인이 참여하는 내각과 입법기관을 창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윤근식"한국정부형태", 김운태(외)공저, <한국정치론>, (박영사, 1977), p.237.

28) 이승만은 1946년 6월 3일 이른바 정읍발언을 통하여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회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자"고 발표하여 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도현, "이승만 노선의 재검토",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80), P.316.

부 수립운동에 대한 남한내에서의 격심한 찬반논쟁은 민족진영의 분열을 초래하였고 남북협상 운동의 출발근거가 되었다.

북한지역에서는 소련의 지원아래 단독 공산정권 수립을 위한 작업이 구체화되고 국내에서는 미군정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유엔을 통한 남한내의 단독정부 수립 계획이 적극 추진되자 김 구, 김규식등 남북협상파는 단독정부수립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29]하는 한편 민족자결적 입장에서 남북 정치지도자들의 협상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족자결의 입장에서 출발한 국내의 남북협상파는 통일국가의 수립을 위한 마지막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평양에서 개최(1948.4.19)하였으나 남한의 단독정부수립 추진세력의 참가 외면과 북한 당국의 사전계획된 전략에 의해서 아무런 성과없이 무산되었다. 이로써 남한내에서 남북협상파의 정치적 입지는 축소되었으며 결국 1948년 8월 15일 서울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9월 9일에는 평양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정권이 수립되었다. 남북한 단독정부가 각기 수립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정착되었고 남북한은 자신의 체제강화와 함께 정치군사적 대립의 양태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수립이후 남한정부의 통일논의의 기조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통일의 의미도 북한지역에 세워진 불법적 반국가단체인 공산정권을 타도하여 북한주민을 공산주의의 지배로부터 구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의 초기 통일방안은 남북한 전지역에 대한 총선거실시가 아니라 유엔 감시하에 북한지역만의 선거를 실시하여 선출된 북한의 대표를 대한민국 국회에 편입하는 흡수론적 통일이었다.[30] 따라서 남북한 총선거라든지 남북협상등과 같은 주장은 한국정부를 북한의 '괴뢰정권'과 동일시하는

29) 김 구는 1948년 1월26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에 자신의 통일주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단정에 뚜렷이 반대하였다. 1)전국총선에의한 완전한 통일, 자주 정부수립 2)양군철수의 전제조건 위에서 남북의 한인지도자회의 개최 3)유엔은 양군철수후 치안을 담당하는데 한정한다.

30) 제1공화국시대의 이러한 흡수통일적 사고는 1948.6.12 제헌국회의 결의, 7월 17일 이승만 국회의장의 헌법공포 기념사 및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언문 내용에서 뚜렷이 발견되어진다.

것으로 인정되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31]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이승만은 북한이 유엔의 결의에 따르지 않을경우 무력에 의한 통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승만의 북진 무력통일론은 정부수립 초기 한국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였지만, 그후 북한의 무력적 침략에 의해 시작된 한국 전쟁 기간중에는 현실적 가능성이 높은 실질적인 통일론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유엔군의 북진에 따른 중공군의 개입등 한국전쟁의 양상이 국제전으로 변모할 우려에 직면한 미국은 이승만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휴전협상을 모색하게되며 마침내 유엔군측과 북한측은 1953년 7월 휴전협정에 조인하게 된다. 이로써 분단극복을 위한 무력적 방법은 그 효력이 정지된 채 민족내부의 증오와 갈등을 유발하여 민족공동체적 의식에 치명적 손상을 남김으로써 민족전체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사회에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오랫동안 어렵게 만들어 주었다.

나. 體制競爭期(1953－1969)의 統一論議

1) 狀況的 與件

국제적 냉전체제의 지속과 더불어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립이 심화되어가고 남북간의 체제경쟁이 주요 당면과제로 등장하게 되면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동시기에 있어 남북한은 적대적 대립관계 속에서 분단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고자 체제우위 확보를 위한 경제재건에 자신들의 모든 동원능력을 집중하는 등 각각의 체제구축에 전력을 경주하게 된다.

휴전이후 통일문제에 있어서 무력적 방법의 불가능성이라는 현실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소모적인 정치군사적 대립양상은 당시 세계적 냉전체제의 경

31) 일례로 당시 국회에서 미군 철수요구 및 남북협상론을 제기하였던 김약수 부의장을 포함한 소장파의원 13명은 "국회프락치사건"과 관련되어 검거, 제명되었다.

직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2차대전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정에서 파생된 미·소중심의 냉전구조는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더욱 경색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군사동맹에 한국도 일원으로 편입되면서 냉전구조의 한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밖에 없었다. 냉전체제하에 형성된 서방동맹체제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상하 위계질서적이고 동시에 미국의 압도적 힘에 의해 지탱되었던만큼 한미관계도 이 테두리 속의 한 작은 부분으로 편입되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32] 이에따라 한동안 한국정부의 통일외교정책 기조는 미국에 의존하는 반공주의적 외교노선과 한국통일문제에 관한 유엔의 결의를 지지로 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와같은 성향은 대북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한동안 남북간의 통일논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남북간의 체제경쟁이 분단체제의 특징으로 등장하면서 남북한 모두 경제성장 정책에 자신의 체제동원 능력을 집중하게 된다. 전쟁에 의하여 피폐화된 경제상황은 남북한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재건해야 할 첫번째 대상이었다. 경제재건이라는 당면과제로 인하여 양체제는 모두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기본원칙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33] 즉 경제재건의 당면성은 남북으로 하여금 자신의 체제를 철저하게 강화하여 적대적 분단체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물적기반을 갖추고 이에 기초하여 다양한 통일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구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킨 것이다. 물론 남북체제 경쟁의 기반확보는 단순히 경제재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호대립적 역학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남북은 군사력 및 외교력을 강화해야 했으며 아울러 체제내적 통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데올로기 정치교육

32) 한배호,"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한미관계", 박준홍,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박영사, 1978), PP.151－152.

33) 북한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1953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김일성이 행한 〈모든것을 인민경제의 전후회복과 발전에 관하여〉라는 연설에서 잘 나타나 있다. "당중앙위원회 6차 회의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를 복원 발전시키고, 그러므로써 우리조국의 혁명원천인 민주기지를 안정시키고 강화함에 있다...." 국토통일원, 〈민족통일로의 전진〉 P.51. 재인용

을 강화[34]하여야 했다. 이와 같은 전분야에서의 체제경쟁적 상황은 남북간의 상호불신을 조장하고 정치·군사적 적대감을 고취하게 되어 쌍방간의 화해 분위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2) 統一論議의 傾向

휴전이후 이 시기에 전개된 통일논의의 특징은 남북간에 상존하고 있는 적대적 대립상황속에서 북측에 의한 지속적인 통일외교 공세에 남한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건설을 통한 국력확보에 우선적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통일논의는 활성화되지 못한 반면에 정부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4.19이후 혁신세력들에 의한 통일논의는 활발히 전개된다.

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던 이승만정부는 당시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승공통일적인 북진통일론을 전개한다. 사실 북진통일론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 통일방안이라기 보다는 국내외 여론을 겨냥한 정치 구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국내적으로 전쟁이후 나타난 국민의 좌절감과 이완현상을 응집시킬수 있는 심리적 보상물이 필요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의 공격으로부터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보호막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당시 냉전체제를 주도하고 있던 미국의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우호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경제적 원조 및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승만정부는 휴전 당시의 국제적 여론을 고려하여 휴전협정에 명시되었던 규정[35]에 따라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1954.

34) 1958년 11월 노동당 열성자대회에서 김일성이 행한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라는 연설을 계기로 북한에서는 전인민에게 노동계급의 사상과 의지로서 정신무장을 촉구함과 동시에 〈계급의 적〉에 대한 적개심을 앙양하기 위한 사상교육을 전개하였다. 김영식, "북한의 교육제도와 그운영", 〈북한교육론〉, (북한연구소, 1972), P.135.

35) 휴전협정 제4조 60항에 따르면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후 3개월내에 정치회담을 소집하여 외국군대의 철수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등을 협의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4)에 수동적으로 참가하게 된다.[36] 회담성공을 위한 연합국측의 적극적인 권유로 남한대표는 정부수립이후 견지해온 주장 즉, 한국정부의 유일합법성에 따라 북한지역에서만의 단독선거를 통해 한국정부로의 편입이라는 종래의 원칙을 수정하고 유엔결의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전향적인 제안을 제시하였으나 남북한 쌍방의 의견대립으로 회담은 아무런 타협점 없이 종결되었다. 남북한이 제시한 제안중 주요한 쟁점사항을 비교하면 〈표 2-1〉과 같다.

사실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제안된 남한정부의 남북한 자유 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 제의는 다분히 국제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제안으로서의 일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북진통일을 바탕으로 한 이승만 정부의 승공통일론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제네바 협상이 결렬된 후 평화적 방법을 통한 분단극복 논의는 남한내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어려웠다. 전쟁을 경험하면서 무력통일의 비현실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제정당들은 통일정책에서 집권당인 자유당의 북진통일론과 본질적 대립이 없었으며 어느 면에서는 집권당보다 더 보수적 경향마저 보였다.[37] 이는 당시 이승만정부의 엄격한 반공주의적 태도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평화통일논의의 부재상황에서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진보당의 통일정책은 여타 정당들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진보당은 북진통일론 이외의 모든 통일논의가 금기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평화통일론을 제기하였다. 진보당의 조봉암은 이승만정부의 무력적 북진통일론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민주우방과 제휴하여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주장하였다.[38] 그러나 그의 비무력적 평화통일론은 북한을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치 않는 자유당

36) 정부는 처음에 이회담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전쟁준비를 위한 시간만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참가를 거부하였으나 "회담이 실패로 끝났을때 미국은 더이상 공산측과 협상한다는 것이 소용없다는 사실과 동시에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인식하기를 원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소극적인 참석의사 성명을 발표한후 참가를 결정한 바있다. 국토통일원편, 〈민족통일로의 전진〉, 앞의책, PP.51-52. 재인용

37) 송건호,"한국정당의 통일정책",양호민(외), 〈민족통일론의 전개〉, 앞의 책, PP.294-295.

38) 조봉암의 비무력적 통일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그의 논문 "평화통일에의 길"은 진보당의 기관지인 〈중앙정치〉, 1957.10월호에 게제되었다. 그 전문내용은 부록을 참조할 것.

〈표 2-1〉 제네바 회담에서의 남북한 제안내용 비교

쟁 점	남 한	북 한
총선거 방식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	자유선거(모호함)
총선거 감시	유엔감시	중립국 감시
총선거 절차	대한민국 헌법절차	남북한 입법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전조선위원회〉가 선거법 준비
외군철수문제	선거전 1개월 이내 중공군의 철수, 유엔군의 계속 주둔	외군의 신속한 철수
남북한군사문제	군대의 재편성 문제는 통일국회에서 다룸	1년 이내에 남북한 병력을 10만으로 감축
과도적 조치	6개월 이내 총선거 실시, 총선거 직후 국회소집(과도기를 두지 않음)	〈전조선위원회〉를 두어 전후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과도적 조치로 경제·사회·문화 교류를 실시

출처 : 국토통일원 편, 〈민족통일로의 전진〉, (국토통일원, 1989), p.54.

의 승공통일론과 정면으로 대립되어 자유당 정권에 의해서 철저히 부정되었다. 그의 평화통일론은 이후 혁신세력을 포함한 다양한 통일운동세력에 의해서 수용되어졌다.

제1공화국의 자유당 정부가 4.19혁명으로 무너지고 내각책임제 헌법에 기초한 민주당 정권이 출범함과 동시에 각계각층으로부터 활발한 통일논의가 전개되고 이에따라 통일방안도 한층 다양성 있게 표출되었다. 이는 자유당 정부에서 활동의 제약을 크게 받았던 혁신세력들이 4.19혁명이후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되었던 시민적 자유에 힘입어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제안된 남한정부의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거한 평화통일 제의는 다분히 국제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제안으로서의 일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후

에도 북진통일을 바탕으로한 이승만정부의 승공통일론은 지속적으로 주장되었기 때문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처럼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주당 정부로서는 뚜렷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단지 무력적 북진통일론 대신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따라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등 원론적인 평화통일정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북진통일의 포기를 제외한다면 정책의 보수성과 지극히 자기방어적이라는 점에서 자유당의 통일정책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39]

민주당정부는 혁신계와 일부학생들에 의한 남북협상 및 교류와 중립화통일 주장등에 의하여 남한사회내에서 격렬한 통일논쟁이 전개되고 이에 따른 북한의 전략적 통일공세[40]가 가열되자 이러한 상황을 무마시키고 남한사회의 내적체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일문제보다는 국내 경제건설을 우선시하는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소극적인 정부정책을 제시하게된다. 이와 같은 민주당 정부의 건설우선 정책의 취지는 윤보선 대통령의 취임기자회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41] 사실 〈표 2-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뚜렷한 대북경제력 열세의 입장에서 민주당 정부가 선택한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통일유예론적 정책기조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볼때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다.

민주당 정부의 소극적 통일정책과는 달리 4.19혁명이후 자유로운 정치논의가 허용됨에 따라 혁신세력들의 통일논의 범위는 남한의 민주적 정치체제의 영역을 넘어 한반도 전체에 걸친 민족주의적 입장의 통일운동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

39) 최봉윤(외), 〈민중주체 중립화통일론〉, (전예원, 1988) p.95.

40) 북한의 김일성은 해방15주년 기념사(1960)에서 외세의 간섭없는 남북총선거를 제안하면서 이를 남한이 받아드릴수 없다면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의 연방제를 제의하는등 남한정세에 편승한 적극적 외교공세를 취하였다. 이때 나온 연방제가 북한의 고려연방제 주장의 출발이었다.

41) "통일 이전이라도 우리는 제일 먼저 이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국민을 애국적인 국민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될 때에만 한국의 통일은 의의가 있을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일 될 것이다." 김학준,"제2공화국 시대의 통일논의", 양호민(외), 〈민족통일론의 전개〉, 앞의 책, p.323. 재인용

〈표 2-2〉 1961년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비교

	남 한	북 한	남 북 대 비
석 탄(tons)	5,888,000	11,788,000	1:2
전 기(kwh)	1,770,000,000	10,418,000,000	1:5.7
철(tons)	46,000	776,000	1:16
비 료(tons)	64,000	662,000	1:10
트 랙 터	0	3,996	-
면 직(meters)	133,000,000	256,000,000	1:1.7
쌀, 밀(tons)	4,534,000	4,830,000	1:1
어획고(tons)	434,000	620,000	1:1.4
시멘트(tons)	522,000	2,253,000	1:4.3

출처 : 김학준, "제2공화국 시대의 통일논의", 양호민외 공편 〈민족통일론의 전개〉, (형성사, 1982), p.323. 재인용

당시 혁신계 정당 및 사회단체 그리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혁신세력들은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력신장을 일부 인정 하면서도 민주당 정부의 '선건설 후통일'은 통일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통일우선론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혁신세력들은 통일문제의 우선적 해결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는 각양각색의 통일방안을 주장함으로써 통일논의의 결집력이 결여되었고 특히 혁신정당 내부의 반목과 대립은 혁신정당의 이합집산을 촉진하였다. 당시 정당·사회단체들의 통일정책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표 2-3〉과 같다.

제2공화국 정부구성을 위한 7.29총선에서 참패[42]한 혁신세력들은 혁신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약칭 민자통)라는 연합체를 결성(1960.9)하고 장면정부의 '선건설 후통일론'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통일우선론 및 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였다. 민자통의 이러한 주장들은 이후 나타난 혁

42) 혁신세력은 7.29총선에서 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민위원 233석중 6석과 참의원 58석중 2석만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국토통일원편, 〈민족통일로의 전진〉, 앞의 책, p.66. 참조

〈표 2-3〉 민주당정부 당시의 정당 사회단체의 통일정책

단체 / 내용	민주당 신민당 노장파	신민당 소장파	통사당 중통련	사회당, 사대당, 혁신당, 민자통, 학생단체
통일과 건설	선건설 후통일론		선통일 후건설론 또는 통일 건설 병행	
통일 원칙	유엔감시하 대한민국헌법 절차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중립화 통일	남북협상에 의한 자주적인 통일
남북교류	반대	찬성	찬성	찬성
남북학생회담	적극 반대	소극 찬성	소극 찬성	적극 찬성

출처 : 이동선, "민간차원의 통일논의" 현대한국정치연구회편, 〈탈냉전의 민족통일론〉, (예진, 1993), p.363. 재인용

신정당들의 다양한 통일방안 분출에 도화선이 되었으며 당시 보수적 경향을 갖고 있던 장면정부의 반대성명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 및 협상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의 통일논쟁을 격화시켰다.

한편 김삼규, 김용중, 최봉윤등 소수의 재외학자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던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은 미 상원의원 맨스필드에 의해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자[43] 국내 혁신계의 중립화논쟁을 폭발적으로 가열시켰으며, 특히 민자통의 소극적인 중립화통일론에 반발한 일부혁신계는 민자통을 탈퇴하고 별도로 중립화조국통일운동총연맹(약칭 중통련)을 결성하고 적극적으로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중통련을 중심으로 혁신세력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된 중립화통일방안은

43) 1960년 10월 22일 미상원의원 맨스필드는 자신의 극동보고서 가운데 "한국통일문제를 오스트리아식 중립화의 조건으로 해결하는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삽입하였다. 김학준,"제2공화국 시대의 통일논의", 양호민(외), 〈민족통일론의 전개〉, 앞의 책, p.327.

재야정당은 물론 학생들의 통일운동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동방안을 주도적으로 제기하였던 세력들의 분열과 의견 불일치는 통일논의에 대한 난맥상만 노정시켰다. 이러한 남한의 분위기를 이용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평화통일공세는 결국 5.16군사 쿠데타에 빌미를 제공케되었으며 이후 혁신적 색채를 지닌 일체의 통일논의는 보수적 군사정권에 의해서 중지되었다. 1961년 5월 군사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반공체제의 재정비 강화' 및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이라는 혁명공약을 내걸고 통일논의는 물론 일체의 정치활동까지도 제한하였다. 따라서 제2공화국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활성화되었던 다양한 통일논의 및 운동은 반공적 안보관과 총력적 경제성장론에 의거, 철저하게 금지되어 이후 1960년대말까지 실질적인 통일논의는 존재하지 않게된다.

혁명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이 처음으로 표명된것은 1961년 6월 24일 김홍일 외무장관의 성명에서였다. 동성명의 요지는 "무력에 의한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며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실시한다"[44]는 것으로 이러한 입장은 그후 유엔총회에 제출한 각서, 연두교서, 성명등에서 계속 되풀이 되었는데 이는 민주당정부의 통일방안과 근본적으로 다른것이 없었다. 즉 현재의 내외 여건하에서는 통일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실력을 배양한 다음에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혁명정부의 통일시각은 민정이양 이후 제3공화국의 공화당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후 한·일회담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대시위가 격화되고 동경올림픽에서 있었던 북한선수 신금단의 부녀상봉을 계기로 그동안 억제되었던 비정부 차원의 통일논의가 다시 재연될 조짐이 보이자 공화당정부는 통일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함께 '선건설 후통일'의 정책방향을 재차 천명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6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언명함으로써 일부 혁신계 정치인들의 통일논의를 반박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을 제한시켰다. "남북한 통일문제는 70년대 후반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논의될것으로 본다. 일부 정치인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고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기정책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44) 국토통일원, 〈민족통일로의 전진〉, 앞의 책, p.74. 재인용

것은 북괴에 이익만 주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김일성은 6.25전쟁 도발 전범이므로 이 집단들과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 전범들이 물러나고 새 민족세력이 등장할때는 그들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실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45] 그의 이와 같은 통일유예론적 입장과 실력배양우선론에 기초한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두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수행으로 대북한 경제적 열세에서 점차 우세를 확보하기 시작한다. 이시기에 있어 남북간 경제력의 상대적 변화를 총량지표에 의해 비교해 보면 〈표 2-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이로써 남한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열등감에서 벗어나 남북간의 새로운 관계 모색기로 이행할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즉 1960년대부터 정부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선건설 후통일' 전략은 남한의 성공적 경

〈표 2-4〉 연대별 남북한의 GNP 비교

구분 / 연도	GNP(억달러)			1인당 GNP(달러)		
	남한(A)	북한(B)	(A/B)	남한(A)	북한(B)	(A/B)
1953	13.5	4.4	3.07	76	58	1.31
1957	16.7	9.4	1.78	90	85	1.61
1960	19.5	15.2	1.28	94	137	0.69
1962	23.2	20.2	1.49	96	179	0.54
1964	28.8	23.0	1.25	107	194	0.55
1966	36.7	24.1	1.52	125	192	0.65
1968	52.3	27.8	1.88	169	225	0.75
1970	79.9	39.8	2.00	248	286	0.87
1971	93.7	40.9	2.29	285	308	0.93

출처 :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2), p.233.

45) 국토통일원, 위의책, p.77. 재인용

제성장과 북한의 경제침체라는 한반도 내부상황의 변화와 함께 냉전구조의 완화라는 국제환경의 변화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통일정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게 된다.

다. 體制認定期(1970－1979)의 統一論議

1) 狀況的 與件

미·소간의 긴장완화에서 비롯된 국제적 냉전구조의 변화는 그동안 적대적 관계로 대립하여온 남북관계에도 변화 가능성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체제경쟁에서 열세였던 남한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힘의 균형을 회복하자 남북관계는 상호체제에 대한 잠재적 인정 등 실질적 대화 국면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미·소 양국은 지난 1960년대를 통해서 대결의 한계를 느끼고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자 1970년대에 들어서 보다 적극적인 미·소간의 화해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특히 월남전 개입의 실패로 대외정책의 전반적인 변화를 모색하던 미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감소를 고려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책변화의 구체적 표현은 '닉슨독트린'으로 나타난다.[46] 미국의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화와 함께 소련도 미국과의 긴장완화가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 핵경쟁을 포함한 전반적인 군사적 대결 관계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게다가 이념갈등으로 시작된 중·소분쟁이 국경선에서의 무력충돌로까지 사태가 악화되자 소련은 미국과의 화해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소련과의 긴장완화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화해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중국과의 관계정상화 그 자체의 목적과 더불어 대소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미·중화해는 소련의

46)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미주둔군을 전초방위지로부터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닉슨 독트린〉은 미국이 계속하여 동맹국들의 방위와 발전에 참여는 하겠지만 종전과 같이 세계반공 자유국가들의 방위를 전담할 수 없으며 또 하지도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최창윤,"자주국방과 주체성", 박준홍 편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박영사, 1978), p.595.

대미 협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미국은 1972년 소련과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의 핵우산하에서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정치 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던 일본은 미·소 데탕트와 미중화해에 자극을 받고 독자적인 중국접근을 추진하여 신속하게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다. 이는 미국이 아시아로부터 힘의 후퇴를 선언한 닉슨독트린 이후 이 지역에서 일본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한반도와 관련된 주변 4대강국의 새로운 힘의 편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에 나타난 강대국들간의 이와 같은 역학관계의 변화는 미·소 양극체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냉전구조를 근본적으로 동요시켰으며 이와같은 국제질서의 변화는 한반도에도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파급되어 남북관계에 반영되었다. 즉 미·소·중·일 주변 4대강국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로 인하여 그들간에 새로 형성된 역학관계의 손상을 우려[47]하였으며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해소문제는 남북한 당사국간의 협상에 의해서 스스로 해결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들은 남북간의 직접대화와 협상을 적극 권유하게 된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화분위기를 유도하였던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소간의 갈등재현으로 새로운 냉각기를 맞이하게 된다. 미국이 워터게이트사건 및 월남철수의 후유증으로 내부적 진통을 겪고 있는 동안 소련은 세계도처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견제없이 냉전적 팽창주의를 급속히 확산시켰다.[48] 이에 당황한 미국은 소련의 팽창정책에 대해 늦게나마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대소 봉쇄정책과는 달리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봉쇄정책에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협력자를 가담시키게 되었다.[49] 이처럼 소

47) 당시 주변 4강은 한반도에서 국지전의 발생가능성과 이로인한 주변4강으로의 확전 위험성을 경계하고 아울러 한반도의 긴장이 일본 우익세력에게 재무장의 구실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적 관심을 두었다.

48) 1975년 4월에 베트남이 공산화된 것을 비롯하여 1979년까지 라오스, 앙골라, 이디오피아, 남예멘, 아프카니스탄, 캄디아등 7개국에서 친소정권이 수립되었다. 안병준, 〈국제환경의 변화와 민족통일〉, (정읍사, 1986), p.27.

49) 중국은 소련세력의 팽창을 견제하고자 1979년초 친소 베트남 정부가 캄보디아를 점령하자 즉각 베트남을 침공하여 이지역에서 자신들의 무력을 시위하였다.

련의 새로운 팽창주의는 1970년초 어렵게 형성된 국제적 화해분위기를 또다시 냉각시켰다.

한편 1970년대에 있어서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와 더불어 남한내 통일논의에 직접적 영향을 준것은 급격히 변화된 남북관계였다. 이러한 남북한 관계의 변화는 남북간의 힘의 균형, 특히 경제력의 균형을 바탕으로 가능하게 된것이다. 196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북한에 열세였던 남한경제력이 두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1972년을 기점으로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하여 1980년에 이르러서는 1인당 GNP가 북한의 2배를 넘어서게 되었다.[50] 이에 반하여 북한은 당시 중.소이념분쟁의 와중에서 이들 두나라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 원조의 어려움과 경제.국방 병진정책으로 경제건설이 부진하자 1961년 시작한 7개년 계획을 3년이나 연장하여 1970년에 끝냈으나 여전히 목표에 미달하였다.[51] 이러한 결과로 1970년대 초반에 나타난 남북간의 경제력 균형은 남한 정부로 하여금 대북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즉 남한 정부는 종전의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대북관계를 설정하기 시작한다.

197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정희대통령이 '남북의 선의의 경쟁'을 제의하면서 북한과의 평화공존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이래 남북한은 비밀접촉을 통하여 분단이후 최초의 남북합의문서인 7.4남북 공동성명(1972)을 발표하게되고 이어 남북적십자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개최하게 된다. 이와같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는 당시 국제적 데탕트의 분위기와 함께 남한의 통일논의 형성에 결정

50) 남북한 1인당 GNP 비교 (단위 : US 달러)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국력추세비교연구〉, (1992), P.233.

남북한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남 한	285	316	396	535	591	800	1,028	1,406	1,662	1,589
북 한	308	316	418	461	579	585	642	784	873	758

51) 전응렬, "계획경제와노동자", 극동문제연구소편, 〈북한정치론〉, (극동문제연구소, 1976), p.433.

적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이후 미·소관계의 악화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남북관계도 다시 냉각되었다. 7.4남북공동성명의 합의에 따라 정치적 차원의 남북대화인 남북조절위원회의 본회의를 3회에 걸쳐 개최하여 오던 중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중단성명으로 불과 1년만에 중지되었다.[52] 이에 따라 남북간의 긴장완화 분위기는 일시에 급전하여 남북관계를 긴장상태에 빠뜨리게 되었다. 특히 1974년 광복절 기념식장에서의 대통령 암살기도 사건과 이후 남침용 땅굴의 발견등은 남한의 대북감정을 극도로 악화시켰고 더욱 1975년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에 고무된 일련의 북한측 움직임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은 남한정부로 하여금 안보체제강화에 주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1970년대 중반이후 또다시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남북간의 화해분위기는 경직되어진다.

2) 統一論議의 傾向

이 기간동안 남한에서 전개된 통일논의의 특징은 7.4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북한을 정치실체로 인정하고 남북간의 직접대화를 통하여 남북 양체제의 관계를 적대관계에서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려는 정부적 차원에서의 통일노력이 부각되었다. 한편 유신정부에 의해 제한된 정치적 여건하에서 제도권 야당의 침체된 활동과는 달리 제야세력들은 민주화투쟁을 전개하면서 통일에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기하는 등 비정부차원에서의 통일논의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다.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대화는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민의 관심을 전사회적으로 확대시켜 주었으며 각계각층으로부터 통일논의의 분출을 자극하였다. 그러나 1973년에 들어오면서 북한이 남북대화의 환경조건 개선등 비핵심적문제를 거론하게되자 남북간의 대화국면은 점차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남한정부는 국제

52) 북한은 남한정부가 6.23선언(1973)을 발표하자 곧이어 8월 23일 이른바 '김영주 성명'을 통하여 6.23선언은 민족분열을 고정화시키는 2개의 조선화 책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방적으로 남북조적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시켰다. 국토통일원편, 〈남북대화백서〉, (국토통일원, 1988), p.102.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간의 분명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정책의 수립을 절감하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 6.23선언으로 불리는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이다. 6.23선언은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그리고 유엔동시가입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북한을 정치실체로 인정함으로써 현존하는 두체제의 상호인정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6.23선언에서 주장된 평화적 관계의 설정은 한국정부의 남북한불가침협정 체결제의(1974.1.18)와 이어 발표된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1974.8.15)에서 재확인되고 구체화된다.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의 내용은 첫째 남북한 상호불가침 협정체결, 둘째 상호문호개방과 신뢰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셋째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로 되어있다.[53] 즉 평화정착의 바탕위에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이는 1970년대이후 남한정부의 공식적 통일정책의 기본노선이 되어 지속적으로 견지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정부수립이래 변함없이 주장해왔던 '유엔감시하의 총선거'가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감시하의 총선거'로 대체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 통일문제의 탈유엔화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당시 국제정치의 다극화 현상에 따른 유엔내의 세력판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시에 한반도 통일문제는 당사자들인 남북한이 직접대화를 통해서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한편 남한정부의 이와 같은 평화통일구상은 우선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고자하는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따른것이다. 기능주의적 접근이란 국가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보다 낮은 비정치적 영역, 즉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인도적분야에서 먼저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면 궁극적으로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어 전체통합을 이룰수 있다는 낙관론적 입장으로써[54]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남한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구하고 있는 통일정책의 기조와

53) 국토통일원 편, 〈남북대화백서〉, (국토통일원, 1988), p.469.

54) 김학준, "1970년대의 통일논의", 양호민(외), 〈민족통일론의 전개〉, (형성사, 1982), p. 362.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한반도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에 비판적 시각[55]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통일보다는 평화정착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소극적 통일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평화공존론의 입장에서 반박하는 학자들의 논리[56]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대화는 한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어 통일논의가 각계각층에서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나 곧이어 닥친 유신체제의 강압정치는 우리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억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권 야당의 당면목표는 통일보다는 민주화에 있었으며 민주화가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통일논의의 여건을 마련해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주도적인 통일정책 수행범위에서 벗어나는 통일논의에 대한 용공시 경향[57]은 제도권 야당으로 하여금 통일정책에 있어서 정부방침에 대한 동조화 현상을 낳았다. 반면에 재야세력은 정부의 통일논의에 대한 독점현상을 거부하는 한편 한반도 분단상황을 권위주의체제가 생성되고 지탱될수 있는 구조적 원인으로 파악하고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동시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71년 4월에 결성된 민주수호국민협의회(대표 김재준)는 7.4공동성명이후 남북한 통일논의에 민중의 참여를 허가하도록 정부에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가담하였던 장준하, 천관우, 함석헌, 문익환 등은 민중의 주체성과 민주화와 통일의

55) 예를 들어 김경원 교수는 평화통일 3대원칙에 대하여 형식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로는 "통일과 평화의 두 목표간의 관계규정이 불분명하여 통일보다는 평화유지와 현상유지로 빠지기 쉽다"고 지적하였다. 최봉윤외 공저, 〈민중주체 중립화 통일론〉, (전예원, 1988), p.123. 재인용

56) 함병춘 교수는 "민족의 통일이 또하나의 전쟁과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댓가를 지불해야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한국 국민들은 그댓가를 치를 수 없는 고가의 것으로 간주한다"고 전제하고 "통일이란 한국이 안전하고 또 영구한 기초 위에서 안전을 확보했을 때에만 획득할 수 있는 목적"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김학준, "1970년대의 통일논의", 양호민(외), 〈민족통일론의 전개〉, 앞의책, p.365.

57) 1979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김일성 면담용의 발언시비는 그를 용공시하는 압력에 의하여 결국 김총재가 해명발언을 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최봉윤(외), 〈민중주체 중립화 통일론〉, 앞의 책, p.126.

불가분성을 주장하여 이후 재야통일운동의 논리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58] 이들이 주장한 내용을 간략하면 다음과 같다.

* 장준하는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는 명제 아래 통일과 대립되는 한 그 어떤 것도 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보다 더 급한 것은 통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통일이 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유보되어온 것을 비판하고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천관우는 '민족통일을 위한 나의 제언'에서 남북한의 두정권이 있는 그대로 결합해서 하나의 국가가 된다는, 이른바 '복합국가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남북이 단계적으로 교류확대와 군비축소를 통하여 긴장완화를 이루고 남북의 결속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점진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는 것으로 아직 이론적 체계를 완전히 갖춘것은 아니나 정부차원의 통일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 함석헌은 〈우리나라의 살길〉이란 글에서 통일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중이 되어야 한다며 남북불가침조약, 군비축소, 그리고 평화를 국시로 하는 통일3단계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사상적 정책적 중립노선만이 민족의 살길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외세의존은 국민의 동의나 신임이 없는 세력이 외부세력의 도움으로 자기세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분단의 핵심은 상반된 이데올로기가 아닌 외세의존에 있음을 언명하였다.[59]

* 문익환에 의하면 분단은 남과 북의 민중이 객체가 되어 피동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므로 통일은 소외된 민중계급이 민주화를 통해 주체의 위치로 옮겨감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민주화의 결과로부터 산출되며 민주와 통일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두는 고리는 남과 북의 민중을 모두 포함하는 민족의 개념이라고 주장한다.[60]

위와 같이 이들 재야인사는 당시 정부의 통일논의 주도권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민중을 중심으로 한 민중통일론을 전개하였다. 물론 이들이 내세

58) 김도태, 〈재야통일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1), p.6.
59) 최봉윤외 공저, 〈민중주체 중립화 통일론〉, 앞의 책, PP.125-126.
60) 김도태, 〈재야통일안연구〉, 앞의 책, p.9-10.

우고 있는 민중의 개념이 약간의 차이[61]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단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기득권층의 양보와 포기를 주장하면서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은 상호연결되어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1970년대에 있어서 한반도 통일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통일노력과 함께 재야인사들의 지속적인 통일지향적 활동은 그것이 정부의 통일정책 수행에 지장을 주어 통일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에 역기능으로 작용하였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내에서 통일논의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었다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라. 統一基盤 造成期(1980－1992)의 統一論議

1) 狀況的與件

2차대전이후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제공하고 또한 그것을 강요하여 왔던 미·소 중심의 국제적 냉전체제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몰락으로 붕괴되고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모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에도 개방화와 세계화의 물결은 들이닥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남북한의 관계도 점차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남한은 이러한 변화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반도의 통일기반 조성에 힘을 쏟게된다.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던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는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미·소간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고 더불어 1980년대초 등장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보다 강경한 대소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냉전관계가 국제사회에 형성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전략방위구상(SDI)등 대소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국제적 긴장완

61) 재야인사들이 표현하고 있는 민중개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김도태, 〈재야통일안연구〉, 위의 책, p.12－14.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화를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추구하였던 '닉슨독트린'의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하였다.[62] 그러나 이후 전개된 미·소간의 치열한 군비경쟁은 미·소양국의 재정적 적자를 가중시키게 되어 오히려 양국이 갖고 있던 체제내적 결속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당시 사회주의 진영의 체제유지 비용을 거의 혼자서 부담해온 소련은 공산체제의 내부모순과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서방과의 무모한 정치군사적 대결은 물론 자신의 체제조차 지탱할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국 소련으로 하여금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1985년에 등장한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미국과의 핵무기 감축 회담[63] 등을 통하여 과도한 군비지출비용을 절감하고 총체적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동서화해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른바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는 개혁과 개방정책을 주축으로 소련 뿐 아니라 동구권의 민주화를 촉진[64] 시켰으며 특히 1989년 미·소몰타정상회담에서 냉전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협력을 선언한 이래 세계도처에서 우호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고무시켰다. 사실 동구권의 전면적인 와해 도중에 나타난 베를린장벽의 붕괴(1989.11.9)는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태동시키는 역사적 상징성을 표출하는 사건이었다. 이어 동서독이 통일되고 소연방자체까지도 해체(1991.12.31)됨으로써 냉전의 한축이 소멸되어 2차대전이래 세계질서를 지배하여 왔던 냉전체제는 실질적으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냉전종식 이후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형성된 세계질서는 국제사회에서 각 구성원들간의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국가간의 경제협력 문제는 개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종래에는 자국의 안보문제가 국가정책의 중심개념이었는데 반하여 탈냉전시대에서는 경제적인 국

62) 이기택, 〈국제정치사〉, (일신사, 1993), p.519.

63) 미소는 1987년 12월 중거리 핵미사일(INF)의 전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1981년에는 지상배치된 전술핵무기의 전면적 폐기를 각각 선언하게 된다.

64) 고르바초프는 1988년 4월 베오그라드에서 "독자사회주의"를 선언한후 1989년 유엔연설에서"모든 국가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동유럽권의 민주화개혁과 변화를 가속화 시켰다. 통일연수원 편, 〈1994 통일문제 이해〉, (통일연수원, 1982), P.43.

가이익 추구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는 경제력을 중심으로 협력과 대립의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특히 지역간의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세계경제의 지역블록화[65] 움직임은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개편되고 있는 신 국제질서에 있어서 새로운 갈등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소 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지되어왔던 냉전체제의 붕괴로 양진영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상태는 해소 되었지만 세력균형자로서 두나라의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 인종적 또는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지역분쟁의 발생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일부 부정적 사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색은 국가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신 국제질서의 기류는 남북한 관계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들어 독일통일이 상징하듯 국제적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경제관계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는등 남북 통일에 유리한 객관적 환경이 조성되자 남한정부는 월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하여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게된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을 계기로 지속적인 북방정책을 전개하여 괄목할 성과를 얻게된다. 한국은 1989년 2월 헝가리와의 정식수교를 시작으로 동구권 국가들과의 수교를 비롯한 정치경제적 교류협력을 1990년 초까지 대부분 이루었고 소련과의 수교(1990. 9)를 포함하여 1992년 8월 중국과도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그동안 북한과 정치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공산국가들을 상대로 전개한 북방정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북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러시아를 비롯하여 동구 및 중국으로부터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66]

한편 북한은 이와같은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내부의 경제적 난관에 직면

65) 대표적인 경제블럭화의 예로는 유럽의 유럽공동체(EC), 미국을 중심으로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아시안 자유무역권(AFTA)과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APEC)등을 들수 있다.

66) 안병준,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통일〉, (법문사, 1994), p.216.

하게되자 그동안 사회주의 진영에 의존해왔던 대외정책 노선을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남북한간의 점증하는 국력격차[67]로 체제유지에 대한 불안을 갖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일례로 북한 당국은 한국의 유엔가입이 확실시되자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68] 하면서도 서둘러 유엔가입신청을 제출함으로써 남한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1991.9.17)이 실현되었다. 이는 북한이 강경하게 주장해오던 '두개의 조선화' 반대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자신들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남한정부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따라서 남북한은 1992년 2월 역사적인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서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분단이후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남북간의 적대적 대립관계는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는 국제적 고립탈피와 체제보존이라는 북한의 입장과, 북방정책의 성공과 더불어 남북간의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하여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남한정부의 이해가 일치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다.

2) 統一論議의 傾向

2차대전 이후 반세기동안 반목과 대립으로 점철되었던 전후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국가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모색되는 세계적 화해분

67) 남북한GNP 및 1인당 GNP추이 비교, 통일원, 〈남북경제현황비교〉, (1991), P.38. 재인용

GNP 및 1인당 GNP		1988	1989	1990	1991	1992
GNP (억달러)	남	1,692	2,112	2,379	2,817	2,945
	북	206	240	231	229	211
1인당 GNP (달러)	남	4,040	4,994	5,569	6,518	6,849
	북	980	987	1,064	1,038	943

68) 북한은 "남한의 단독 유엔 가입이 방임될 경우 유엔무대에서 전조선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들이 편견적으로 논의될 수 있고 그로부터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유엔가입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노동신문, (1991.9.18), 유석렬, 〈남북한 통일론〉, (법문사, 1994), p.314. 재인용

위기 속에서 남한정부는 적극적인 북방정책과 함께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한반도의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편 제도권 야당 및 재야세력들은 국내의 민주화 발전에 따라 다양한 통일논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면서 1970년대와는 달리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실천적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국제적 신냉전분위기하에서 한동안 실질적인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자 남한정부는 1981년초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제의함으로써 남북이 분단된 이래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제안은 비정치적 교류뿐 아니라 정치지도자들의 통합의지가 통일에 중요한 요소라는 새로운 인식하에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의에 이어 정부는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발표(1982.1.22)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통일헌법 마련을 위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둘째,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여 그동안 남북간에 존재하였던 비정상적 관계를 청산하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제안하고 있다.[69] 동 제안은 북한당국에 의해서 분단의 법적 고착화로서 '두개의 조선화 책동'이라는 비난과 함께 거절되었다.

1980년대 중반 들어서 남북한은 국제정세의 호전과 더불어 남북대화 및 접촉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나 곧이어 북한은 남한의 팀스피리트 훈련실시를 이유로 각종 남북회담을 모두 연기시킴으로써 사실상 남북대화는 중단되었고 이후 북한은 군축문제를 포함한 정치군사회담의 우선적 개최를 주장하면서 남북대화의 속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미·소화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국내에서 민주화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각계각층에 의한 가열화된 통일논의가 남한사회내에서 분출하게 되었다. 새로 등장한 노태우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통일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88년 이른바 '7.7선언'으로 불리우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천명하고 새정부가 추진해 나갈 통일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

69)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국토통일원, 1988), PP.177-179.

다. 이 선언에서 노태우정부는 남북쌍방이 서로를 경쟁이나 대결의 상대로 보지 않고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화합할 수 있는 협력의 상대자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의 미국 및 일본등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에 협조하며 대신 남한은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70] 이는 북한을 고립시켜 결과적으로 북한내부의 변화를 꾀한다는 종래의 소극적 태도로부터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등장시킴으로써 통일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통일외교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서 남한 정부는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노태우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의 기본노선은 1989년 9월 11일 발표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 구체화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71] 첫째, 남북대화의 추진으로 신뢰회복을 기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둘째, 남북의 공존공영과 민족사회의 동질화, 민족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거쳐, 셋째,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인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정치적 통합여건이 성숙되면 단일민족국가를 이룰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일의 중간단계로 설정된 남북연합은 남북한 두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복합국가형태의 과도적 통일체제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으로부터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주고 있다.

한편 오랫동안 남한사회를 지배해온 권위주의체제가 강력한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위축되어지고 민주화 이행시대로 접어들게 되자 잠재해 있던 국민들의 통일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이러한 요구들을 수렴하여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각계각층이 모두 북한과의 접촉대화를 가능토록 하였다. 그러나 대북 교섭과 접촉 통로만은 정부로 일원화시킨다는 접촉교류의 원칙

70)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위의 책, PP.383－391.
71) 통일연수원, 〈1994 통일 문제 이해〉, (통일연수원, 1993), PP.183－184.

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즉 "통일논의는 헌정질서에 기초를 두고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정책의 수행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통일논의의 한계수준을 설정하였다.[72] 정부가 통일논의의 개방정책을 표명하자 제도권 야당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통일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면서 통일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통일문제에 관한 이러한 관심은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규제에서 풀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등에 의한 새로운 보수야당의 출현으로 더욱 활성화 되었다. 다음은 이들이 대표로 있던 당시 주요 3당의 통일방안을 개략한 것이다.[73]

*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의 통일방안 : 초기에 주장한 '6원칙 5단계'방안은 주로 통일의 여건조성에 주력하는 정책제시에 불과하였으나 1989년 이후 '3원칙 3단계'로 압축하여 통일민주당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내용을 보면 자주·민주·평화의 3원칙과 첫째, 평화체제 구축단계, 둘째, 구체적 민족통일 준비기로서 남북한의 연합기구 구성단계, 셋째 1민족 1체제 1국가의 민족통일 단계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바 특히 통일의 중간과정으로서 국가연합의 단계를 강조하고 있다. 통일민주당의 통일3원칙과 통일 과도기로서의 국가연합은 3당합당(1990.2.15)이후 노태우 정부의 공식적 통일안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수용되었다.

* 평화민주당 (총재 김대중)의 통일방안 : 1970년대 초반부터 김대중 총재가 주장해 오고 있는 3단계 통일론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평화민주당의 '공화국연방제'방안은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으로서 특히 공화국연방이란 완전한 통일국가를 형성하기 이전 1연방 2체제의 원칙에 의하여 남북은 각기 독립정부로서 기능을 하면서 중앙에는 다분히 상징적인 통일기구를 수립하는데 바로 이러한 과도기적 중간형태를 의미한다.

이와같은 공화국연방제방안은 이후 공화국연합제로 수정되어 통합(1991.9.16) 결성된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

72) 국토통일원 편, 〈민족통일로의 전진〉, (국토통일원, 1989), p.129.

73) 민병천, 〈신통일론〉, 앞의책, PP.144－150.

*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의 통일방안 : 과거 공화당의 정강정책의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신민주 공화당의 통일방안은 다른 야당과는 달리 매우 보수적인 성격을 보인다. 동 방안의 기조는 〈선평화정착 후통일〉로 정치군사적 문제보다는 비정치적 문제부터 우선 처리하여 통일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입장으로서, 남북한의 평화정착, 남북간의 대화 및 교류확대, 남북상호협력체제의 구축, 민족동질성회복, 남북통일의 5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자 재야 및 일부 학생세력들은 비정부차원의 통일논의를 전 사회에 확산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임수경의 평양축전참가등에서 보여주듯이 자신들의 통일운동을 남북교류라는 실천적 차원에서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그동안 이합집산의 현상을 보이면서 뚜렷한 통일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혁신정당들도 한반도의 중립화 및 연방제 주장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통일방안을 개진하기 시작하였다. 대체적으로 7.4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되었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을 추종하고 있는 이들 정당의 통일정책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재야에서 주장하고 있던 민중주체의 통일론을 제도권 정당으로 흡수하였다는 점과, 둘째, 대부분의 통일방안이 정부 및 보수야당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던 통일과정에 있어서 단계적 방법을 수용하고 있으며, 셋째, 군사력의 감축, 미군의 철수,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등 진보적 성격의 통일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74]

한편 이 시기의 주요 재야통일방안으로는 문익환, 백기완,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등의 방안이 있다. 문익환 목사는 1970년대와는 달리 구체적인 '연방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제1단계에서는 구속력이 약한 국가연합의 단계로서 군사외교문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제2단계에서 연방정부가 구성되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며 남과 북은 현사회경제체제를 유지하며 남북두단위의 자치제를 실시한다. 제3단계에서는 남북 두단위로 실시되던 자치정부가 도단위로 세분화된다는 연방제안을 주장하고 있다.[75] 백기완씨는 주체적 성격이

74) 민병천, 〈신통일론〉, 앞의책, p.157.
75) 국토통일원, 〈정당·단체·개별인사 통일논의〉, 앞의 책, PP.16－17.

강한 민중해방통일론을 제시하면서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제1단계는 민중주도로 민중정부를 수립하며 제2단계에서는 국가연합적 성격의 민족연립정부를 수립하고 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단일민족국가를 수립한다고 제시하고 있다.[76] 또한 한국기독교회협의회(KNCC)는 7.4남북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원칙을 수용하고 여기에 인도주의 원칙과 민중의 참여 우선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남북교류, 신뢰구축, 평화협정, 미군철수, 남북간 상호감축, 핵무기철거, 외세간섭배제등을 남북당국에 제언하고 있다.[77] 이는 구체적 통일방안이라기 보다는 통일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시기에 있어서 혁신정당 및 재야인사들이 제기하였던 통일방안들은 단계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실현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통합과정으로 정치 군사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논의의 기본적 성향은 문민정부시대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마. 統一時代 準備期(1993－현재)의 統一論議

1) 狀況與件

냉전체제 붕괴이후 전세계로 확산되는 국제적 화해분위기에 따라 한반도 주변정세도 비교적 안정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야기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이 지역에서 냉전의 기류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등장한 남한의 문민정부는 남북간의 잔존하고 있는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남북정상회담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지난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통일환경의 기반조성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 사후 권력승계과정에서 갑자기 발생할지도 모를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의 예측에 따라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

76) 기사연 통일연구위원회,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 (민중사, 1994), p.108.
77) 조정원, 〈남북한 통합론〉, (희성출판사, 1989), p.120.

1990년대 들어 국제사회에서는 경제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유럽통합[78]으로 상징되는 지역별 블록화 추세속에서 유럽, 일본, 중국이 지역 강대세력으로 부상하는등 국제질서의 다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변화에 직면한 미국은 대외적으로 배타성이 강한 유럽과 아·태 지역간의 상호견제와 협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지도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사이에 보다 광역적이고 개방적인 경제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냉전체제 붕괴이후 동서간의 이념대립이 약화되고 국제적 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프전쟁과 보스니아 분쟁에서 보는 바와같이 양극체제하에서 잠재되어 있던 민족 및 종파간의 분쟁과 지역분쟁이 새로운 불안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소련 해체후 미국은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압도적인 군사적 주도권을 향유[79]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분쟁이 초래할 수 있는 신국제질서의 저해 위험성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지역분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캄보디아, 소말리아, 보스니아등 분쟁지역에 유엔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활동은 평화유지군의 구성문제와 재정비용부담문제 그리고 이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견해차이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이 지역분쟁의 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새로운 국제질서 상황에서 분쟁의 위험성은 한반도 지역에서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 지역에서의 분쟁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심각한 경제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체제생존유지의 수단으로 핵개발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보유는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정권에 정치적, 심리적 안전판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남한의 성공적인 경제정책 및 북방정책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현격한 국력열세 상황에서 핵개발은 남한보다

78) 1993년1월1일 경제시장통합을 이룬 유럽공동체 국가들은 브뤼셀특별정상회담(1993.10)을 개최하여 화폐통합뿐만이 아니라 정치.안보분야의 통합도 추진될수 있도록 유럽연합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발표하였다.

79) 이상우, 〈함께사는통일〉, (나남, 1993), p.85.

우월한 군사력을 일시에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직접적인 접근을 가능케 해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1993.3.12)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북·미관계의 핵심사안으로 대두케 하였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에서도 한반도의 핵문제는 미·북한간의 문제라고하여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함으로써 미국은 1993년 6월과 9월 두차례 북·미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휴전이래 북한과의 단독회담을 거부해 오던 미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북·미간의 직접협상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탈냉전시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세계전략의 기조로 삼고 있는 미국이 1995년 NPT 연장을 앞두고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약점을 갈파한 북한이 미국과의 대등한 협상을 촉구하자 어쩔수 없이 이를 수용한데서 기인한다.[80]

양차회담을 통하여 미국은 북한을 일단 NPT 체제에 잔류(탈퇴의 잠정적 유보)시키고 IAEA의 핵사찰 활동과 남북간 특사교환 논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북·미간의 협상을 실현시키는 외교적 성과[81]를 거둠과 동시에 경수로 지원문제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얻어냄으로써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경제협력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전개된 북·미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전제로 핵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북한은 남북간의 특사파견을 위한 실무회담을 결렬시키고 IAEA의 일반사찰 활동을 제한시키는 등 핵개발 의혹해소를 위한 실질적 작업을 저지시켰다. 뿐만아니라 3단계 북·미회담이 예정된 상태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5MW원자로의 연료봉 교체작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북·미협상 효과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에 미국은 유엔을

80) 길정우, "미·〈김정일북한〉 수교의 조건", 〈신동아〉, 1994.8 (통권 419호), p.270

81) 북한대표 강석주는 노동신문을 통하여 "최근 발표된 미북한 공동성명이 40여년간 지속돼온 쌍방의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게 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직접협상 통로를 개설한 것에 대해서 만족을 표명한 바 있다. 〈조선일보〉, 1993.6.20, 1면

포함한 국제 공조체제를 가동하여 대북제제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북한은 IAEA의 탈퇴를 선언(1994.6.13)하였다. 이와같은 북한의 강경대응에 직면한 미국은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협상 또는 제재라는 양자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으며 대북제재에 확실한 판단[82]을 내리지 못한 미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미국은 북·미간의 양측 최고 통치권자의 솔직한 의견교환이 궁극적으로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절차임을 인식하고 대화창구로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중재자로 선임하여 그를 방북(1994.6.15)케 함으로써 당시 극도로 경직되었던 남북한 관계를 완화시키고 파국직전의 북미협상을 재개토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김영삼정부는 카터의 방북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북대화정책을 추진하여 남북한은 1994년 7월 25일 평양에서 분단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1994.6.28)하였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그동안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장애가 되었던 북한의 핵문제와 이산가족교류 및 남북경협문제들을 논의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한 통일환경 조성에 주력할 뜻을 표명함과 동시에 남북정상의 만남 그자체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는등 남북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83] 이와같이 남북간의 긴장상태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자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포함한 북한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북한의 핵개발계획 포기를 조건으로 북·미간의 연락대표부 교환설치를 포함하는 경제·외교적 유인책을 담은 포괄적 해결방안을 가지고 1994년 7월 8일부터 제네바에서 3단계 북·미 고위급 회담을 시작하게된다.[84]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십여일 앞두고 돌연발생한 김일성사망(1994.7.8)은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로 고조된 한국민의 통일분위기에 크나큰 당혹감을 제공하였

82) 당시 미국은 대북제재를 선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강경한 반발과 함께 러시아로부터 제재를 지지하는 확실한 보장을 얻지 못하였으며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못한 상태였다. 길정우, "미·〈김정일북한〉 수교의 조건", 〈신동아〉, 1994.8 (통권 419호), PP.278-279.

83) 동아일보, 1994년 6월 25일, 5면

84) 동아일보, 1994년 7월 8일, 3면

으며 이를 준비하던 남한정부는 김일성 사후 북한 내부체제의 변화 및 이에따른 남북관계의 영향등을 감안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은 3단계 북·미회담 개막직후 발생한 김일성 사망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의 조의표명 및 남북정상회담의 재개최 희망등 북한에대한 호의적 태도를 보이면서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대북한 관계개선 및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 장례이후 북·미간의 3단계 고위급회담은 한국측의 우려[85]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진척되어 1994년 10월 21일 북한과 미국은 핵협상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북한을 NPT 체제에 잔류시키는데 성공하고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개설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서방세계로의 접근이 가능케 되었으며 또한 김일성 사후 내부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

북·미 핵회담에 의한 핵문제 해결이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남한 정부는 이후 새롭게 전개될 동북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대중국 및 러시아 정책을 보다 실질적 협력관계[86]로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더불어 김영삼 정부는 북·미 핵협상타결이후 북한의 핵협정내용 성실 수행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김일성 사후 장기간동안 공식적 후계체제가 등장하지 않고있는 북한내부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모색 및 남북경제협력방안제시등 남북간의 협력체제 확립을 위한 제반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

85) 한국측의 우려는 미북합의 내용중 특별사찰에 관한 분명한 언질이 없어 북한의 과거핵에 대한 투명성 보장이 어렵고 북미간의 관계개선이 예상보다 급속 진전되고 있으며, 또한 경수로 건설 지원에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데 연유한다.

86) 북미 핵협상 타결후 남한정부를 배제한채 미국과 단독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북한측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 중국은 과거 정전위원회에서 중국측 대표단을 철수하는등 북한측 입장에 동조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북한 양국간의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있다. 조선일보, 1994년 11월 5일, 1면

2) 統一論議의 傾向

김영삼정부는 민주화에 따른 문민정부의 정통성과 월등한 대북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과감한 대북정책을 전개하였으나 돌연 발생한 김일성의 사망과 북한핵문제의 국제적 이슈화로 문민정부의 대북정책은 잠정적으로 장애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북·미핵협상에 의해 북한의 핵문제가 일단 해결되자 김영삼정부는 민족 공동체의 동시적 발전이라는 입장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제시하는 등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체적 작업으로서 법·제도 개선문제 및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흡수통일논쟁과 더불어 다양한 계층에 의해서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동시에 김일성 조문 문제를 계기로 남한사회내에서 이념논쟁이 재연되기도 하였다.

'신한국 창조'의 기치를 내걸고 1993년 2월 25일 출범한 김영삼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정책 추진을 선언하고 민족공영의 입장에서 북한의 고립화나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촉구하면서 전향적인 대북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정부출범 3주일만에 미전향 장기수인 이인모를 조건없이[87] 송환하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재개나 IAEA의 대북한 특별사찰 결의(1993.2.25)는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이며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적대행위"라고 비난하면서 NPT탈퇴를 선언하게 된다. 이는 핵확산을 금지하여 대량살상무기의 축소를 지향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로서 세계정세 및 한반도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남한정부는 IAEA의 핵사찰과 남북 상호사찰은 상호보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핵의혹이 해소되지 않는한 남북한간의 실질적 진전은 기대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핵

87) 이인모의 북송여부를 놓고 이전의 6공화국 정부에서는 납북억류 남한인사들과 상호교환이라는 조건제시를 검토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문민정부는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조건없이 그를 북송하였다. 정용석, "문민정부와 대북정책방향", 안보문제연구원, 〈통일로〉, 1993.11월호, p.18.

문제 해결이 남북관계 개선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하였다. 이후 남한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의 초점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간의 직접대화 및 유엔등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개발을 포기토록 하는데 역점이 두어졌다.

북한은 1단계 북·미고위급회담을 계기로 대미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핵문제를 대미접근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대미회담의 종속적 위치로 놓으려하는 전략을 구사하게된다.[88] 이에 남한정부는 한·미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협상자세로 남북대화를 진척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에 의해서 남북대화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문민정부 출범으로 대북협상여건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온 남북간의 화해·협력기조는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와해되고 한반도는 최악의 대결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북한의 핵문제로 한반도가 극도로 긴장되고 북·미핵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이를 타개하고자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게되고 남북양측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게되자 남북관계는 일시에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남한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남북간의 현안인 북한핵문제를 논의하여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한반도 통일을 위한 환경조성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런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고 김일성체제를 대상으로 전개된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은 수정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김일성 조문문제에서 비롯된 남한사회에서의 격렬한 이념논쟁[89]은 일부 집단에 의한 노골적인 친북성향의 표출등 사회불안적 요소를 만들었으며 남북정상회담개최 발표이래 급격히 고조되었던 통일지향의 사회분위기를 일시적으로 경직시켰다. 이에 문민정부는 뚜렷한 통일원칙을 제시하여 남한내부에서 일고 있

88)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 1993-1994〉, (1993), p.95.

89) 김일성사후 우리내부에 존재하는 이념적 집단에 대한 고발로 시작된 서강대 박홍 총장의 이른바 〈주사파 발언〉은 이를 비난하는 세력과 함께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때늦은 이념논쟁을 가열시켰다.

던 소모적 이념논쟁을 불식시키면서 동시에 김일성 사후 변화되고 있는 남북한 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를 고려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으로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제49주년 광복절 기념축사에서 김영삼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문민정부초기에 발표하였던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을 새롭게 점검 보완하고 기존 통일방안의 명칭[90]과 원칙등을 더욱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동방안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간의 이념 및 체제경쟁에서 공산권의 몰락으로 그 승패가 결정났으며 이는 한반도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역사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문민정부는 과거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통일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북한을 포용하며 민족공동체 전체의 자유와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통일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의 원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상호이념체제를 인정하자는 북한의 '고려연방제'와는 분명하게 선을 그음과 동시에 갑자기 도래할지도 모르는 통일에 대비해야 할 것을 언급함으로써 북한체제의 내부붕괴에 따르는 흡수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통일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흡수통일에 대한 논란은 독일통일 이후 남한사회내에서 통일비용문제와 결부되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 권력승계과정의 불투명성은 흡수통일론자들의 입지를 강화해 주고 있다.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논지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체제가 내부문제로 스스로 붕괴되는 경우 어쩔수 없이 흡수해야된다는 당위론적 입장[91] 둘째, 약한 체제는 강한체제에

90) 이는 종전의 〈3단계 3기조〉라는 명칭이 통일방안이라기보다는 정책추진의 방향이라는 측면이 강한데다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비해 상징성에서 약하다는 지적이 생긴데 따른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 1994년 8월 16일

91) 문민정부는 흡수통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북한체제의 자체붕괴등 흡수통일의 상황이 필요할때는 이를 거부할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조선일보〉, 1994년 8월 9일

의해서 흡수될수밖에 없다는 대세론적 입장[92] 셋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선호입장에서 흡수통일은 필요하다는 보수주의적 입장[93] 네째, 경제적통합방식의 하나로 흡수통일을 지지하는 입장[94] 등이 있다. 한편 위와같은 주장과 더불어 점진적 통일보다는 급속한 통일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연구보고서[95]를 바탕으로 통일비용부담 측면에서 흡수통일론을 제기하는 논의도 사회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반면에 일부 재야에서는 흡수통일론 주장이 위험한 냉전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쌍방은 누가누구를 먹거나 누가누구에게 먹히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타방에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96]에 따라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에서 흡수통일론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같은 시각은 남북간의 현체제를 유지한채 연방제로 통일하는 것을 자신들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보인다.

한편 흡수통일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남북한의 공존공영을 바탕으로 통일한국을 지향하고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한 문민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야기시켜온 북한의 핵문제가 북·미핵협상의 타결로 일단 해결되자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도 않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과감한 남북경협방안을 제시하는등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은 문민정부의 신속한 행보는 남북간의 화해협력관계를 조속히 정착시켜 다가올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원거리 포석으로 보인다.

---

92) 일례로 동독의 마지막 주북한 대사였던 마레츠키는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이와같은 논지를 전개한 바있다. 〈조선일보〉 1994년 9월 9일

93) 김영조교수는 대학 통일문제 쎄미나에서 바람직한 통일상의 체제유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편입을 통한 흡수통일을 제시하였다. 〈조선일보〉, 1993년 11월 16일

94) 1992년 대통령선거시 국민당의 정주영후보는 남한의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통합시키는 흡수통일론을 주장한 바있다. 〈경향신문〉 1992년 11월 13일

95) 산업은행의 〈북한경제와 통일문제〉라는 분석자료에 따르면 점진적 통일시에 600조원의 통일비용이 더든다고 제시하고 있다. 〈동아일보〉, 1994년 9월 9일

96) 김삼웅, 〈통일론 수난사〉, (한겨레 신문사, 1994), P.217.

2. 統合形態의 諸類型

가. 吸收統一論

흡수통일이란 한나라의 통치범위가 타체제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통치체제의 확장에 의한 통일형식을 말한다.[97] 즉 우세한 일방이 법률적 정통성에 근거하여 그렇지 못한 쪽을 정치·경제적으로 통합 지배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통일방법은 이론적 통일모델에 따른 절차적 과정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상대적인 힘의 우월성[98]에 의해서 결정되는 통일의 실천적 결과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선호되고 있다.

흡수통일론은 남북한이 각기 독립된 정부를 수립한 직후 정권의 정통성 대결의 입장에서 자주 거론되었으며 특히 한국전쟁 발생이후 무력통일의 가능성이 구체화된 시기에 있어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휴전이후 남북은 각기 자신의 모든 동원능력을 체제구축에 집중하게되자 흡수통일론의 입지는 상당히 약화되었다. 한편 최근에 들어와 독일이 흡수통일되고 북한내부체제의 붕괴 가능성과 더불어 남북간의 국력차이가 심화되자 국내외 일각에서는 다시금 흡수통일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99] 한편정부수립 이후 남한사회내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었던 흡수통일론적 입장의 대표적인 통일방안으로는 북한단독선거론과 북진통일론을 들 수 있다.

---

97) 이상우, 〈함께사는 통일〉, (나남, 1993), p.185.

98) 여기에서 힘(Power)의 우월성이란 단순한 군사력 또는 경제력의 우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정통성, 안정성 또는 합리성 등 체제내의 총체적 힘의 결집상태를 의미한다.

99) 남한의 통일문제 관련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최근(1992.5)의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중 45.8%가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로 통일이 이루워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상우, 〈함께사는통일〉, 앞의책, P.190. 한편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문가를 상대로 한 또다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68%가 한국주도의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아일보〉 1994년 8월 19일

1) 北韓單獨選擧論

분단이후 남북한이 각기 독립정부를 수립하게 되자 남한정부는 북한정권을 38선 이북의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있는 괴뢰정부로 인식하고 이를 반국가 불법단체로 규정하였다.[100] 이후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의 근간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데서 출발하며 '북한단독선거론'역시 이와 같은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의 초기 통일정책이 북한지역에서만의 단독총선거를 주장하게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의 결과였다.

남한정부 수립과정에서 통일에 관한 대북한 제의가 처음 나온것은 1948년 6월 제헌국회에서였다. 제헌국회는 후일 북한에서 선출될 국회대표들을 위하여 인구수에 비례한 의석수의 3분의 1인 100여석을 공석으로 남겨둔채 "북한동포는 우리와 같이 유엔결의에 의하여 자유분위기 속에서 속히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민중대표를 선출하여 국회로 보내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결의문'[101]을 채택하였다. 결의문 내용에서 보여주는 바와같이 이는 공석으로 남겨둔 한국의 국회의원석에 북한지역에서 선출한 대표들을 합류시킴으로써 완전한 통일국회를 수립하겠다는 의도로서 당시 대북정책의 기본성격이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남한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을 내외에 선포함과 동시에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으로 다음의 3개항을 제시하고 있다.[102]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규정에 따라 전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둘째, 선거가 보류된 북한에서 조속히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에 공석으로 남겨둔 100석의 의석을 채워야한다. 셋째, 북한수복은 북한동포들의 자발적 의사가 봉쇄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무력에 의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다.

---

100) 1948년 1948년 7월 17일 공표된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주권하에 있는 영토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101) 국토통일원, 〈민족통일로의 전진〉, (1989), P.42.

102) 국토통일원, 위의책, P.42.

이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한 것이며 또한 북한지역에서만의 총선거를 통하여 남한으로의 편입을 유도하는 공식적 통일방안의 제시인 것이다. 이후 남한정부는 북한정부 존재의 불법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유엔 감시하의 자유총선거를 통한 북한의 남한편입을 촉구하고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통일을 위해서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여 무력통일의 방법도 하나의 통일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같이 북한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갖고 있던 이승만 정부하에서 남북협상이나 평화통일론등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치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승만은 "통일을 위한 어떠한 시도에 있어서도 북한 괴뢰정권과의 협상은 공산주의의 묵시적 승인을 뜻하는 것이니 여하한 모욕적 협상도 있을 수 없다"[103]고 강조한 바 있다. 이승만 정부의 북한단독선거론 입장은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정부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게 되자 더욱 강화된다. 당시 남한의 외무장관이 유엔한국위원단 의장에게 보낸 공한에 따르면 "소련으로 하여금 북한의 괴뢰정권과 정당 사회단체를 해산하게 하고 남북간의 자유왕래를 보장함으로써 남한의 5.10선거와 같은 자유분위기속에서 북한도 동위원단의 감시하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설득할 것을 요청한다"[104]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완고하였던 이승만 정부의 흡수통일론적 북한단독선거론은 휴전직후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정치회담에서 미국을 포함한 참전연합국측의 강력한 권유로 남북총선거론으로 대체된 이래 북한단독선거론은 남한정부의 통일논의에서 제외되었다.

2) 北進統一論

북진통일론은 무력을 사용하여 북한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남한의 통치권을 북한지역에까지 확장시키려는 전형적인 흡수통일론적 입장이다. 북진통일론의 출발계기는 이승만 정부의 초기 통일정책에서 비롯된다. 즉 유엔감시하에 북한지역에

103) 외무부 외교연구원, 〈한국외교의 20년〉, (1967), p.23.
104) 외무부 외교연구원, 〈한국외교의 20년〉, 위의 책, pp.24－25.

서의 자유총선거를 북한이 거부할 경우 무력사용을 불사하겠다는 의사표명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남한정부의 선언적 성격의 무력불사론은 북한에의해 시작된 전쟁상황속에서 실천적 의미를 갖게되는 북진통일론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는 북한의 군사행동이 단순한 무력적 시위가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정책의 무력적 적용으로 해석됨으로써[105] 이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선택되어진 것이다.

전쟁초기 북한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상황이 미국과 유엔군의 개입으로 전쟁의 양상이 국제전으로 변화되면서 북한군의 군사적 우위가 점차 소진되기 시작하자 북한의 무력적 통일전략에 의한, 이른바 '민족해방전쟁'은 그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게된다. 반면에 초기 유엔군의 개입당시 전쟁이전상태로의 원상회복을 구상하였던 미국이 전쟁상황의 호전과 더불어 한반도의 완전수복을 시도하게 되자 남한정부의 북진통일론은 더욱 강력한 실천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은 반전되고 이후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되자 미국은 남한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휴전협상을 모색하게된다. 결국 분단을 극복하려는 무력적 통일방안으로 북한에 의해 시작된 한국전쟁은 연합국측과 북한측이 휴전협정에 조인함으로써 민족적 비극만 남긴채 한반도의 분단고착화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따라 이승만정부의 북진통일론도 그 실천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승만 정부는 휴전이후 무력적 방법의 실효성이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진통일론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합법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식시키는 동시에 반공주의에 입각하여 북한을 승공통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강조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진통일론이 갖고 있던 이와같은 정치적 생명력도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정권이 붕괴되자 함께 종식되어진다.

---

105) 이와같은 해석은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방송연설(1950.6.25)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완수해야 하며 독립된 단일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조국의 통일과 독립,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위한 전쟁의 수행은 정의로운 것이다." 조정원, 〈남북한통합론〉, (화성출판사, 1989), p.60. 재인용

나. 非武力 統一論

비무력 통일론은 남북통일이 민족의 긴급한 과제라 할지라도 분단극복 방법으로 무력이나 폭력이 개입되어서는 안되며 남북간의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1960년대 이후 남한사회내에서 공개적으로 표명되었던 모든 통일논의가 비무력 통일론 범주에 들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용하는 '비무력 통일'이란 남한사회내에서 무력적 방법이 하나의 통일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되어진 비무력 통일을 의미한다. 당시 남한정부가 표방하고 있던 북진통일론과 구별되는 비무력 통일방안으로는 남북협상론과 남북총선거론을 들수 있다.

1) 南北協商論

남북협상론은 분단초기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있던 미·소양국이 자신들의 영향력하에 각기 개별적인 단독정부수립 작업을 구체화시키자 김구 김규식등 민족주의 인사들에 의해서 제기된 통일논의이다. 특히 이승만을 중심으로 유엔을 통한 남한내의 단독정부수립운동이 적극 전개되자 이들 남북협상파는 단독정부수립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한편 민족자결적 입장에서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의 협상을 통한 통일정부수립을 적극 주장하고 이를 실천하기위해 남북협상을 제안하게 된다.

당시 이승만은 북한의 공산정권 수립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소간의 협의를 통한 통일정부수립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남한에 단독정부 수립을 강행하였다. 한편 미국 역시 한국문제 해결을 유엔에 위임함으로서 한반도 통일문제는 다시 국제문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내의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의 영원한 분열을 막기 위하여 남북간의 지도자들이 만나 솔직한 대화를 통하여 외세의 간섭을 제거하고 자주적 힘으로 통일과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게 되는 데 이러한 주장들이 남북협상을 성립시킨 계기가 되었다.

김구는 1948년 2월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한다'라는 성명을 내고 어떠한 위협

도 무릅쓰고 단정을 반대한다는 결의를 표명하면서 김규식과 함께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서한을 보내 '남북정치지도자간의 정치협상을 통하여 통일정부 수립과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에 관한 방안을 토의'할 것을 제의하자[106] 이에 대해 북한당국은 4월초에 평양에서 남북한 지도자 연석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당시 남한에서 남북협상을 구상하던 세력들은 협상의 파트너인 북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지못한 상태였다.[107] 이러한 정보부족은 그들로 하여금 협상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으며 동시에 협상의 실패를 출발 이전에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협상파들은 아무리 상대가 공산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민족적인 정열로서 그들을 대한다면 그들도 이쪽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과 협상함으로써 '백지위에 새로운 원칙을 세워' 통일정부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소박한 낙관론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 반면에 북한측의 입장은 분명한 것이었다. 즉 남북협상을 통하여 북한 공산당 노선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남한단정수립을 저지케 하여 북한정권의 유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

결국 남북협상을 통하여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저지하고 한반도에 하나의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남북협상파의 노력은 무산되고 곧이어 남북에는 각기 다른 두개의 독립정부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남북협상론은 일단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직접 다루고자 하였던 남북 협상론의 정신은 후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게 되는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에 의해서 그 맥이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南北 總選擧論

이승만정부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북한단독선거론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총선거론으로 대체되어진다. 사실 남북한 총선거론은 유엔이 한국

106) 이동선, "민간차원의 통일논의", 현대한국정치연구회편, 〈탈냉전의 민족통일론〉, (예진, 1993), P.3.

107) 이정식, "1948년의 남북협상", 양호민외, 〈민족통일론의 전개〉, (형성사, 1982), PP.266-268.

의 통일정부수립을 결의하였을때 이미 그 방법으로 제시된바 있었으나 당시 총선거 가능지역이었던 남한지역에서만 총선이 실시되어 일단 보류되었던 것이다. 이후 남한정부의 승공통일론적 입장에서 남북한총선거론은 한동안 거론되지 못하고 있었다. 휴전을 반대하였던 입장에서 남한정부는 한국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네바 국제 정치회담에 참석하기를 꺼렸으나 연합국측의 권유로 참가하게 되었다. 연합국측은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국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다음의 원칙[108]을 세우고 이를 관철하려고 노력하였다.

첫째, 유엔의 한국문제 취급의 권한과 자격을 인정하여야 하며, 유엔이 문제해결의 주동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한국 정부는 남북한 비례대표제에 따라 진정한 자유선거에 입각하여야 한다. 셋째, 유엔은 통일독립된 민주한국의 수립에 의하여 유엔의 사명이 완수될때까지 한국에 계속 잔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을 포함한 공산측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부정하면서 한국문제의 유엔으로의 이관을 거부하고 전조선위원회를 조직하여 통일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관장토록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면서 남한정부의 초기 주장인 유엔감시하의 북한에서만의 자유선거안을 거부하였다.[109] 이에 남한대표는 연합국측 각국대표들과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북한만의 단독선거안 대신에 유엔결의에 의거하여 유엔감시하에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동시 자유선거안을 포함하고 있는 '14개 조항의 통일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10]

가) 통일독립 민주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종전의 제 유엔 결의에 의거하여 유엔 감시하에 자유 선거를 실시한다.

나) 자유선거가 북한과 또한 남한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다) 본 제안 채택 후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라) 선거전후 및 선거기간 중 선거감시에 종사하는 유엔감시위원은 선거가 실시되는 전지역을 통해 자유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감시 및 조성

108) 국토통일원, 〈민족통일로의 전진〉, (1989), P.52.
109) 북한연구소, 〈북한외교론〉, (1978), P.385.
110) 국토통일원, 〈통일문제 관련자료집〉, (1987), PP.170-171.

할 수 있도록 행동, 언론의 자유를 향유한다. 현지 당국은 감시요원에 대해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마) 선거 전후 기간 중 입후보자·동선거운동원 및 그들의 가족은 행동·언론 및 기타 민주제국에서 인정되고 보장되는 인권의 완전한 자유를 향유한다.

바) 선거는 비밀선거 및 일반 성인 선거권의 기초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사) 전한국의회의 의원 수는 전한국의 인구에 정비례한다.

아) 선거지구의 인구에 정확히 비례되는 의원 수를 할당하기 위하여 유엔감시하에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자) 전한국의회는 선거 직후 서울에서 개회한다.

차) 하기문제는 전 한국의회의 개최 후 제정되어야 한다.

(a) 통일한국 대통령의 신임 선출여부

(b) 대한민국 현행헌법의 수정여부

(c) 군대의 해산문제

카)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전한국의회가 수정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타) 중공군은 선거실시일보다 1개월전에 한국으로부터 철수를 완료한다.

파) 한국으로부터 유엔국의 점진적 철수는 선거실시 전에 시작할 수 있으나 통일정부의 전한국에 대한 효과적 통치가 성취되고 이것을 유엔이 인준하기 전에 완료하여서는 안된다.

하) 통일독립 민주한국의 통일과 독립은 유엔이 보장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당시 남한정부로서는 획기적인 남북한 총선거론을 제시하였으나 공산측은 즉각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111] 결국 남북한 쌍방의 의견대립으로 회담이 교착상태가 되자 남한정부 및 연합국측은 유엔의 권능인정과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실시를 재천명하면서 회담을 종결하였다.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제기되었던 남북한총선거론은 이승만정부의 승공통일론 주장에 의해서 한동안 퇴색되었으나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자 남북한총선

111) 공산측은 동제안에 대하여 "이제안을 수락할 경우 이는 제국주의 간섭에 의해 북한을 남한정부에 종속시키는 결과가 될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다. 조정원, 〈남북한통합론〉, 위의 책, P.71.

거론은 이후 남한정부의 통일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정착되어진다.

다. 猶豫論的 統一論

유예론적 통일론은 통일방안의 구체적 형태들을 유형화시킨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상황여건하에서 통일논의의 진행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려는 통일론을 지칭한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통일론의 범주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논의의 한 형태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논의들이 궁극적으로 통일지향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장기적인 통일전략의 일환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사회내에서 제기되었던 선건설 후통일론과 남북 평화공존론등을 유예론적 통일론으로 볼 수 있다. 물론 1970년대 이후 일부 재야인사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선민주 후통일론도 유예론적 통일론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이들은 대체로 민주와 통일을 동일한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1) 先建設 後統一

이승만 정부의 실현 불가능한 북진통일론은 4·19혁명을 거치면서 보다 현실적인 '선건설 후통일론'으로 전환되었다. 상대적으로 통일문제에 역점을 두었던 이승만 정부와는 달리 민주당 정부는 통일문제보다 국내경제 건설에 정부정책의 역점을 두었다. 당시 대남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이 강력한 통일외교 전략을 구사하자 열세적 입장에 있던 민주당 정부로서는 소극적인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유예론적 통일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장면 총리는 국민에 대한 그의 첫연설에서 "제2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우리의 국민경제 건설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112]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 우선적 정책을 표방하였다.

이와같은 민주당 정부의 '선건설 후통일' 정책은 당시 두가지 현실상황을 반영

112) 조정원, 〈남북한 통합론〉, 위의 책, P.79. 재인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낙후된 남한의 경제재건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따라서 장면정부는 경제재건없는 통일운동은 비현실적이며 그 결과 또한 긍정적이지 못할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는 북한에 대한 남한정부의 열등의식에 따른 체제불안감에서 연유한다. 4.19혁명이후 통일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분출되고 또한 당시 경제력에서 우위에 있던 북한이 강력한 통일외교 전략을 전개하자 민주당 정부는 이에대한 체제수호적 입장에서 통일유예론적 '선건설 후통일'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장면정부는 당시 북한의 남북연방제 제안등 대남 통일외교공세에 상당히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113] 이처럼 대북열세적 입장에서 장면정부가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남한의 경제력을 향상시켜 북한과의 대등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통일유예론적 입장의 '선건설 후통일론'은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장악한 군사정부에 의해서도 그대로 계승된다. 혁명정부는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하고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을 배양한다는 혁명공약을 천명하고 1962년을 기점으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하여 조국 근대화를 위한 경제개발에 착수한다. 이는 당시의 내외여건하에서는 통일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먼저 실력을 배양한 다음에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논리이다. 이와같은 입장은 민정이양후 제3공화국정부에서도 그대로 지속된다. 1966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조국근대화야말로 남북통일을 위한 대전제요 중간목표이다. 통일의 길이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자립에 있는 것이라면 자립은 통일의 첫단계가 된다."고 언급함으로써 전형적인 유예론적 통일관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 국제적 냉전구조 및 남북간의 군사적 대립상태에서 남한정부는 우선적으로 분단체제를 방어해야 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남한 정부의 경제우선정책은 두차례

113) 일례로, 김일성은 1960년 8월 14일 해방 15주년 기념보고에서 외세간섭없는 남북총선거를 제안하면서 덧붙여 만약 남한당국이 남한이 공산화 될것이 두려워 아직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드릴수 없다면 그 과도적 대책으로서 남북한 연방제를 실시하자면서 적극적인 통일공세를 전개한 바있다. 정용석, 〈분단국 통일과 남북통일〉, (다나, 1992), P.181.

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대북한 경제적 열세에서 벗어나게 되어 남한은 1960년대 후반부터 남북간의 새로운 관계모색기로 이행될 수 있는 상황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결국 남한 정부의 통일유예론적 선건설 후통일론은 북한과의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다루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南北韓 平和共存論

평화공존론은 평화체제로의 현상유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예론적 통일론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남북평화공존론은 통일보다는 평화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평화공존론은 선건설 후통일론과는 달리 통일과도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유예론이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오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크게 변화되었다. 즉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이른바 4강체제라 불리는 미국 소련 중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 새로운 힘의 편성과 그에 따른 이들간의 데탕트는 한국문제와 관련된 국제환경을 극적으로 개선시켰다. 이와같은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속에서 한국정부는 남북간의 소모적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대북정책을 공표하게 된다. 이 당시 발표된 통일정책의 대부분은 남북한 평화공존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남한정부가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표명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비롯된다. 그는 북한이 무력적화통일론을 포기하고 남한과 당분간 공존할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과 평화적 선의의 경쟁을 제의하였다. 이는 남한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북한정권을 인정조차 않던 남한정부가 북한과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었다. 남한정부의 이와같은 태도변화는 닉슨독트린 이후 미국의 힘이 아시아로부터 후퇴하게 되자 자신의 체제는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체제안보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며 또한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으로 북한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갖고 대북정책을 세울 수 있었던 데 기인한다. 결국 이러한 남한정부의 평화공존론적 시각은 '7·4남북공동성명'의 배경이 된다. 1971년말부터 시작한 적십자회담과 비공개 접촉의 결과로 남북은 한반도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합의문서인 7·4남북공동

성명을 발표하게된다. 공동성명에서 발표된 조국 통일원칙은 다음과 같다.[114]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세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남북간의 합의에 따라 통일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남북조절위원회가 조직되고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회담의 폭을 넓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남한측의 주장과 모든 부문을 동시에 해결하거나 정치군사적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북한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시작된 남북간의 대립은 3차에 걸친 본회의후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중단성명으로 회담은 끝내 중단(1973.8.28)되고 말았다. 이는 통일문제 해결에 앞서 남북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관계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남한정부는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당시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 남북간의 평화정착을 우선시하는 대북정책을 전개하게 된다.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동시가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외교정책(6.23선언)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을 정치실체로 인정하고 남북한 두체제의 평화적 관계를 정립하여 우선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결국 평화정착 위에서 통일을 지향하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유예론적 통일론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 機能主義的 統一論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남북간의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

114)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1988), P.55.

으로 제거하자"[115]고 선언한 이래 기능주의적 통일론은 남한사회의 각계각층으로부터 각광받는 통일논의가 되었으며 또한 남한정부 통일정책의 이론적 배경이 되어왔다. 기능주의적 통일론이란 원래 국제정치학의 통합이론에서 발전한 기능주의론[116]을 한반도 통일문제에 적용하여 만든 이론적 모델을 지칭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비적대국가간의 통합을 모색하는 서구의 통합이론이 적대적 대립상태에 있는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기능주의에서 제시하는 바와같이 국가간의 갈등을 일으킬수 있는 정치적 문제의 해결보다는 낮은 차원의 비정치적 영역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궁극에는 정치적 통합까지 이룰수 있다는 기능주의의 견해가 남북간의 통일문제를 다루는데 유용한 것이라는 판단에서 우리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능주의 통합이론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남북한 통일논의에 있어서는 이론상의 엄격성은 와해되어 기능주의와 관련되는 유사통합이론과의 구분은 모호해진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기능주의적 통일론이라는 범주안에 기능주의 통일론, 신기능주의 통일론, 단계적 기능주의 통일론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것을 대표하는 통일론으로서 정부통일론을 중심으로 남북한 교류협력론, 민족화합민주통일론, 그리고 민족공동체 통일론을 선정하여 포함시켰다.

1) 南北韓 交流 協力論

1970년대 이래 남한 통일정책의 특징은 평화정착의 바탕위에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기능주의적 입장의 교류협력론을 강조하고 있다. 남한정부는 이와같은 교류와 협력의 실현은 남북간의 평화공존체제의 구체적 표현이며 남북한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통

115)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1988), P.450.

116) 기능주의 통합이론을 제시한 데이빗 미트라니 (David Mitrany)에 의하면 두사회가 상호의존관계가 되면 공통의 이익이 발생하고 공통의 이익은 두사회의 통합촉진의 결정적 요인이 되므로 비정치적 분야에서부터 교류를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정치적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우,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남북관계 개선방안연구〉, (국토통일원, 1976), P.27.

일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남한정부의 이와같은 입장은 제3차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에서 남한 대표단이 제안한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대표단은 남북조절위원회의 경제분과위원회와 사회문화분과위원회를 조기에 출발시킬 것을 제의하면서 구체적인 세부안으로 실업가 및 과학기술의 교류,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학술문화교류, 고고학과 국사 및 국어분야에 있어서의 공동연구, 국제경기의 남북단일팀 조직등을 제의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여주듯이 남한정부는 정치적 분야에서 보다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에 의한 점진적 통일이라는 기능적 접근방식을 강조하고 있다.[117]

남한정부의 평화공존을 바탕으로한 기능주의적 교류협력론의 주장은 1974년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선언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동 선언에서 주장한 3대기본원칙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118]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간에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아래 남한정부는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점진적인 통일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즉 상호화해와 평화공존의 상태를 정착시킨 후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면 결국 정치통합으로 발전된다는 낙관적인 통합이론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남한정부의 점진론적인 통일정책은 기능주의 이론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보수적 성향[119]과 비정치적 문제해결로 정치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낙관론적 견해에 대한 이론적 의문제기와 함께 북한을 포함한 국내외

117) 김학준, "1970년대의 통일논의", 양호민 외, 〈민족통일론의 전개〉, (형성사, 1982), P. 363.

118)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1988), P.469.

119) 체제의 자기보존적 성향을 감안하여 전체적이고 급격한 통합방법을 지양하고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치적 통합을 추진하려는 기능주의의 경향을 이론의 보수성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의 비판세력으로 부터 통일을 포기하는 분단고착화 정책으로 비난받기도 하였다.

2) 民族和合 民主統一論

남한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와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을 제의(1981. 1. 12)한데 이어 1981년 6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제의하는 등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의는 1970년대의 기능주의적 통일론에 대한 일부 수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1970년대 평화체제의 정착과 교류협력 확대가 정치적통합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기능주의론적 낙관론에 따라 정치분야의 노력을 등한시했던 남한정부는 비정치적 교류 뿐 아니라 정치지도자들의 통합의지가 통일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신기능주의적 인식[120] 아래 정상회담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신기능주의 접근법은 남한정부가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1982년 1월 22일 발표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수용되었다.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21] 첫째, 남북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민족의 민주·자유·복지의 이념을 추구하는 통일헌법을 마련하여 이를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공표한다. 동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완성한다. 둘째, 통일을 이룩할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한다. 셋째, 위와같은 문제를 해결할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개최한다.

동 방안은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에서 나타난대로 남북간의 평화공존체제를 확립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기능주의적 요소를 포함하는

120) 대부분의 신기능주의론자들은 정치통합을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비정치적 분야의 정치적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상호의존은 부분통합 기구들을 지원해주게 되며 그것은 결국 정치적 통합과정에 유용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조정원, 〈남북한 통합론〉, (희성출판사, 1989), PP.137－146.

121)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1988), PP.481－485.

것과 동시에 이와같은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이전의 제안과는 달리 정치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한정부의 이와같은 신기능주의 통합방식은 이후 사회개방, 교류협력 및 긴장완화의 추진을 위한 '20개 시범실천 사업'의 제안, '남북한 당국 및 정당 사회단체 대표회의' 제의, '남북국회회담' 및 '남북경제회담' 제의 등 일련의 제안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

3) 民族 共同體 統一論

1980년대 후반이후 나타난 남한의 통일방안의 특징은 북한을 경쟁상대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동반자로서 민족공동체 안으로 포용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남북 통일국가의 수립이라는 완전한 통합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계적 과정을 중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기능주의 통합론의 특징의 하나인 단계적 접근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 갈퉁(Johan Galtung)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정부는 통일을 "2개의 존재에서 하나의 존재로의 도약이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개의 단계가 개입돼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122] 이는 남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방안이 단계적 기능주의 입장임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기능주의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수용하여 제시된 통일방안이 1989년 9월 발표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하에 단계적 통일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동 방안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123]

첫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즉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여 민족의 공영을 추구함으로써 통일된 근대민족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기본명제가 내재해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즉 북한은 민족의 일부로 구성된 정치적 실체로서 상호신뢰와 화해 및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민족공동체

122) 김학준, "1970년대의 통일논의", 양호민외, 〈민족통일론의 전개〉, 앞의 책, P.364. 재인용.
123) 신정현, "한민족공동체의 실현방안", 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과 제도화 연구〉, (1991), PP.77-80.

형성의 동반자로 인식한다.

셋째, 남북한이 완전한 통일국가를 수립하기까지 그 목표를 지향하는 중간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통일을 지향하는 중간단계에서 남북간의 상호 협력과 공동번영을 도모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의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동 방안은 민족사회의 통합을 통해 정치적 국가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의 바탕위에서 상호대결적이고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동반자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나가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당국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창출하였다. 한편 한민족공동체방안의 이와 같은 정책기조는 문민정부의 통일방안에 전반적으로 수용되었다.

문민정부 출범초기에 발표되었던 김영삼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3단계 3기조'방안은 그후 김일성 사망에 따른 기존 남북관계의 중요한 통일환경변화에 따라 점검 보완되어 1994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명칭으로 발표되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노태우정부의 통일방안이 갖고 있던 기본골격을 유지한 채 강화된 단계적 기능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동 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아래 화해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3단계 통일론이다. 특히 강조되고 있는 남북연합의 단계는 정치적 통합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남북간의 제도화된 연합기구들을 통해 민족공동생활권 형성을 추진하고 국가통합을 위한 방법들이 점차 구체화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통합이론가인 조셉 나이(Joseph Nye)가 신기능주의 입장에서 지적한 상호의존 및 상호공동체 의식과 공동의 의무감을 갖게 되는 정치통합의 과도적 단계를 의미하게 된다.[124]

법제도적 측면에서 볼때 남북연합은 통일국가가 실현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남북한 두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복합국가형태의 과도적 통일체제이다. 남북연합

124) 조정원, 〈남북한 통합론〉, 앞의 책, P.139.

은 1민족 2국가를 의미하는 엄격한 의미의 국가연합이나 지방국가의 주권이 제한되는 연방제와는 다른 형태로서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 비슷한 주권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이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특수한 결합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125]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과 북은 각자 외교 군사권을 그대로 가지고 독립된 주권국가로 잠정적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단계를 유지발전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존공영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남한정부는 공존공영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고립화나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에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다만 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어떤 내부사태의 결과로서의 흡수통일이라면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입장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126] 물론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상정했을 뿐이다. 현재 문민정부가 국민적 합의[127]를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공식적인 통일정책의 기조는 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방식이다. 즉 단계적 기능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는 '민족공동체 방안'인 것이다.

마. 聯邦制 統一論

연방제(federation)란 정부권력을 행정지역적인 차원에 따라 분류한 하나의 정부형태이다.[128] 따라서 연방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일정한 권력배분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연방정부는 대내외적으로 한나라의 주권을 독점한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지방정부를 완전히 상하관계의 위치에서 지배하는 것이

125) 이장희, "남북연합시대를 대비한 법제도적 과제", 안보문제연구원, 〈통일로〉, 1993년 11월호, P.56.

126) 이홍구 통일부총리는 1994년 8월 8일 통일연수원 특강에서 "흡수통일을 바라지 않지만 기회가 온다면 실현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바있다. 조선일보, 1994년 8월 9일

127) 최근 민족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1993.7)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현실적인 통일방법으로 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 합의적 통일을 선택하였으며 이상적인 통일형태로는 독일식의 흡수통일(18%)보다 교류협력에 의한 점진적 합의적 통일(83%)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수원, 〈1994 통일문제이해〉, (1993), P.197.재인용.

128) 유석열, 〈남북한 통일론〉, (법문사, 1994), P.159.

아니라 상당한 권한을 지방정부가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사이의 권력의 한계를 설정하는 일이란 대단히 어렵다. 이런 이유로, 실제에 있어서는 나라의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연방정부가 큰 권한을 행사하고 지방정부는 제한된 권한 밖에는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연방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지만 명칭의 유사성에 의해서 연방제와 자주 혼동을 일으키는 또 다른 정부 형태인 국가연합(confederation)이 있다. 이는 독립적 주권을 지닌 지역정부들이 새로운 중앙정부를 수립하지 않은 채 협의체 또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의 이익을 보호 또는 추구하기 위하여 극히 제한된 범위의 권한을 형식상의 중앙기구에 위임하는 제도이다.[129] 따라서 국가연합에서는 소속된 국민들이 정치권력을 직접 중앙정부에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기구 또는 정부도 국민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법적 통제를 할 수 없다. 이와같이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은 분명한 성격상의 차이를 갖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고려연방제'에서 표시하고있는 '연방'의 용어는 연방국가를 의미하는지 또는 국가연합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이 매우 모호하다. 한글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이라고 표현하면서 영문으로는 'Con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Korea'라고 표기하여 국가연합을 뜻하고 있다. 더욱 혼란스러운 점은 그 성격이 시기적 변화에 따라 근본적으로 상이한 내용[130]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사회내에서도 여러 계층으로부터 한반도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 통일론이 제시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김대중이 통일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화국연합제와 문익환목사의 '3단계 연방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129) 유석열 〈남북한 통일론〉, 위의 책, PP.159－160.

130) 1960년대 초기의 제안된 고려연방제(남북연방제로 호칭)의 의미는 과도적 체제의 국가연합적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1980년대에 발표된 고려연방제(고려민주연방공화국)는 과도체제가 아니라 최종의 국가형태로서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연방국가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와 주장하는 내용은 잠정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고 남북한 지역정부의 독립된 통치권을 인정하는 국가연합 방식으로 변모되었다.

1) 共和國 聯合制

김대중의 '공화국 연합제'는 1971년 대통령선거시 제시된 '3단계 통일론'을 기조로 삼고 있다. 이는 남북공존과 교류를 통해서 신뢰와 동질성이 회복되면 점차 국방 외교까지 중앙정부에 이관하여 완전한 연방을 이룬다는 것으로 제1단계인 평화공존의 단계에서는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미·일·중·소 4대국에 의한 평화보장을 확보하고 제2단계인 평화교류의 단계에서는 남북공존의 바탕위에 모든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상호화해와 동질성을 회복하며 제3단계인 평화통일 단계에서는 남북양측에서 파견한 동수의 대표로 통일기구 및 연방을 설립한다고 되어있다. 이와같은 초기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은 1980년대 공화국연방제로 표현되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공화국연합제 통일방안'으로 수렴되어 발전된다. 과거 3단계 통일의 내용이었던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단계가 통일의 원칙으로 전환되고 1민족 2체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3단계의 '공화국연합제 통일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내용을 보면, 제1단계는 1연합 2독립정부의 단계로서 남과 북이 지금과 같이 독립된 국가로서 외교, 국방 내정의 모든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한적인 권한을 갖는 남북 연합기구를 구성한다. 제2단계는 1연방 2지역 자치정부의 단계로서 공화국연합제의 1단계를 통해서 상호신뢰와 교류·협력 그리고 동질성이 증대되면 외교·군사의 전면적 권한을 행사하는 연방정부를 구성한다. 제3단계 는 1국가 1정부의 완전한 통일국가이다.

김대중은 이와같이 단계적으로 이행되는 연방제통일방안을 표명하면서 대북정책의 5원칙을 제시[131]하고 있는바 첫째,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대결과 경쟁에서 화해와 협력으로의 정책을 전환하고 둘째, 통일은 자립과 자결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셋째, 남한은 성급한 북한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넷째, 남한은 북한의 경제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남한은 북한과의 점진적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1) 배영기, "최근남북한 3김의 통일정책방안", 〈통일로〉, 1993.11월호, (안보문제연구원), PP.66-67. 재인용.

이러한 그의 주장은 연방제통일의 한 과정으로서 1연합 2정부 단계로의 이행을 위한 통일환경조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남한의 우세한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하여 남북간의 신뢰 및 화해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그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한편 그는 현재 통일방안 실천의 가장 커다란 장애는 북한의 핵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정책을 저지하는 것이 통일환경조성의 우선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2) 聯邦制 3段階論

문익환목사는 통일운동은 민중해방운동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민중이 주체가 된 통일운동의 전개를 주장하면서 연방제 3단계 통일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두체제가 통합할 수 있는 길은 상이한 두체제가 하나의 연방으로 흡수되는 방법 뿐이라는 입장에서 이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의 통합단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실질적인 남북간의 이질화 극복과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헌법안의 마련을 위하여 남과 북이 두개의 국가로 존재하는 단계로서 영연방과 같은 형태이다.[132] 또한 이시기에 영세중립화를 선언하여 한반도를 주변4강의 힘의 완충지역으로 만들어 통일의 국제적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한다.

제2단계는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연방정부가 구성되고, 남북은 현 사회·경제체제를 유지하며 남북 두단위의 자치제가 실시된다. 제3단계는 남북의 두단위로 실시되던 자치정부가 도 단위로 세분화된다.

또한 문익환목사는 이와같은 통일과정의 선행조건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남북간의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등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이러한 선행조건이 조성되기위한 환경으로 우선 분단으로 인해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오고 있는 분단논리와 적대불신관계에서 자라온 흑백논리를 타파할 것과 북은 자유를, 남은 평등을 향하여 과감히 궤도를 수정하여 남북간의 인

132) 동단계는 김대중의 〈공화국연합제〉 제1단계와 동일한 단계이다. 김대중은 자신의 통일방안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1단계의 통일은 영연방의 양상과 비슷하다고 표현하였다. 국토통일원, 〈정당·단체·개별인사 통일논의〉, 앞의 책, P.231.

적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같은 통일환경과 선결조건이 조성되면 연방제 3단계 과정을 거쳐 통일이 이룩되는 바 연방제를 과도기적인 체제로 소극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인 지방자치제로서 적극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남북간의 깊은 불신과 이질화 현상 때문에 통일방안으로서의 연방제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기간 과도기를 거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연방제안"[133]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러한 시각에 대해 강한 거부적 입장을 표명하는 등 한반도 통일방안으로서의 연방제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바. 中立化 統一論

한반도 통일문제에 이론적으로 접근하려는 기능주의론과 연방제론과는 다른 시각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제3의 통합논리가 중립화 통일론이다. 중립화 통일론이란 분단국이 이해관련국들로부터 국제법상의 중립지위를 보장받음으로서 분단상태를 극복하려는 분단국가의 통일론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통일과정에서의 중립화 정책도 포함되어진다. 따라서 중립화 통일론은 분단국의 중립의지와 함께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국제적 조약이나 승인에 의해서 국가의 중립지위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는 영세중립(permanent neutrality)[134]은 어느 한 나라가 약소국이면서도 전략상으로는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경우 그 나라를 국제분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열강들이 중립화 협정을 통하여 그지위를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약소국에게는 정치적 독립과 영토적 보장을 받는 방법이고 주변열강에게는 열강간의 세력갈등을 제어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유지하

133) 국토통일원, 〈정당·단체·개별인사 통일논의〉, 위의 책, P.241.

134) 영세중립의 '영세'라는 표현은 전시나 평화시를 막론하고 항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영구히라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세중립도 그 승인국 전부가 동의하면 그 자격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려는 국제정치상의 세력경영 도구로 사용되어 진다.[135]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강대국들의 전략적 요충지로 한반도가 분단되기 이전에도 주변강대국들에 의해서 한반도 중립화 문제가 자주 거론[136]되었으며 분단이후에도 분단극복의 한방법으로서 중립화 통일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분단이후 중립화 통일론이 국내외의 학자들에 의해서 주로 제안되었다는 것은 대체로 중립화 통일문제가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이후 제기된 중립화론은 제안자들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의 정치가나 학자에 의해서 제기된 것과 국내외의 한국인에 의해서 제기된 것에는 중요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외국인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문제에 주된 관심을 갖고 국제질서 전반에 대한 정치·군사적 고려에서 한반도를 완충지대화시키려는 입장에서 중립화론을 제기하는데 비하여 한국인들은 통일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중립화 문제에 접근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137]

이와같은 시각의 차이는 중립화 통일문제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의 중립화는 관련강대국들의 이익이 합치되고 또한 이들로부터 중립화가 보장되고 존중될 때만이 중립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중립화를 희망하는 국가의 노력에 의해서 관련국들의 합치된 이익을 산출하는 것도 중립화 가능성을 제고시켜 주는 일이다. 따라서 중립화 통일문제는 국내외적 환경조성이 성공의 관건이 된다.

남한 사회에서 중립화 통일론은 4.19혁명이후 혁신세력들에 의해서 활발히 논의되었으나 당시 남한 정부에 의해서 논의자체가 거부되었다. 1970년대이후 한반도 주변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국내외에서 다시금 중립화 통일론이 제기하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분단이래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중립화 통

135) 최봉윤(외), 〈민중주체 중립화 통일론〉, (전예원, 1988), P.170. 재인용

136) 청일전쟁(1894)당시 이미 일본에 의해서 한반도에 대한 중립화안이 거론된 적이 있다. 민병천, 〈신통일론〉, (고려원, 1992), P.336. 재인용.

137) 노찬백, "남북통일에 관한 제이론", 현대한국정치연구회, 〈탈냉전의 민족통일론〉, (예진, 1993), P.100. 재인용

일을 주장하고 있는 재미학자 최봉윤의 '민중주체 중립화 통일론'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 민중주체 중립화 통일론

최봉윤은 한국문제의 유일한 합리적 해결의 방법으로 미·일·중·소 4강에 의해 보장되는 영세중립국을 제시하고 있다. 즉 영세중립국은 한민족의 민족적 이익에 부합되며 이로 인하여 평화적인 국가 재통일의 길을 열게 해주어 자결원칙에 기초한 단일민족정부의 수립을 가능케 해준다는 것이다.[138] 그러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남북한의 두지배 권력층의 현상유지적 사고가 통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신하여 민중이 주체가 되어 통일운동을 주도해야된다는 입장에서 민주주체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중립화의 조건으로 국제적 조건과 국내적 조건을 들고 있다. 국제적 조건으로서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은 이 지역에서 주변4강의 첨예한 경쟁을 완화시켜 줄 것이므로 이것은 바로 미래의 치명적인 인류멸망의 전쟁을 방지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이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평화적 수단에 의해 달성되고 통일된 한반도가 외부세력의 간섭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적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두개의 한국' 정책에서 탈피하여 관련 4강이 인정하는 한반도의 영세중립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합치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39]

한편 최봉윤은 한반도의 분단이 외세에 의해서 강요되었고 또한 분단을 지속시켜주는 주요한 요인도 외세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내부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한반도의 분단을 규정지어온 것이 외부적 요인이라 할지라도 한반도 통일의 주체는 한반도의 민중이며 한반도 역사발전의 중심 또한 한반도 내부에 있다는 상황인식을 피력하면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위한 국내적 조건

138) 최봉윤(외), 〈민중주체 중립화 통일론〉, 앞의 책, P.207.
139) 최봉윤(외), 위의 책, PP.233-234.

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140]

정치적 개선요인으로 첫째, 산업화와 더불어 국민의 정치참여등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어 왔지만 정부는 권위주의화하고 정치는 불안정하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탈권위주의 및 정치적 안정이 조속히 선행되고 통일이 각자의 시각에 의존한 분열적 가치가 아닌 민족 공통의 열망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국내정치에서 통치의 수단으로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고 있는 데 탈이데올로기의 노선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국내외적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여 중립화의 인식에서 선입견이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한은 블록체제에 편입되어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문제의 논의에서도 주체적 태도로 임하기 어렵다. 따라서 탈블록화를 통해 국제정치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사회경제적 개선요인으로는 첫째, 상호 적대감에서 비롯되는 통일가능성에대한 회의감을 불식시키며 실천 불가능한 당위론적 통일론에서 탈피하여 동족의식을 바탕으로한 단일사회로의 창조적 운동으로 통일운동을 승화시켜야 하며 동시에 기존의 정부 주도 통일논의에서 민중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개방되어야 한다. 둘째, 남한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중심부에 종속되어 있으며 북한은 폐쇄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남한은 대외의존 감소에의한 종속탈피로 자립경제기반의 구축이 선결이며 북한은 개방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는 위에서 언급한 정치·사회·경제적 조건의 성숙이 중립화 통일의 가능성을 제고시켜주는 환경의 조성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조건들을 완성시켜주는 전제로서 남북한 양체의 민주화를 선결문제로 들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중립화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변관련국과의 이해관계의 중요성 못지않게 한국내부의 통일에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 중립화는 한국의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한국의 주체성 재확립을 보장해주는 실현가능한 유일수단이기 때문에 주체와 중립화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그는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상반된 이념인 공산주의

140) 최봉윤(외), 위의책, PP.235－255.

와 자본주의는 통일한반도의 이익에 따르는 중립화에 의하여 대체될 것이며 중립화와 민중주체성은 점차 새로운 정치문화로 정착되어 한반도 민중의 지배적인 정신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발전시키고 있다.[141]

한편 그는 자신의 민중주체 정치문화에 입각한 통일방안으로 '과도민중연방공화국 수립방안'이라는 과도적 성격의 연방제 국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142]

첫째, 영세중립화를 지향하는 과도민중연방공화국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남북에서 동수의 헌법초안 대표부를 구성한다. 둘째, 헌법에따라 과도연방정부의 기구를 구성한다. 이원제의 입법부와 행정수반이 연방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및 사법부를 구성하고 5년내 통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통일정책위원을 구성한다. 셋째, 통일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최봉윤은 평화통일은 민족의 지상명제이기 때문에 사상과 제도가 민족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와같이 통일국가이전에 과도민중연방공화국을 설치하는 이유는 해방이후 근 40여년동안 남북에 서로 상이한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과정의 필요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정부수립후 현재 하나의 정부형태로서 거의 완성되어 보이는 과도연방정부기구에 대한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3. 主要 統一方案의 比較

한반도 분단이래 우리사회내에서는 이를 극복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많은 통일논의가 각계각층으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중에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 일회적으로 대응하는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부터 통일문제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내용구성을 갖고 있는 통일방안에 이르기까지 그 양태는 매우 다양하다. 본장에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논의의 주요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141) 최봉윤(외), 〈민중주체 중립화 통일론〉, 위의 책, P.275.
142) 국토통일원, 〈정당·단체·개별인사 통일논의〉, 앞의 책, P.66.

즉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 건설에 통일의 의미를 두는 것이다.

김대중의 공화국연합제 통일방안에서는 통일개념에 대해 명확한 규정대신 민족통일의 당위성 입장에서 민족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분단의 원인규명 보다는 현재의 분단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 결과이다. 즉 현재와 같이 남북이 적대적 관계하에서 분단의 원인이나 한국전쟁의 책임문제등을 밝히는 것은 남북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통일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소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에 대한 뚜렷한 개념규정을 밝히기가 어렵다.

문익환목사의 연방제 3단계 통일방안에서의 통일개념은 분단을 초래하게 된 상황 즉 분단원인 제거에 촛점이 모아진다. 그에게 있어서 분단은 민중이 객체가 되어 피동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므로 통일은 소외된 민중계급이 민주화를 통해 주체의 위치로 옮겨감으로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민주화의 결과로부터 산출되며 민주와 통일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주는 고리는 남과 북의 민중을 모두 포함하는 민족의 개념이라고 한다.[143] 문익환목사의 통일개념은 민중의 성격이 객체에서 주체로 변화하여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의 통일방안에서는 민중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일이 바로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과 동일시되므로 민중의 성격을 규정해주는 정치사회구조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統一主體

문민정부의 통일방안에서 나타난 통일의 주체는 민족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지칭한다. 이는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된 조국은 7천만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한다."[144]라고 언급된 부

143) 현대한국 정치연구회, 〈탈냉전의 민족통일론〉, (예진, 1993), P.378.
144) 〈조선일보〉, 1994년 8월 16일, 김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요지)

분에서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 정부는 통일이 어느 특정계급이나 집단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을 반대하며 7천만 민족구성원이 남녀노소, 빈부격차, 지위고하, 계층간의 구분없이 모두 통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가정책에 국민모두가 주권자로서 참여할 권리가 보장(헌법 제1조 2항) 되듯이 통일정책에도 같은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이와같이 민족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통일의 주체로 보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프로레타리아 계급만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민으로 규정하고 통일의 주체를 인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김대중의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주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고 지 않으나 대체로 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다만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찾아내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적 기구등을 창설하여 이들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구체적인 통일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는 남북의 양당사자라고 밝히고 있다.[145]

문익환목사가 주장하는 통일주체는 소수의 반민주세력을 제외한 7천만 민족모두를 포함한다. 그에 의하면 피지배계층의 주도로 지배·피지배관계가 일소되는 민주화가 통일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으므로 정권이나 기득권 유지에 관심이 있는 기존 지배층세력 즉 반민주세력을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46] 즉 문민정부가 남북한 주민과 해외동포를 망라한 민족공동체 구성원 전부를 통일의 주체로 보는 반면에 문익환목사는 소외된 민중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분단의 고착화로 이득을 보고 있는 남한사회의 기득권층을 배제하고 있다.

3) 統一原則

문민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한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의 원칙으로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3대 실천정신을 통일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다. 첫째, 민주

145) 국토통일원, 〈정당·단체·개별인사 통일논의〉, (1989), P.13.
146) 통일연수원, 〈통일문제이해〉, (1993), PP.191－192.

적 국민합의, 이는 국민의 자발적 지지를 토대로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즉 정부출범의 정통성을 확보했다고 자부하는 문민정부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견해차이를 최소화시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둘째, 공존공영이 정신이다. 이는 남과 북이 대립과 반목의 자세를 버리고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공존하자는 입장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합의한 바와 같이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비록 자기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대화의 협력의 상대자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민족복리는 민족의 평화적 통합을 완성시키기위해 견지해야 할 정신으로 민족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가 신장되어 민족구성원 모두가 번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정신을 의미한다. 이처럼 문민정부는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과 더불어 3대 실천정신을 통일원칙의 실천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김대중은 공화국연합제 방안에서 기존의 3단계를 3원칙으로 전환하여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을 통일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3원칙의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평화의 정착이다. 남북간의 적대감과 불신감이 해소되지 않는한 전쟁의 위험성은 상존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따라서 그의 통일원칙은 전쟁의 방지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147] 첫번째 원칙은 평화공존의 실현이다. 이는 동족간의 전쟁을 막기위한 안전조치의 확보를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그는 평화협정의 체결과 불가침조약 체결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평화적 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교류 원칙이다. 즉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실현시키는 것이 남북간의 적대적 대립과 긴장을 해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경제적 상호의존은 전쟁억지와 상호협력의 최선의 수단임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평화통일의 원칙은 평화공존과 평화교류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147) 국토통일원, 〈정당·단체·개별인사 통일논의〉, 앞의 책, PP.228-230.

바로 이와같은 평화3원칙에 의하여 공화국 연합제 통일방안의 제1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익환목사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나타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148]을 견지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주의 원칙은 반외세·민족주체의 원칙으로 통일문제에 관한 어떠한 외세의 역할도 거부하는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민중만의 참여를 통한 반외세 민족자주의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평화의 원칙은 남한내부의 독재정권의 폭력을 거부함으로써 남한사회내의 정치.군사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남북간의 평화질서를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민족대단결원칙에서는 사상·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간에 존재하는 민족내부의 모순이 극복된 상태에서 민족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익환목사가 주장하고 있는 통일원칙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통일운동의 실천내용이 함축되어있다. 이는 그의 통일방안이 남북분단의 극복으로서 민족의 재결합

〈표 2-5〉 주요 통일방안의 이념영역 비교

방안 / 내용		민족 공동체 방안 (문민정부)	공화국 연합제 방안 (김대중)	연방제 3단계 방안 (문익환)
이념	통일개념	민족 공동체 건설	민족의 재결합	민중의 성격변화에 따른 민족의 결합
	통일주체	모든 민족 구성원	민족구성원 전부	반민주세력을 제외한 민중
	통일원칙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주·평화·민주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148)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나오는 3원칙에 대한 해석은 논의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설명되기도 한다. 일례로 자주적 원칙 중 '외세'의 규정에 대해 당시 남북양측은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남한측은 유엔은 외세가 아니므로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를 고수할 것을 밝혔고 북한측은 자주적 통일은 모든 외세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남한측 주장을 반대하면서도 자신들이 중.소와 맺은 동맹관계는 내정간섭이나 군사주둔이 없으므로 그들은 외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최봉윤(외), 〈민중주체 중립화 통일론〉, 앞의 책, P.120.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과 민중해방이라는 두가지 목적의 동시적 실현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앞의 도표는 문민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김대중의 공화국 연합제 통일방안 그리고 문익환목사의 연방제 3단계 통일방안의 내용중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이념영역부분을 개략하여 도표화 한 것이다.

나. 過程 分析

1) 先決課題

문민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통일의 선결과제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포기케 하는 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남한사회를 공산화하려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김영삼대통령이 광복절 49주년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될 것이다"[149]라고 선언한 것은 남한체제의 우월성에대한 문민정부의 자신감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적화전략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인식케하여 그것을 포기토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특히 문민정부는 이미 남북간에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의하여 적대적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남북관계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문제 해결없이는 남북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관계를 추진할 수 없으며 또한 북한이 핵개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남적화전략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민정부는 북한의 대남적화 태도가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남북간의 공존공영

149) 반면에 김정일은 김일성사후 처음으로 노동신문에 실은 자신의 논문에서 "사회주의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자들이 파산한 것이며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식사회주의의 고수를 강조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4년 11월 5일

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북한 지원정책 및 국제적 공조체제의 확립을 통하여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문민정부가 갖고있는 통일의 선결과제이다.

김대중의 통일방안에 나타난 통일의 선결과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는 데 있다. 문민정부는 북한에 의한 대남적화노력을 무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하여 김대중은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한다. 그는 우선 남북간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휴전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북미간에 맺어진 정전협정대신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동 평화협정의 체결은 남북한 양당국 및 전쟁에 개입한 중국과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 등 관련4개국이 참가해야 된다고 제안하면서, 북한과 미국 양자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한국전쟁의 역사적 사실이나 현재의 남북상황 및 장래의 효력성을 감안할때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150] 아울러 김대중은 남북간의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여 상호간에 어떠한 침략이나 도발도 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감시체제도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그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철거를 주장함과 동시에 미군철수와 군비축소 문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이는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 남북쌍방과 군사동맹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미·일·중·소 4대국이 적극적인 지지와 보장을 하고 유엔이 또한 이를 지지하는 결의를 하는 등 다단계의 보장장치가 이루어진 후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김대중에 있어서 통일의 선결과제는 한반도의 평화보장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문익환목사의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의 선결과제로서 통일을 위한 환경조성과 연방제실시 이전의 선행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환경조성으로서는 남북간의 적대적 불신관계에서 형성되온 분단의식 즉 분단논리와 흑백논리의 타파를 주장한다. 이를 통하여서 북한에서는 자유를 제고시키며 남한에서는 평등을 향하여

150) 국토통일원, 〈정당·단체·개별인사 통일논의〉, 앞의 책, P.229.

과감한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남한사회에서 반통일적인 기득권세력을 밀어내고 국민의 통일염원에 전적으로 승복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면서 이를 위하여 민중민주세력의 대동단결과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통일의 선행조건으로는 평화협정의 체결, 미군철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등을 제시하고 있다.[151] 즉 이러한 정치군사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남북간의 대립과 긴장상태가 완화될 수 있으며 이는 쌍방이 이념과 제도가 다른 체제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 및 용납하는 것으로 비로소 하나의 민족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2) 統合節次 및 機具組織

문민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의 통합절차 및 기구조직의 특징은 단계적이고 제도화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첫단계인 화해협력의 단계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두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지않고 오히려 공존공영의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서로 화해하고 군사적으로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경제·사회적으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문민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고위급 회담 및 분야별 공동위원회의 활성화를 강조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남과 북의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즉 이단계는 화해와 협력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단계로서 '남북연합헌장'을 규범으로하여 남북한이 2체제 2정부하에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이다. 남과 북은 이 단계에서 외교·국방에 걸쳐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생활권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공동체를 이룩하여 민족사회통합을 이룩한다. 이는 정치적 통합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남북이 공

151) 노찬백, "남북통일에 관한 제이론," 현대한국정치연구회, 〈탈냉전의 민족통일론〉, (예진, 1993), P.85.

동으로 구성하는 남북연합기구에서 정치적통일 즉 국가통합을 위한 제문제들을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서 다루게 된다.

남북연합공동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가 상설화되고 또한 남북한의 의회대표들에 의해서 통일헌법안이 마련될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통일국가완성의 단계로서 남북연합단계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실현한다. 이 단계에서는 민족통일과 정치적 통일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민족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152] 이러한 의미에서 문민정부는 통일이란 단순한 과거의 복구작업이 아니라 하나의 창조작업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의 통일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제1단계의 통합절차는 문민정부통일방안의 제2단계와 그 형식상 유사하다. 즉 1연합 2독립정부의 단계로서 남북은 각기 독립정부로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중앙에는 다분히 상징적이고 제한적인 권한만을 갖는 남북연합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이다.[153] 동 연합기구는 남북동수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양측의 독립정부가 합의하여 그 권한을 부여한 사항을 논의하게 되는데 비정치적 문제뿐 아니라 군사적·정치적 문제도 다루게 된다. 또한 이단계에서 남북은 통일의 상징적 조치로써 새로 형성된 연합의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한다는 것이다. 제2단계는 1연방 2지역 자치정부의 단계로 이전 단계에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바탕으로 이단계에서는 외교와 국방은 연방중앙정부가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내정에 대해서는 남북이 2지역 자치정부의 입장에서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154] 즉 이 단계는 현재의 미국과 같이 연방정부가 외교.군사권과 주요내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지방정부는 제한된 권한을 갖고 자치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연방제 형태를 의미한다. 마지막 제3단계는 통일의 완성단계로서 1민족 1국가 1정부의 형태를 갖고 있는 단일국가로서의 국가형태를 갖고 있다.

152) 통일연수원, 〈통일문제이해〉, 앞의 책, P.189.
153) 국토통일원, 〈정당·단체·개별인사 통일논의〉, 앞의 책, P.231.
154) 기사연통일연구위원회, 〈분단50년의 구조와 현실〉, (민중사, 1994), P.107.

〈표 2-6〉 주요통일방안의 과정영역 비교

방안			민족공동체 방안	공화국연합제 방안	연방제 3단계 방안
내용	선결과제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포기 및 인권 개선,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성실한 이행	평화정착보장 평화협정 불가침조약 핵개발의 포기	분단논리극복 평화협정 미군철수 동시유엔가입 반외세적 민주정부수립
과정	통합절차 및 기구조직	제1단계	(화해협력단계) 남북한의 현재 정부유지 남북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공동위원회 활성화	(국가연합단계) 1연합 2독립정부 단계 과도적 남북연합기구 구성 남북연합의 명칭으로 단일유엔 가입	(국가연합단계) 1연합2독립정부 과도적 남북연합기구 구성
		제2단계	(남북연합단계) 남북한의 현재 정부유지 남북연합헌장에 따른 남북연합기구 구성·운영 남북정상회의 및 남북각료회의 상설화	(1연방 2정부단계) 연방정부수립 연방정부의 주권행사 2자치정부 제한된 자치권한행사	(1연방 2체제 단계) 연방정부수립 연방정부가 완전 주권행사 연세중립 선언
		제3단계	(통일완성단계) 1민족·1국가·1정부 남북한 자유총선거로 통일국회 및 통일정부수립 단일국가로 통일완성	(통일완성단계) 1민족·1국가·1정부 단일국가로 통일 완성	(통일완성단계) 1민족 1국가도 단위자치제의 연방제국가

문익환목사 역시 현재 남북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아래 3단계 통합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첫단계는 현재 남북한이 갖고 있는 외교.군사의 독자성을 허용하는 연합단계로서 김대중 통일방안의 제1단계와 동일하다. 두번째단계는 연방정부가 구성되어 외교와 국방등 주요통치권을 행사하고 남북간에 사회경제체제만 독립성을 갖는 하나의 연방정부로 통합되는 단계이다. 세번째단계는 통일국가의 완성단계로서 남북한 두단위로 실시하던 지방자치제가 도단위까지 세분화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문익환목사가 연방제의 지방자치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 남북한이라는 두개의 상이한 정치적 실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형성시켜야 된다는 당위론적 논리에서 이질적 통합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부감이나 저항감을 극소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통일방안들은 모두 평화적 방법에의한 3단계의 통합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통일국가를 위한 과도적 과정으로서 남북연합 단계를 공통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는 각기 상이하다. 이를 도표화하면 앞의 〈표 2-6〉과 같다.

다. 目標 分析

1) 統一國家의 形態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통일국가의 형태는 1민족·1국가·1체제·1정부로 구성된 단일국가의 형태로서 민족통일과 정치적통합이 완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의 공동대표들에 의해서 초안되고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에의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남북 두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단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민정부가 과거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통일국가로서 단일국가와 단일정부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단일국가가 갖고있는 제도상의 장점과 더불어 오랫동안 단일체제속에서 익숙해진 민족적 정서를 감안한 것이며 또한 연방제가 내포

하고 있는 지방분권적 성격이 통일을 지향하는 통합적사고와는 일치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일반적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민정부는 통일국가의 이념으로서 계급이나 집단중심의 이념을 배격하고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사실 이와같은 통일이념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남북간의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전의 남한정부는 7·4남북공동성명이래 상호체제나 이념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입장에서 통일이념의 분명한 제시보다는 통일의 원칙이나 절차문제에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동구권의 몰락과 더불어 남북간의 체제경쟁도 끝났다는 역사인식하에서 과거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한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통일정책을 수행하겠다는 문민정부의 자신감의 표출인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의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국가의 최종형태는 1민족 1국가 1정부의 단일국가이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제2단계인 1연방 2자치정부단계에서 사실상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 가능하게 된다.[155] 즉 제2단계에서의 연방상태는 현재 미국의 연방상태와 유사한 것으로 중앙(연방)정부가 외교·군사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중요한 내정에 대해서도 권한을 가지는 상태인 바 이는 전형적인 연방제국가의 완성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3단계에서의 통일의 완성은 다음 세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제2단계의 연방제통일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대중은 공개적으로 통일이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남북이 각기 대립되는 이념과 체제를 갖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통일이념의 제시는 오히려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가 될수 있다는 이유에 기인하는 것 같다. 즉 어느 한쪽도 불안을 느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통일방안은 제시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입장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연방제 단계로 들어갈때는 북한의 정치는 민주제도를 수용해야하며 경제도 시장경제체제에 접근해야 그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156]라는

155) 기사연통일연구위원회, 〈분단50년의 구조와 현실〉, 앞의 책, P.107.
156) 기사연통일연구위원회, 〈분단50년의 구조와 현실〉, 위의 책, P.107. 재인용

주장등에서 볼 때 그의 통일이념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문익환목사의 통일국가의 최종형태는 1민족·1국가·도단위자치정부의 연방제 형태이다. 즉 하나의 연방정부하에 도단위까지 세분화된 지방자치정부로 구성된다. 이는 상반되는 두 이념과 체제로 나누어진 현실적 분단상황에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두체제가 통합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방정부의 권한아래 남북체제가 지방정부로서의 기능을 갖고 합쳐지는 연방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에서 나온것으로 보인다. 통일의 완성단계에가면 남북의 두체제가 도단위까지 더욱 분화되어 개별적인 도 하나가 지방자치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문익환목사는 통일의 이념으로 민중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즉 반외세적·민족자주적 입장에서 소외된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해방시켜주는 민주주의가 바로 민중민주주의란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통일은 민중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동시에 민중민주주의는 민족통일의 궁극적 목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익환목사는 통일조국을 자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영세중립화하여 이 지역을 강대국의 각축장이 아니라 힘의 완충지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국제적인 합의와 보장이라는 외세의 지원이라고 주장[157]함으로써 그의 반외세적 입장이 남북통합 이후 상황에서는 신축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統一國家의 未來像

문민정부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민족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촛점을 맞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문민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방안이 어느 일방의 번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7천만 민족구성원 개개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민족공영의 정신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문민정부가 통일미래의 청

157) 국토통일원, 〈정당·단체·개별인사 통일논의〉, 앞의 책, P.240.

사진을 밝히고 있는 것은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남북한 민족공동체의 전구성원으로부터 지지 및 수용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대중의 경우에는 분단극복 방법에 우선적인 관심으로 구체적으로 통일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제시한 그의 통일의 미래상은 우선 분단의 극복으로 통일한국은 전쟁의 위험성이 제거된 평화의 사회가 되며 민주와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동시에 독일과는 달리 통합된 남과 북은 경제적 보완관계에 의한 경제발전의 상승효과로 선진국가를 앞당겨 건설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문익환목사 역시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지만 그가 주장하고 있는 통일논리 등을 통하여 추론되어질 수 있다. 우선 소외된 민중이 해방되어 역사의 주체자로서 통일된 사회를 주도하게 되므로 경제적 평등이 강조된 변혁된 사회상을 예견할 수 있다. 동시에 주변강대국들의 지지와 보장으로 영세중립의 지위를 획득한 통일한국은 제도화된 평화정착을 바탕으로 도단위까지 지방자치정부가 세분화 되어진다. 즉 정치적으로 분권화된 미래의 사회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세가지 통일방안의 목표영역부분을 내용별로 개략하면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주요통일방안의 목표영역비교

내용 \ 방안		민족공동체 방안	공화국연합제 방안	연방제3단계 방안
목표	통일국가의 형태 (통일이념)	1민족·1국가 1체제·1정부의 단일국가 자유민주주의	1국가 1체제의 단일국가 자유민주주의	1민족·1연방·도단위자치정부의 연방제 국가 민중민주주의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사회	평화와 정의가 구현되는 민주사회(추정)	경제적 평등이 구현되는 정치적 분권화사회 (추정)

Ⅲ. 運動陣營의 統一論議

1. 民族解放運動陣營의 統一論議

가. 統一論議의 歷史

먼저 민족해방운동진영의 실상은 그간의 통일논의를 어떻게 해 왔느냐를 인용하므로써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인용은 남과 북, 그리고 운동의 영역으로 접근되었다.

1) 南韓과 관련된 統一論議

(1) 분 단

먼저 분단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른 "분단정책"[158]의 결과며, 그 성립과정은 "미국이 해방군으로서가 아니라 점령군"[159]이었음과 함께 "친일세력의 보호 육성"[160] 때문이라 하였다.

다음으로 UN 감시하 남북한 총선거는 "미국에게 우호적인 정부수립"[161]을 위함으로 인식됐으며, 제주도에서 "무장봉기"와 여순의 "반란"은 바로 단정반대의 "필연적"[162] 결과이며, 그 "대표적" 투쟁으로서 "정당하다"[163]는 것이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분단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른 대한반도정책의 결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소련의 북한 진주에 대해서는 눈감았음도 드러났다. 그리고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식으로 유엔군임도 부정되었으며, 남북한 총선

158) ○○지역교지편집인연합회, 통일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과제, 1988, 91쪽.
159) 그 근거는 45년 9월 8일 남한에 진주한 미군의 총사령관 포고 제1호 제1조라 하였음. 한국노동운동협의회, '분단에서 통일까지', [통일학교], 1994, 19쪽.
160) 그 근거는 맥아더 사령관 포고 1호 제2조라 하였음.
161) ○○지역교지편집인연합회, 전게자료, 92쪽.
162) ○○지역교지편집인연합회, 전게자료, 93쪽.
163) 한국노동운동협의회, 전게자료, 20쪽.

거가 미국에 유리한 정부수립으로서 좌익들의 단선반대 무장투쟁은 정당하다는 식으로 인식하였다.

(2) 6. 25 남침

먼저 "남한의 북진통일론과 북한의 조국해방전쟁론은 급기야 6. 25 전면전쟁으로 발전"되었다. 뿐만 아니라 6. 25는 "미-소대립이 빚은 대리전의 성격과 무력통일론이 혼재"된 복잡한 동족상잔의 비극이자 미국이 "UN군이라는 명분으로 위장하고 참전하였다"[164]는 식으로 6. 25를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54년에 휴전협정 60조에 따라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의하는 제네바 남북정치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70년대까지 냉전과 분단고착화 시대를 거치며 남북은 "상호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무력통합, 체제통합"[165]만이 주장되었다는 인식이다.

그 다음으로 당시의 "이승만 독재정권"의 통일론은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로 그것은 "유엔감시하 총선"과 "북진통일"[166]이라면서 전자는 "외교 선전용"이며, 후자는 "반공독재를 위한 수단"[167]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대북정책 또한 "반통일적인(멸공통일적인) 태도와 이에 입각한 비현실적 억지 대안"[168]으로 일관됐다는 인식을 하였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6. 25 남침이 남북의 충돌이자 미-소의 대리전이며, 미국이 유엔군으로 위장해 참전했다면서 남침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사실조차도 외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승만 정권의 통일은 무력통일론으로 반통일적이며 비현실적 억지대안이었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였다.

(3) 7. 4 공동성명

먼저 4. 19 혁명 후 장면 정권의 통일론은 "선건설 후통일론"이었으며, 그것은

164)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의 과학화와 혁신을 위하여, 조국통일운동론, 130쪽.
165) ○○지역교지편집인연합회, 전게자료, 93쪽.
166) ○○지역교지편집인연합회, 전게자료, 93쪽.
167) ○○지역교지편집인연합회, 전게자료, 93쪽.
168)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35쪽.

바로 "팽창주의적 통일론"이라는 인식이다.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무력통일정책을 포기"했지만 중립화 통일론을 반대[169]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력에서의 대북열세를 의식"하여 실제에 있어서는 일체의 남북협상과 교류를 배격한 채 "수세적 태도"[170]로 일관하였다는 인식을 하였다.

다음으로 박정희 정권은 반공국시로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를 원천봉쇄"했으며, 선건설 후통일의 논리로 "자신의 반통일적 본질"을 드러냈으며, 69년의 국토통일원 설치도 "통일논의 자체를 제도적으로 독점"[171]하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당시는 "문제의식의 외피적 가설만" 있고 "본질로 들어가는 논급은 없는 상태"의 반공정책은 다시 "통일논의 조차 금기시 되었다"[172]는 양자의 양립불가적 인식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7. 4 남북공동성명[173]은 "국민적 여망의 최초 합의"[174]이며, "무력통일에서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평화통일론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고려민주연방제가 일치"[175]된다는 인식도 덧붙여 두었다.

마지막으로 6. 23 선언[176]은 "두개의 한반도 정책"이며, 유엔 동시가입안의 본질은 "두 개의 한국정책과 독일식의 점진적 기능주의적 통일접근의 원칙"이며,

169) 반대 이유로 '중립화'는 지리적 위치, 공산진영의 아시아 적화적략, 자유 우방과 유대가 없게 되는 중립시의 공산집단의 도발이며, '남북교류론'은 공산파괴공작이 정지되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거부하며, '남북 서신왕래'는 북한이 서신왕래의 자유가 없으므로 실효가 없다 하였음.

170)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35쪽.

171)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35쪽.

172) ○○지역교지편집인연합회, 전게자료, 96쪽.

173) 1972년 7. 4 공동성명은 통일의 3대원칙으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 담긴 조항을 포함한 7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나 북한은 유엔군도 침략군으로 외세라 했으며, 사상의 차이 초월은 국가보안법 폐지, 진보세력의 탄압중지라는 해석에 따른 차이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은 북한이 한국의 월남파병에 따른 후방교란 정책으로 고려된 전술적인 것이었음.

174) ○○지역교지편집인 연합회, 전게자료, 96쪽.

175) 한국노동운동협의회, 전게자료, 26쪽.

176) 73년 6월 29일에 대통령이 선언한 것으로 그 내용은 남북한의 유엔동시 가입임.

8. 15 경축사는 "미-북간의 평화협정이 관건"이나 "남북한 상호불가침조약을 주장하여 두 개의 한국을 기정사실화 하였으며", 상호불신 제거는 군사적 문제 타결이나 "점진적 기능주의 교류"만 늘어 놓았다는 비판적 인식을 하였다. 따라서 6. 23 선언이나 8. 15 경축사가 "교묘한 수사로 위장된 반통일적 정책의 다름 아닌 것"[177]으로 비판되었다. 대북정책 또한 "정권연장 및 정권안보의 구실"에서 "남북대화와 협상"에 응했으나 유신과 남북조절위 결렬로 "반통일적 속성을 노골화" 하였다는 인식이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장면정권은 무력통일을 포기했으나 수세적이며, 박정희정권은 통일논의를 붕괴해 자신의 반통일적 본질을 드러냈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7 . 4 공동성명은 상호체제 인정의 평화통일로 바뀌게 하였으며,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나 '고려민주연방제'는 평화통일이라는 점에서 일치된다는 인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4)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

먼저 82년에 정부가 제시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178]은 "기존의 점진적이고 기능주의적(사실상 반통일적) 통일론을 통일방안의 형태로 제시했을 뿐 반통일적 본질은 변함이 없으며, 통일방안 자체도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안도 "반통일성을 조금도 버리지 않는 채 정권연장과 정권안보의 구실을 갖고자 했을 따름"[179]이라는 인식이다.

다음으로 88년의 북방정책은 "분단고착화, 합법화 기도"[180]이자 선교류 후통일, 교류증대론이라 하였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남한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북방정책 등도 분단 고착화이자 그 합

177)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35쪽.
178) 1982년 1월 22일에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발표되며, 그 내용은 7개조항으로 제시되었음.
179)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37쪽.
180)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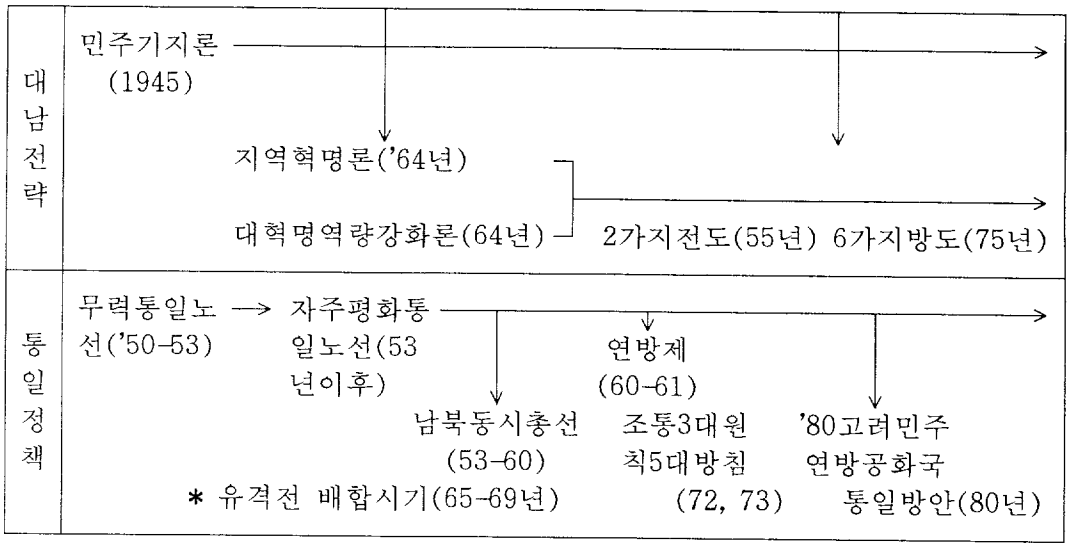
법화의 기도로 부정적인 인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일차자료의 원용대로 남한 통일논의에 대해 민족해방운동진영은 미국의 분단정책 그리고 미국과 남한의 분단 고착화에 따른 반통일의 역사로 인식하였다. 즉 남한의 무력통일론, 선건설 후통일론, 선평화 혹은 교류증대 후통일론은 바로 "미국과 매판세력이 본질적으로 반동세력이며 반통일세력"[181]일 수 밖에 없음의 교훈이라 하였다. 이러한 남한의 통일논의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로 민족해방운동사적인 것으로 북한의 그것과 사실상 구별되지 않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2) 北韓과 관련된 統一論議

(1) 민주기지

북한의 통일논의에 대한 주제는 〈도 3-1〉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었으며, 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182]



〈도 3-1〉 대남전략변천사

181)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40쪽.
182)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28쪽.

먼저 45년의 민주기지노선은 남한 민중이 원하는 "반제반봉건 민주변혁과 자주적 통일국가 수립"이 미군의 한반도 남단 강점으로 탄압된다는 단정(斷定)에서 출발된 노선이다. 그래서 경쟁적, 모험적 "박헌영 중심의 남로당 노선을 비판한 정당한 전략노선으로 평가할 수 있다"[183]는 긍정적 인식을 하였다.

다음으로 54년의 제네바 회담부터 북한은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조를 견지"[184] 하였다는 인식이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북한의 민주기지는 미군의 강점으로 남한의 반제반봉건 민주변혁과 자주적 통일국가 수립이 탄압되므로써 출발된 노선이나 박헌영의 남한혁명노선은 경쟁적 모험적이었다는 부정적 인식을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북한의 민주기지노선을 정당시하면서 남로당의 노선을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4. 19 혁명

먼저 60년의 4. 19 혁명은 북한에게 "다시 부각된 남한의 변혁운동역량의 존재"를 알렸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4월혁명에 크게 고무되고 북한의 우월한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적극적 통일정책을 수립'하였으며, 4차 조로당 대회에서의 과도적 조치로서의 남북연방제 제안이 '자주적 평화통일정책 기조'하에 "최초로 남북연방제를 제안하였다는 점"[185]을 특징으로 들었다.

다음으로 64년의 '지역혁명론'과 '3대혁명 강화론'은 '민주기지노선'의 주 객관적 조건의 반영으로 전자는 "북한이 사회주의 변혁단계로 돌입"되었으며 "남한은 여전히 NLPD적 변혁단계"이므로 남북한이 조건, 변혁단계와 속성이 "서로 상이한 지역혁명을 추진하는 상황"이며, 그에 기초된 후자는 "남과 북의 역량 및 국제지원역량의 강화와 유기적 결합으로 통일과 전국변혁을 수행"[186]하는 전략노선이라는 인식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북한은 69년까지 내부적으로 "국방에서 자위원칙을 천명"하여, 대

183)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29쪽.
184)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30쪽.
185)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30쪽.
186)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29쪽.

남전략에서 "통일혁명당"을 비롯한 지하당 건설을 적극 지원한 연관으로 "유격전"[187]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되었다면서, 유격전은 "비평화적 전도의 가능성에 대한 힘의 타진이었으며, 통일혁명당의 무장봉기, 유격전 전략에 대한 지원, 결합의 모색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88]는 사실적 지적을 하였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북한은 4. 19 혁명을 남한내 혁명운동의 역량존재로 인식해 연방제통일방안을 처음으로 제안케 되는 배경이되었으며, NLPDR의 남한 지역혁명을 한 후에 남북 해외의 3대 혁명역량을 통해서 전국혁명을 해야한다는 민주기지노선을 새롭게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통일혁명당 지원 및 유격전으로 통일의 비평화적 전도도 모색하였다는 등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7. 4 공동성명

먼저 72년 7. 4 공동성명은 이후 남과 북의 통일운동의 대원칙이 되었음에 그 "역사적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후 반통일 작태를 노골화 하는 미국과 남한 정권에게 계속적인 명분열세의 부담을 지웠다"는 긍정적 인식도 덧붙였다. 그리고 55년의 '2대전도'라는 통일경로와 75년의 '6가지 방도'라는 통일방식에 대해서 북한은 "평화적 전도의 세번째 방도인 남한혁명이 승리하는 경우를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경우로 상정"[189]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국통일 5대방침'은 "7. 4 조국통일 3대원칙에 의거하여 북한의 통일정책의 기본노선을 요약한 것으로 하나의 조선정책, 정치군사문제를 중심으로 한 일괄적 타결원칙, 범민족 민중주체의 원칙 등이 잘 표현"되었으며, 대화의 주체에 대해 북한은 "분단의 원흉이며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과의 직접협상으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고, 이에 의해 남북간에는 불가침선언을 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은……거부하고……3자회담을 주장"하였으며, 그 후에 3자회담을 수용하니까 이번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거부하고 실권도 없는

187) 60년대 후반 울진 삼척사건, 1.21 청와대 기습사건은 지하단과 연관한 산악도시 게릴라의 유격전 시도라 하였음.

188)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31쪽.

189)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29쪽.

남한정권을 내세우고 있다"[190]는 비판적 인식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인용을 통해서 북한은 7. 4 공동성명을 남북한 통일운동의 대원칙으로 이용하므로써 미국과 남한 정권에 명분열세의 부담을 지었다는 인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조국통일 5대 방침은 7. 4 공동성명에 의거한 북한의 통일정책의 기본노선이 요약되었다는 식으로 정당화 하였다.

(4)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먼저 80년에 북한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은 "다각적 교류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진보적 운동역량의 현실적 성장을 배경으로 한 "평화통일 3대원칙을 인정한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시정방침"을 담았으며, 기존의 연방제와는 달리 "매우 긴 시간 동안 두개의 서로 다른 체제의 공존을 상정하는 획기적인 것"이다. 이것은 "두개의 한국 정책을 저지하면서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구조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한 통일분위기 조성을 꾀하는"[191] 전략기조라는 긍정적 인식을 하였다.

다음으로 73년 이래 북한은 "남한정권을 현실적인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84년 1월 10일 북한이 3자회담을 제안하므로써 수정하였다. 그러나 남한은 "4자회담이라는 말도 안되는 대안"과 "준비부족이라는 졸렬한 이유"로 거부했으며, 특히 89년까지 군사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는 "무응답 노선"[192]을 견지하였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85년의 남북 고향상호방문도 북한은 "통일 분위기 조성", "두개의 한국정책 저지"를 노력하였으나 남한은 "정권의 대의명분"과 "분열의식 고취"에 활용하였다는 비판적 인식이다. 그럼에도 "남한의 운동권이 계급, 계층으로 뿌리를 내려가면서 일정하게 성장한 사실 등 민민운동권 내에서 민족해방운동적 관점이 일반화 된 것은 이후 남북관계 변화에서 ... 매우 중요한 현실적 변수로 작

190)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33쪽.
191)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33쪽.
192)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33쪽.

용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193]는 식으로 당연시적 인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두개의 한국정책 노골화"로서 올림픽 유치이며, 한국은 "정권유지 수단"으로서 남북관계를 이용하는 의미의 이산가족 고향방문 촉진이며, 87년의 포괄적 평화안은 기존의 "양보"랄수 있는 "미군철수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아도 남과 북의 무력감축을 동시에 할 수 있다"[194]는 것이며, 90년대 군축안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실적 시정방침이자 체제공존의 획기적인 통일방안이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차자료의 인용대로 북한 통일논의에 대해 민족해방운동진영은 한국전쟁 후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조 아래 비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이 타진됨은 물론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남북연방제 또한 제안되었다는 긍정을 하였으며, 더우기 남한의 민족해방운동적 통일관점의 일반화는 이제 주요변수가 되었다는 식으로 연방제 통일이 남한에서 일반화됨을 당연시하는 역사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통일문제에 있어서 미국 및 남한과 북한의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은 "정치군사적 대결 구조"로 "통일의 가장 핵심적 장애물"이 되었다면서, "미제와 남한의 아킬레스 건"[195]임도 교훈삼으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민족해방운동사적 맥락에서 북한의 통일논의를 정당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3) 運動과 관련된 統一論議

(1) 민 족

김구, 김규식은 "민족이 주의를 초월한다"[196]고 하였다. 그러나 남북협상과 그에 따른 공동성명[197]은 5월 10일의 단독선거로 좌절되었다는 것이다.

193)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33쪽.
194)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33쪽.
195)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40쪽.
196) ○○지역교지편집인연합회, 전게자료, 93쪽.
197) 1948년 4월 30일 평양에서 개최됐던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협의회'에서 공동성명된 통일부분의 내용은 '미소양군 철수후 전조선정치위원회를 소집하고 통일적 입법기관의 선거를 실시했다'는 것임.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민족은 주의를 초월한다는 통일지상주의적 변이 단정 반대의 이유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4. 19 혁명

먼저 55년에 진보당이 평화통일론을 제시하여 국민대중의 지지를 확대시켰으나 당수는 사형되고 진보당은 해체의 "만행"[198]을 당했다는 설명이다. 57년에 민중통일은 소장파의원들의 "남북협상에 의한 평화통일",[199] 진보당의 "평화통일론"[200]으로 나타났으나 "거세"되고 "금기시"[201]되었다는 인식이다.

다음으로 4. 19 혁명 후의 통일운동에서 '민자통'은 "자주 평화 민주"[202]의 3대 원칙에 따라 "즉각적 남북정치협상", "외세배격", "남북대표자 회의를 통한 통일논의", "김일성 수상의 연방제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것이나 '중통련'은 중립통일방안[203]에서 북한의 "연방제를 반대"[204]하였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와 같이 명실상부한 통일운동은 학생들의 토론회 개최[205]와 서울대의 '민족통일연맹'[206]이 전국적인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207]으로 조직됐으며, "반외세 자주통일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

198)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35쪽.

199) '남북협상에 의한 평화통일'은 7대 원칙으로 제시되었으나 국회프락치사건으로 끝났음.

200) '평화통일론'은 당시의 '중앙정치'지 '평화통일의 길'을 통해 13개 요목으로 제시되었으며, 1957년 조봉암이 처형에 따른 당의 해체로 민중통일의 논의는 금기시 되었음.

200) ○○지역교지편집연합회, 전게자료, 93쪽.

202) 사회당 이건우은 1960년 9월에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만들어 3대원칙에 따른 4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운동을 하였음.

203) '민자통'의 3대원칙이 통일의 기본방향일 수 없다고 탈퇴한 통사당, 삼민회와 광복동지회들이 가입한 '중립화조국통일운동총연맹'이 국제회의를 통한 영세중립통일을 목표로 국민운동을 전개하였음.

204)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35쪽.

205) 1960년 9월 2일에 서울대에서는 '기성세대와 학생들간의 통일문제 심포지움'을, 9월 24일에 고려대에서는 '민족통일에 관한 문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중립화통일론이 주류로 대두되었음.

206) 1960년 11월 1일 서울대의 '민족통일연맹'이 발기되었음.

207) 1961년 5월에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이 발족되어 판문점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하는 등의 3가지를 제시하였음.

남북의 경제적 인적 교류"를 주장하였으며, 그 고리로서 "남북 학생회담 성사투쟁을 벌렸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 정권의 통일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나 "북한의 통일정책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것"[208]으로 인식하였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4. 19 혁명 후의 민중통일론이 북한의 연방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북한의 통일정책에도 어느 정도 부응되었다는 식으로 인식됐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마디로 북한의 통일논의와 같은 맥락에 정통성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민족통일

먼저 60년대에 민족주의적 정권수립과 군축주장[209]이 논문으로 발표됐으며, 자주적 통일목표의 민주사회당[210]의 발족이 있었다.

다음으로 70년대에 "통일 이상의 지상명령은 없다", "통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중의 일이다",[211] "이렇게 민주화와 통일은 떼래야 뗄 수 없이 하나다"[212]라는 통일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적 통일논의는 큰 용기를 내지 않는 한 불가능"[213]하다는 인식이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운동의 민중통일론적 문제제기가 계속되었으나 그 논의는 어려웠다는 식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창구단일화, 선도적 방북

먼저 88년의 통일운동은 88년의 "공동 올림픽 쟁취", "학생회담 성사의 자주적 교류운동"이었다. 전자는 "정권의 분단고착화 음모"와 "군사훈련 강행 등의

208)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36쪽.

209) 1964년 '세대' 11월호에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민족적 민주주의의내용과 방향"이라는 글이 발표됐으나 승공통일만이 국법에 허용된다고 법적 조치를 당했음.

210) 65년 한일협정을 반대하여 의직을 사퇴한 서민호는 민주사회당을 발족시켜 집권시 북한 당국자를 만날 용의가 있다 하였으며 국방비 절약을 위해 감군할 수밖에 없다는 유세를 하였으며 결국 의법조치 되었음.

211) 장준하는 통일이 지상명령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민중의 일이라는 민중통일을 주장하였음.

212) 문익환은 민주와 통일을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하였음.

213) ○○지역교지집집인연합회, 전게자료, 97쪽.

긴장격화 기도에 맞서 공동 올림픽 쟁취, 단일 팀 구성, 평화체제 구축"으로 여기에 자주교류을 복무시키는 수단, 투쟁공간 확대의 공간으로 설정"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후자의 남북 학생회담 성사는 "창구 단일화 논리 분쇄를 주요한 투쟁과제로 설정"하였으며, 그 의의는 "통일문제"를 "대중화, 전면화"시켜 "남한변혁운동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미-노정권의 후퇴를 강제해 내어 이후의 통일운동 전개에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으며, "대중들에게 민족자주 의식과 대단결의식을 고취"하며, 올림픽에 "대중적 반미의식이 표출"[214]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 다음으로 89년의 통일운동은 선도적 방북투쟁으로 "남북통일전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즉 대중의 관심증폭, 방북자의 구속으로 "7·7 선언 위배" 및 "정권의 반통일성이 폭로"됐으며, "남한의 민민운[215]이 독자적 주체가 되어 직접적으로 북한과 회담, 협상을 통한 합의를 도출했다" 것이다. 학생의 평축[216]참가는 "좌편향"[217]이었으나 국제적 관심과 정권의 반통일성을 높였다는 점, 남북청년학생 7개항 공동선언으로 향후 통일운동의 기본원칙으로 축적되었다는 높은 평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80년대 통일운동은 "북한의 현저한 우위는 소멸"돼 미-노정권이 "우월한 경제력(질적으로는 종속적, 기형이지만 경제총량에서는 남한이 우위다)"이나 "국제적 호조건 활용"의 '지형변화의 과도기'로 말미암아서 "침체"됐으며, "90년 범민족대회로 일정한 여건을 조성한다"[218]는 인식을 하였다. 그리고 남한변혁운동의 통일운동의 기본원칙으로 "민중적 변혁의 관점 견지", "남한변혁운동 역량의 독자적 통일운동으로의 주체화", "통일운동과 남한대중의 정치, 경제적

214)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40쪽.
215) 민민운은 민족민주 또는 민중민주운동의 지칭이나 운동진영의 통칭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말의 약칭임
216) 평양축전은 1989년 평양에서 열렸던 사회주의 청년학생축전의 약칭임
217)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40쪽.
218)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45쪽.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결합", "통일운동의 풍부한 대중적 기초" 즉 대중과 주체의 실천투쟁 정립, "통일운동을 민민운동의 통일단결된 하나의 힘으로 결집"[219] 이라 하였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공동 올림픽은 분단 고착화 음모에 맞섬이며, 학생회담은 창구단일화의 분쇄이며, 선도적 방북은 정권의 반통일성 폭로이긴 하였으나 침체를 결과하였으며, 범민족대회로 그러한 침체를 벗었다는 것으로 인식됐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범민족대회가 당연시됨도 시사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일차자료의 원용대로 운동의 통일논의에 대해 민족해방운동진영은 정치사회진영의 통일논의까지도 포함시켰으나 실제적으로는 4. 19 이후부터의 민중통일 논의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의 통일논의는 "연방제의 긍정적 검토"나 혹은 "북한의 통일정책에 어느 정도 부응했다"는 것으로서 민족해방운동론적 전통과 연결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3대 혁명역량의 유기적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며, 특히 남한의 변혁운동 역량에 의한 통일운동의 발전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민족해방혁명운동으로서의 연북적 통일운동을 교훈[220]삼으라고 했을 것이다.

나. 統一論議의 主要槪念

다음으로 민족해방운동진영의 실상은 통일논의에 나타난 개념들이 어떻게 정의됐느냐를 추출하므로써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 추출은 분단과 통일, 그리고 통일운동의 순으로 접근되었다.

1) 分 斷

첫째, 분단은 "제국주의 정책의 강요로 체제대립의 형식을 띠고 반도의 허리를 갈라 놓음"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40여년간의 시간은 분단을 "민족내부에 계급

219)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47쪽.
220)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40쪽.

문제까지 중첩"[221]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분단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저지하는 내용과, 체제간의 대립이라는 형식의 통일"로 정의되었으며, "국내정치 세력"과 "미국이 전적으로 분단의 담당자"가 된다면서 "주체세력의 한계"라는 문제도 없지 않으나 "남로당"[222]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국주의가 "민족형성의 공로자"이면서도 "민족통일을 가로 막는 매국·매족적 책동자"[223]로 되었다.

셋째, 분단은 "진영(체제)간 모순, 민족모순, 국내 계급모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224]으로 정의되었다. 다시 말하면 현상적으로 "남북간의 체제대립"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인 역관계에 있어서는 "미제와 민족내 반민족적 분단지향세력 ... 과 한반도 민중을 주체로 하는 통일지향세력간의 민족모순의 특정한 한 표현"이며, 또 "남한 사회의 제모순을 담보하는 총체적인 표현"[225]으로 정의되었다.

넷째, 분단의 성격은 "현재는 '체제대립'[226]과 '민족모순'[227]이 내재화된 상태"[228]라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분단의 성격은 "미, 일 외세 및 매판지배세력 대 민족자주역량의 (계급적 대립을 포함한) 민족모순이 주요측면이며 여기에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구조화 됨에 따른 체제간 모순이 부차적 측면으로 결합"[229]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단의 성격에 대한 바른 입장은 "분단모순이란 (국내의 계급적 대립을 포함한) 민족모순을 주요측면으로 하며, 체제모순을 부차적 측면"[230]으로 하는 것이다.

---

221) 김우정, 분담모순의 재확인, [백두에서 한라], 1988, 20쪽.
222) 상게자료, 15-16쪽.
223) 상게자료, 6쪽.
224)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11-112쪽.
225) 백두에서 한라까지, 통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1988, 28쪽.
226) '체제대립'의 내재화는 북한의 사회주의로의 발전과 남한의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화를 의미하였음.
227) 민족모순이란 미국의 신식민지정책이 직접적 무력개입을 전제로 남한 예속부르조아지를 육성하여 간접 지배구도의 확립이라 하였음.
228) 김우정, 상게자료, 16쪽.
229)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16쪽.
230)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14쪽.

족모순의 특정한 표현으로 정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족모순은 주요모순으로, 체제모순은 그 부차적 측면으로 규정됐다고 할 수 있다.

2) 統 一

첫째, 통일은 "우리시대 주요모순을 극복하는 사회운동의 총체"[233]로 정의되었다. 즉 통일은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완전한 민족해방과 민주주의적 변혁의 과제를 완수하고, 남북이 하나로 합쳐 민중이 주인되는 조국을 건설하는 일"[234]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민족사의 요청이 "당위"나 "분단으로 다른 체제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분단이 우리의 자주적 삶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235]으로 규정 되었다.

둘째,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해 나라와 민족이 둘로 갈라짐으로써 생긴 문제"[236]라는 것이다. 즉 외세의 "지배와 간섭 종식", 민족의 "자주권 완전 실현",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통일문제가 "한반도 민중의 내정문제"이며 오직 한반도 사람 자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237]는 것이다. 여기서 분단의 주요측면을 해결하는 과제는 "남한의 엔엘피디 변혁단계에서의 주요목표(자주, 민주, 통일)의 하나"가 되며, "엔엘피디 변혁에 의한 연방제 통일이 통일국가의 상"으로 되며, 이러한 성과에 기초한 "완전한 계급해방(즉 노자모순의 철폐)"으로 나아가 남북이 상부구조에서 뿐만 아니라 토대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통합되어 분단모순의 부차적 측면인 체제간의 모순을 극복하는 단계로 발전해 간다[238]는 설명을 하였다.

세째, 통일은 "그 자체로 전한반도 차원의 변혁의 완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완성을 향해 나가는 필수적이며 중요한 과정"이며, "민중의 변혁의지를

233) ○○지역교지편집위원회, 전게자료, 109쪽.
234) ○○지역교지편집인연합회, 전게자료, 109쪽.
235) 김우정, 전게자료, 6쪽.
236)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게자료, 28쪽.
237)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게자료, 28쪽.
238)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16쪽.

실현해 나가는 것이 통일의 기본적 내용이며 이는 한반도 전체변혁운동을 완성하는 기본동력이 될 것"이라 하였다. 민중은 "식민지 민족해방운동과 반외세 민족자주화운동, 자주적 평화통일운동의 주체세력"[239] 된다.

이상과 같은 민족해방운동진영의 일차자료의 인용을 통해서 '통일'은 민족모순을 해결하는 사회운동의 총체로 정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일은 남한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단계의 주요목표의 하나로 그 방안은 연방제이며, 노자모순의 철폐인 계급해방으로 가는 주요모순 해결의 한 운동으로 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統一運動

첫째, 통일운동은 광의로 "조국통일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남북 해외 동포들 모든 민족의 애국적인 운동"으로 "남한의 사회변혁운동과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운동 또한 그 구성부분으로 포함"되며, 협의로는 "남한 민중에 의해 수행"되는 크게는 "조국통일과업 수행"을, 작게는 "남한의 사회변혁 실현에 봉사하는 그러한 운동"[240]으로 정의되었다.

둘째, 통일운동은 현단계에서 "자주화운동"인 동시에 "계급운동"[241]으로 정의되었다. 자주화운동의 범위는 "남한사회"인 반면 통일운동의 범위는 "한반도 전체사회"이며, 자주화운동의 주체는 "남한사회의 민중"이나 통일운동의 주체는 "한민족 전체"이다. 따라서 자주화운동은 "조국통일의 선차적 과제"로 된다고 하였다.

셋째, 통일운동은 광의로 "민족자주화와 민주화 그리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통한 민족공동체의 삶의 발전의 길을 여는 것까지 포함하는 전체"이며, 실질적으로 "남한 사회의 식민지적 역사 현실 앞에서 제기되는 국방,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제 영역에서의 자주권의 회복은 미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이땅에서 완전히 몰아낸다"로 정의되었다. 여기서 "미제를 몰아내는 과정이 곧 진정한 민주완성과 조

239)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게자료, 30쪽.
240)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25쪽.
241) 김우정, 상게자료, 20쪽.

국통일의 과정"이 된다.

현단계 변혁운동은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데 우리 사회의 주요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주화운동이 중심 축이며 나머지는 자주화운동을 확대 강화시켜주는 공간 역할"[242]이라 하였다. 남북한의 민족자주역량은 "모두 미제 및 매판세력에 대항하여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운동세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북한의 자주역량은 "국가권력의 형태로 존재"되는 반면 남한의 민족자주역량은 "체제 도전적인 세력으로 존재"되는 등 "존재방식", "대중의식 및 정서"[243] 차이가 있다. 즉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미제가 남한에서 나가도록 하며 그밖에 다른 나라 세력이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미제의 대리통치 세력인 군부독재 반민주세력을 배격하여 한다는 해석"[244]을 덧붙였다.

여기서 기장 중요한 동력은 일제를 몰아내고 반제반봉건 민주변혁을 이루려는 조선민족 민중과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미제의 남한 강점 및 이와 결탁한 친일반미 세력간의 대립, 즉 (국내 계급대립을 내포한) 민족모순"[245]이라는 것이다.

넷째, 통일운동의 의의는 "미국의 민족분열정책을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운동"이며, "민주의 민족 자주의식화에 중요"[246]하며, 민족·민주운동과 통일운동은 동시적 전개이나 "통일운동은 민족·민주운동의 핵심적 내용"이며, "민족·민주운동은 통일운동의 실천적 과정"[247]이라 하였다. 그러나 현단계는 "변혁운동 내부의 개량적 소부르조아적 통일론을 철저히 분쇄하고 통일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하는데 "분단성격의 민족모순 환원론, 그리고 "체제모순 환원론"이 통일운동의 가장 큰 "이론적 장애"[248]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섯째,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으로 먼저 "자주"는 "외세의 식민지 지배 혁파",

242)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게자료, 29쪽.
243)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16쪽.
244)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게자료, 32쪽.
245)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11-112쪽.
246) ○○지역교지편집인연합회, 전게자료, 136족.
247) ○○지역교지편집인연합회, 전게자료, 88쪽.
248) 김우정, 전게자료, 27쪽.

"매판세력 일소", "민중의 통일 주체화"이며, 다음으로 "평화"는 "평화체제 구축", "주한미군과 핵무기 철수"이며, 마지막으로 "민족대단결"은 "사상, 제도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민족적인 단결을 이룩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북연공의식 고취"를 통한 "분단세력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본질을 폭로, 타격"[249]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섯째, 통일혁명(R=Revolution)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인 동시에 외세에 의해 일시적으로 갈라지면서 비롯된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없애고 민족인 단결을 이룩하는 문제"[250]라는 규정을 하였다.

일곱째, 남한변혁과 조국통일의 공통성은 "한국 민중이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운동의 본질과 목적을 가지며, 미제와 사대매판세력을 그 대상"으로 하며, 차별성은 '범위'에 있어서 남한변혁운동은 "남한사회를 그 범위"로 하고 통일운동은 "남북 해외동포까지 포함하는 해외동포까지 포함하는 전민족"이며, '일차적 운동목표'에 있어서 남한변혁운동은 "남한에 민족 자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며, 통일운동은 "남북연방제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며, '주체'에 있어서 남한변혁운동은 "남한 민중들"이며 북과 해외의 민족자주역량은 "지원역량"이며, 통일운동은 "남북 민중과 해외 동포를 비롯한 전민족"[251]이라는 것이다.

여덟째, 범청학련 납측본부는 1993년에 "범청학련 남측본부 안"을 제시했으며, 연방제통일안의 정당성은 "타연방과의 차이", "애국애족적 통일방안"임에 있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252]이라는 자평을 하였다. 그러므로 "연방제 통일이야 말로 통일 3대 원칙에 맞는 올바른 통일방안"[253]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범민련은 통일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과 같은 민족해방운동진영의 일차자료의 인용을 통해서 통일운동은 남한

249)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19-120쪽.
250)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17쪽.
251)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23-124쪽.
252) ○○대 범민족대회 준비위원장, 통일학교, 1994, 2-3쪽.
253)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21쪽.

에서 민족모순을 해결하겠다는 자주화운동으로 정의되었으며, 미제를 몰아내는 민주완성이자 연방제 통일의 과정으로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혁명은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없애는 민족적 단결의 전국적 실현이며, 남한에 있어서는 NLPDR의 자주, 민주, 통일의 목표에서 자주를 중심삼아 민주, 통일로 그 확대, 강화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운동의 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며, 그 주체는 남북 해외의 전민중이다.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통일방안은 바로 연방제 통일방안이라는 등이다.

다. 南北韓의 統一方案에 대한 認識

그 다음으로 민족해방운동진영의 실상은 남북한의 통일방안이 어떻게 인식됐느냐를 밝힘으로써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밝힘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방안, 그리고 남북군축 방안의 순으로 접근되었다.

1) 南北韓 統一方案

민족해방운동진영의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인식은 다음 〈표 3-2〉와 같다.[254]

이 〈표 3-2〉과 같이 남한의 '국가연합 방식의 통일방안'[255]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비교에서는 첫째, 통일국가의 '구성'에 있어서 남한은 1국가 1민족 1정부 1체제이나 북한은 1국가 1민족 2체제 2정부로 대별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상적 기초'에 있어서 남한의 방안이 대립, 대결지향의 분열주의 사상에 기초됐다는 비판적인 지적이나, 북한의 방안은 그렇지 않는 민족대단결의 사상에 기초됐다는 것이다.

---

254) ○○동부총련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94 범민족대회, 1994, 15-16쪽.

255) '국가연합방식'의 통일방안은 지난 8월 15일에 발표된 현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전의 현정부 통일방안으로 89년에 발표됐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3단계 통일방안'을 새롭게 더한 것을 표현한 것임.

〈표 3-2〉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연방제 통일방안	국가연합방식의 통일방안
원 칙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자주, 평화, 민주
구 성	1국가 1민족 2체제 2정부	1국가 1민족 1정부 1체제 (교류협력, 국가연합, 완전한통일국)
방 식	민족이익 최우선시 그 실현과정의 단결	교류협력 강화로 동질성 회복 적당한 시기 민주적 선거로 단일국가 구성
사상적 기초	민족대단결 사상 모든 차이 초월 민족앞에 단결	분열주의 사상 대립, 대결지향
분 석	민족이익 최우선시 공존 공영 공리원칙 입각 자주적 평화통일 방안	흡수통일 지향 국가연합과정의 대결구도 극대 불화로 전쟁 가능성 심화(예멘)

세째, '분석'에서 남한에 대해서는 흡수통일 지향, 국가연합 과정의 대결구도 극대, 예멘과 같은 불화로 전쟁 가능성이 심화된다는 비판적인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민족이익 최우선시, 공존 공영 공리원칙에 입각하였으며, 자주적 평화통일 방안이라는 긍정적 분석을 하였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민족해방운동진영은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기준으로 삼아서 남한의 통일방안만을 비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방안은 한마디로 평화적 통일방안으로 정당시된다는 것이나 남한의 통일방안은 그 반대로 비판적으로 부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國家聯合案의 問題點

민족해방운동진영은 남한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256]의 문제점을 북한의 연

256)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1994년 8월 15일에 발표된 현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공식화되기 전의 정부의 통일방안으로 89년에 발표됐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3단계 통일방안'으로 정리된 것임.

방제 통일방안과 대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표 3-3〉과 같이 제시하였다.[257]

이 〈표 3-3〉과 같이 남한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첫째, 창구 단일화의 민(民) 참여를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남한은 교류협력 문제만 다루었을 뿐 정치 군사는 배제시켰음에 문제가 있다. 셋째, 기능적 통합론의 기계적 적용은 유럽 공동체 교훈(경제 문화접촉, 정치 군사 통합 상태)과는 전제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적용시켰다. 즉 유럽공동체는 나토의 군사동맹체제안이나 남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북은 조-소 우호협조조약을 맺었으며, 유럽공동체는 자본주의 국가로 동질이나 남은 자본주의, 북은 사회주의[258]라는 것이다.

〈표 3-3〉 국가연합안의 문제점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국가연합안)
전민족회의, 상설위원회	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국
연방자치제를 완결태	총선거를 통한 체제통일을 완결태
창구 다원화, 관민의 참여	창구 단일화, 민의 참여 배제
정치군사, 교류협력문제	교류협력 문제만
전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정상회담
주권은 연방정부가 가짐	주권은 각 지역정부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민족해방운동진영은 북한의 연방제를 정당시하는 입장과는 다른 남한의 통일방안의 모든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음을 알 수 있다.

3) 南北軍縮方案과 南北合議書 比較

민족해방운동진영은 90년대 통일운동의 진로에서 "포괄적 평화보장안과 올바른 통일방안의 선전선동에 기초하여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결구조를 혁파하기 위

257) 범청학련 남측본부 00지구, 통일 1세대, 1994, 32-33쪽.
258)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00북부지구 청년학생 통일학교, 통일 1세대, 1994, 39-40쪽.

한 투쟁을 중심으로 틀어 쥐고 남북간의 다방면적 교류와 합작을 증진할 투쟁을 유기적 결합"으로 하는 중심투쟁 과제가 "비핵군축투쟁"[259]이라 하였다. 이러한 남북한의 군축방안과 남북합의서 비교는 다음 〈표 3-4〉와 같다.[260]

이 〈표 3-4〉와 같이 군축문제는 비교적 사실적 수준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행간의 의미는 남한이 반비핵군축(反非核軍縮)적으로 판단되도록 대비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단편적이나마 다음의 인용으로 그 의미를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핵군축투쟁은 "분단의 실질적, 물리적 장벽제거의 핵심투쟁"이며, "국제정세의 변화에 가장 정확히 부합되는 투쟁"이며, "통일투쟁이 높은 수준으로 전면화되기 위한 핵심고리가 되는 투쟁"[261]으로 그 의의를 삼으라 하였다.

둘째, 비핵군축은 "미제와 남한 사대매판세력들의 남한 지배를 궁극적으로 담보하는 반동적 물리력을 무장해제시키는 투쟁"이며, "우리 민중들에게 그 고통의 근원을 낱낱이 폭로하여 민중의 구체적 이해와 민접히 결합된 투쟁"이며, "다종다양한 투쟁의 가능성을 가진투쟁"이며, "미-노정권의 반통일성을 가장 극면히 폭로할 수 있는 투쟁"[262]이라는 하였다.

셋째, 남북합의서는 "즉각적 이행"[263]을 요구하면서 합의서 이행이란 바로 남한의 "법 제도적 장치 철폐"[264]가 되며, "군대를 줄이고", "이산가족의 한을 풀고", "남북경제의 균등발전"이 되며, "전면적 교류로 민족대단결"이자 "통일논의 활성화"[265]라 하였다.

넷째, 실체상 정전협정인 휴전협정은 "전쟁을 잠시 쉬자는 약속"이며, "준전시상태"이며, "전쟁준비 상태"라 하였으며, 정체상 강화조약인 평화협정은 "전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전쟁 당사자간의 적대적 긴장관계

259)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48쪽.
260) 수산대 조통위, 우리 심장의 맹세를 믿어다오, [통일학교], 1993, 16쪽.
261)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48쪽.
262)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 전게자료, 150쪽.
263) ○○대 사회대 범민족대회준비위원회, "통일, 우리 모두가 가야할 길", 1993, 2쪽.
264) 상게자료, 3쪽.
265) 상게자료, 4쪽.

〈표 3-4〉 남북군축방안과 남북합의서 비교

	남 한	북 한	합 의 서
골격	1.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2. 불가침 선언 채택 3. 군비 감축 4.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환	북남신뢰 조성 북남무력 감축 외국무력의 철수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불가침 선언 군사적 신뢰조성 군축 검증
군사적 신뢰조성	군인사 방문 교류 군사정보 공개와 교환 군부대 이동과 훈련 통보, 참관 직통전화 설치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외국군과 합동훈련 중단 사단급 이상 훈련 금지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중단, 군사연습 사전통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직통전화 설치 군사분계선 일대의 도발행위금지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인사의 교류 및 정보교환
군비감축	공격형 전력을 방어용으로 전환 병력 많은 측이 먼저 감축 무기감축에 따라 병력감축 상비전력에 맞게 예비전력 감축 군사력의 최종수준 쌍방합의	3단계 병력감축(1단계 30만선, 2단계 20만선, 3단계 10만 아래) 병력감축에 맞게 장비폐기 병력감축 1단계에서 민간군 해체 신무기 생산과 반입금지	대량살상 무기와 공격능력 감축을 위한 단계
검증기타	남북공동검증단과 상주 감시단 운영 남북한과 관계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 평화보장 장치 강구	무력감축 상호통보와 현지사찰 비무장지대 중립 감시군 배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운영	검증협의 추진 남북군사공동위 설치

를 우호선린 혹은 화해의 관계로 바꾸는 협정"[266]이라는 것이다. '평화협정으로의 이행'에서 그 내용은 "북미간의 대결관계 해소"이며, 그 체결은 "남북한과 미국 3자 사이에 해결할 문제"이며, 체결을 위해서는 "남북 기본합의서 5조"의 합의라 하였다. 이제는 "미국이 평화협정에 호응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할일은 "반미반전"을 외치고 "평화협정의 체결을 강력히 주장"[267]하는 것이라 하였다.

다섯째, 남북합의서 이행투쟁은 "국회에서 정식 비준절차를 거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268] 그리고 "민족의 대단결이 아닌 통일 즉 영토와 재산의 봉합, 즉 북을 압살, 남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면 분단지속이 도움된다는 판단"[269]을 하였다. 더욱이 북미 3단계 회담을 전망하면서 전쟁책동 보류의 대화국면은 "제재조치 성과 불확실"이며, "전쟁시의 북에 대한 두려움과 승리에 대한 불확실성"이며, "국제 반전평화세력의 강력한 반발"[270]로 인식하였다. 여기서 전쟁시 북에 대한 두려움이 미국으로 하여금 대화로 나오게 만들었다는 식의 행간적 의미는 전쟁반대의 군축적 맥락과는 상반적인 시사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민족해방운동진영의 남북한 군축방안 및 남북합의서 비교는 한마디로 비핵군축이 반동적 물리력의 무장해제이며, 합의서 이행 또한 남한의 법, 제도적 장치의 철폐라는 식으로 해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남한 비판용임을 숨기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북한의 군축관련 대남 주장과도 구별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自主統一論과 聯邦制 統一方案

마지막으로 민족해방운동진영의 실상은 그 통일론과 방안을 밝히는 것으로 드

266) 상게자료, 9쪽.
267) ○○동부총련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전게자료, 13쪽.
268)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00북부지구 청년학생 통일학교, 전게자료, 13쪽.
269)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북부지구 청년학생 통일학교, 전게자료, 17쪽.
270) ○○동부총련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전게자료, 17쪽.

려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밝힘은 자주통일론과 진영 및 계파간의 비판, 그리고 연방제 통일방안의 순으로 접근되었다.

1) 自主統一論과 陣營間의 批判

(1) 自主統一論

자주통일론은 남한이 비자주(非自主)의 식민지반자본주의[271] 사회성격에서 해방되어 자주의 북한과 통일해야 한다는 운동론이다. 이러한 운동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272]

첫째, 남한사회는 정치체제상 미국의 군사적 강점아래 놓인 "식민지 대리통치체제"이며, 경제체제상 "반(半)자본주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의 주요모순은 "남한민중과 제국주의(와 그 예속세력)"이며, 그에 따른 남한변혁은 식민지성의 극복을 과제로 하는 "민족해방혁명(NLR)"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주사파는 남한변혁을 위한 구체적인 투쟁노선으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3대투쟁도 "'반미자주화'가 중심 축"이며, '반파쇼민주화'와 '조국통일투쟁'은 "자주화를 위한 실천공간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둘째, 북한사회가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민주기지이므로 북한의 변혁역량에 대해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주사파는 통일에 각별한 의의를 둔다"하였다. 즉 분단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고 대소전진 기지로 삼으려고 남한을 무력으로 점령한 데" 있으며, 그 후 "미제국주의자와 남한의 꼭두각시 정권이 민족분단을 고착화하는 책동"으로 '남한의 식민지를 가속화하였다"는 것이다. 분단모순은 "체제대립이라는 현상에 가려있는 민족모순"이며, 민족문제는 "민족의 자주권을 전국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 하였다.

셋째, 통일은 "외세에 의해 일시적으로 갈라지면서 비롯된 남북의 대립과 갈등

271) 식민지반자본주의란 주체사상에 따라 한국 사회성격의 규정이며, 그에 따른 운동이론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론이며, 이 이론대로 운동하는 진영은 다른 운동진영에 의해 "주사파", "엔엘(NL)파", 식민지반자본주의 진영으로 지칭됨.

272)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32-33쪽.

을 없에고 민족단결을 이룩하는 것"이므로 "근본적 변혁을 이루기 전에 시급히 이루어야 할 전민중적 염원"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조국과 민족의 통일이지 사상과 제도, 이념과 계급의 통일은 아니다"라 하였다. 따라서 조국통일의 실현은 "계급 계층 이념을 뛰어 넘어서 단결하는 것"이다.

넷째, 통일해 나가는 국가권력은 "민족자주정권"이다. 그러므로 통일의 경로는 "민족자주정권이 남한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이루어가면서 북한의국가와 통일연방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즉 통일경로는 "파쇼타도 미제축출－민족자주정권－연방공화국"[273]이라 하였다.

이와같은 민족해방운동의 일차자료의 인용대로 자주통일론은 주체사상이 제시한 자주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의 하나로서의 통일이라는 맥락의 통일론으로 북한이 대남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운동등으로 제시한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3대 목표 중의 하나라는 통일론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陣營間의 批判

민족해방운동진영의 자주통일론에 대한 비주사파[274]의 비판은 한마디로 "북한의 남한 혁명론과 통일론에 의존한다"면서 "감상적 민족주의 이상"일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였다.[275] 첫째, 체제모순의 발현인 분단을 단순히 민족모순으로 돌릴 수 있는가? 둘째, 분단의 성격이 각 시대를 거쳐 오면서 변화된 측면을 주사파가 무시하지 않았는가? 세째, 자주 민주 통일의 3대 영역론이 본래부터 이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네째, 통일의 요구가 각 계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통일이 전민족적 요구라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통일의 필요성을 우편향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반주사파는 "민중권력에 대한 전망이 필연적으로 빠지는 우익 기회주

273)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8쪽.

274) 비주사파는 원칙으로 민중해방운동이나 노동해방운동진영을 말하나 그밖에도 주사파를 비판하는 운동진영을 계파구분 없이 통칭할 때도 있음.

275)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33쪽.

의 통일론"이라 하였으며, 그 핵심적 오류는 "통일운동에 노동자 계급성을 각인하는 데 무관심한 채 통일의 절대적인 가치로만 제시할 뿐"이라는 것이다. 즉 "분단체제 안에서 확대 발전한 자본주의적 착취질서를 타파할 변혁에 대한 전망과 통일운동을 내용상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같이 민족해방운동의 자주통일론은 한마디로 자주가 주체사상의 목적이라는 점을 따질 필요도 없이 북한의 대남 통일론에 의존되었다는 다른 운동진영의 비판적 지적처럼 북한의 대남 사회주의화 통일론과 구별되지 않음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고 할 수 있다.

2) 聯邦制 統一方案

민족해방운동진영의 자주통일론에 따른 통일방안은 널리 알려진대로 연방제이며, 지금까지 구체화 된 연방제 통일방안은 범청학련 남측본부[276]에 의해 제안된 통일방안 뿐이다. 먼저 이 안은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과 다음 〈표 3-5〉와 같이 대비적으로 고찰될 수 있다.

〈표 3-5〉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과 범청학련 남측본부안

구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범청련안
통일국가의 형태	국가 형태 연방국가 -체제차이 인정의 완전한 연방국가 -구성은 남북동수 해외동포	연방국가 -성격은 자주성 -이념은 민족적 -구성은 남북동수 해외 적당수
형태와 성격	대내 관계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회의 -민주주의민족연합군조직 -남북간 교류 협조 -지역정부 지도	전민족회의-최고의사결정기구, 통일헌법과 각료구성권 상성위원회-집행, 지역정부지도, 전민족회의 소집 제안 통일정부군 조직

276)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북부지구 전개자료, 31-38쪽.

	대외 관계	단일국호·의석의 유엔가입, 중립 비동맹 반블럭, 비핵평화지대화	반블럭 중립노선
	국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의 추진 과정	과도기		
	단계		
	추진 기구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민족통일준비위원회 당국 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언급 불명확)	전민족통일협상회의
	구성 방식 역할 수행	정부 정당 사회단체	남과 북, 해외
과도기 과제	정치 경제	남한 사회의 민주화 전면개방과 자유왕래 남북교류, 협력, 합작	자주권 보장, 평화적 환경 민족대단결의식 고양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군사	신뢰구축 실질적 군축 병행, 외국병력(미군, 핵) 철수 미·북 평화협정 남·북 불가침 선언	
	법/제도	국보법, 안기부법 폐지 기무사, 안기부 철폐	
통일 주체		남·북 해외 전민족 (당국 정당 사회단체)	범민련 범청학련
주변국 관계		외세 배격 자주적 입장 통일은 민족내부 문제	외세 배격 자주적 입장

이 〈표 3-5〉에서 대비된 바와같이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그들 자신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277] 먼저 '전문'에서 미제국주의가 분단의 원흉이자 평화통일 반대의 장본인이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강령으로 하였으며, 남북합의서가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통일은 이미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하까'의 청사진 단계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연방제야 말로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이라면서 첫째로 '전제조건'은 민족대단결 의식의 고양이라 하였다. 여기서 평화적 환경의 과제는 주한미군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화, 3불(三不)의 비핵지대화이며,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은 군사적 신뢰, 불가침 선언, 군축실현, 자유왕래라 하였다.

둘째, '연방정부의 성격과 국가이념'에서 성격은 자주성, 동맹 블럭 불가담의 중립노선이며, 국가이념은 민족적 이익, 남북민중 복지, 평화이다.

셋째, '연방정부의 조직과 구성'에서 우선 구성원칙은 남북동수와 해외 적당수이며, 그리고 조직은 전민족회의, 상설위원회이며, 권한은 전민족회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통일헌법과 그 집행의 각료구성 권한(연방정부 수반과 국호는 통일헌법 제정후), 상설위원회는 민족회의 결정 집행 및 지역정부 지도, 전민족회의 소집제안권이 있다. 또 연방정부의 임무는 공동문제 해결, 통일적 발전과 합작, 남북 각계각층 의사 존중이다.

넷째,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의 관계'는 연방정부가 지역정부를 지도하며, 그 지도하의 지역정부는 민족의 이익과 요구대로 지역정부 및 남북간의 차이 줄여 나간다.

다섯째, '통일후 연방정부의 민족, 민중을 위해 할일'은 자주정책 및 블럭 불가담, 민주주의 실시 및 민생안정, 해외동포 권리 신장 옹호, 대외관계 올바로 처리, 통일정부군 조직 및 운영, 자주교류, 합작 교류의 민족경제 자립 발전, 과학기술, 민족교육, 통일예술 실시 발전이다.

그 다음으로 '당면투쟁 과제'에서는 전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투쟁을 하라 하였다. 그 이유는 이 회의를 통해 남북 당국자, 각계각층 대표, 개별인사 등 총

277)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북부지구 전게자료, 35-36쪽.

망라로 통일방안 협의,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민족해방운동진영의 일차자료에서 인용된 범청학련 남측본부 통일방안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통일방안으로서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없이 일치되는 방안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앞으로 북측본부와의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안이라는 사실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민족해방운동진영의 자주통일론과 그에 대한 다른 진영의 비판, 그리고 그 연방제 통일방안은 한마디로 북한의 주체사상의 자주라는 목적을 남한에서 실현하겠다는 것의 다름 아닌 것으로 진영내의 이견조차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民衆解放運動陣營의 統一論議

가. 統一論議의 歷史

먼저 민중해방운동진영의 실상은 그간의 통일논의를 어떻게 해왔느냐를 인용하므로써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인용은 남과 북, 그리고 운동의 순으로 접근되었다.

1) 南韓과 관련된 統一論議

(1) 6. 25 남침

먼저 6. 25는 "남북한, 운동, 주변 4강이 모두 전쟁에 참여" 했으므로 북한의 "무력통일론"[278]에 따른 도전에 한국과 유엔이 응전하였다는 식으로 북의 남침을 시사적으로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이승만 정권은 "유일 합법정부"며, 북한은 "실지"이며, "괴뢰정권"이라는 전제를 기초로 한 "무력통일"[279]을 제시하였으며, "미국의 군사적 힘"이나

278) 정대화, 90년대 남북통일문제의 조망, 1990, 216쪽.

279) 진보정당결성을 위한 정치연합00지부, 남북한 당국의 통일논의 과정과 그 배경, 1989, 7쪽.

UN의 권위에 의지하므로써 자신의 "반민중, 반통일적 성격을 은폐"[280]하려 하였다는 비판적 인식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50년대는 "분단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통일이라는 이상, 즉 서로 자기체제로의 상대방 체제제를 흡수할 것에 집착하였다"[281]는 평가적 인식을 하였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6 . 25 전쟁은 북한의 무력통일론에 따른 도전에 한국과 유엔군이 응전하였다는 정도나마 북한의 남침을 분명히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이 미국의 군사력이나 유엔에 의지하므로써 반민중, 반통일성을 은폐하였다는 비판도 하였으며, 또 남북이 서로 자기체제로 상대방을 흡수하려는 통일에만 매달렸다는 양비적인 인식도 했다는 것이다.

(2) 7. 4 공동성명

먼저 한국에서 4. 19와 5. 16 사이의 통일논의는 남북교류, 남북협상, 중립화 통일론으로 폭발됐으나 장면 정권은 기존의 원칙고수로 "보수성과 소극성"을 띠었으며, 다양한 통일논의의 비판이라는 "수세적 입장"[282]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5. 16 후 박정희의 "선건설 후통일"[283]정책은 "미국의 신식민지정책의 반영"[284]으로 "분단 고착화 논리"에 지나지 않으며, 국내의 "양심적 지식인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격화"로 맞은 위기를 7. 4 공동성명[285]으로 "탈피"[286]하였다는 인식이다.

그 다음으로 60년대 정부의 통일논의는 이전과 성격상 차이가 없었다. 즉 "북

280)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4쪽.
281) 진보정당결성을 위한 정치연합00지부, 전게자료, 7쪽.
282) 진보정당결성을 위한 정치연합○○지부, 전게자료, 8-9쪽.
283) 공산주의와 대결하여 승리할 토대를 쌓기 위해 먼저 자본주의 공업화를 꾀하고 통일을 내일로 미루자는 논리를 말함.
284)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 한, 미일 삼각 안보체제를 강화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말함.
285) 이 즈음에 서독의 브란트 정부가 '동독정부를 승인한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지않는다' 서독의 외교원칙인 할슈타인 정책을 폐기하였음.
286)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4쪽.

한정권은 인정할 수도 없었고 타협해서는 안된다"는 반공적 입장으로 "선건설 후통일"[287] 지향이었다. 그러나 70년대의 통일론은 60년대의 "경직된 통일론"에서 "단계론적 접근방법"으로 교류협력론 내지 평화공존이라는 "선평화 후통일론"[288]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국제적 보장을 기하려 했다는 인식이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장면정권은 수세적 입장이었으며, 박정희정권은 미국의 신식민지정책 반영으로 선건설 후통일의 분단 고착화 논리를 따랐으며, 반독재 민주화의 격화를 7. 4 공동성명으로 탈피하였다는 역사적 인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는 교류협력 및 평화공존이라는 선평화 후통일의 단계론적 접근법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을 기하였다는 식의 하나의 노력으로 인식하였는 등이다.

(3)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

먼저 '7. 7 선언'은 "북방정책의 활로 모색"이나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를 통한 남한정권의 정당성 확보"이며, 대북의 "개방화와 고립화라는 적극적 공세를 취하였다"[289]는 인식이다. 그러나 80년대 정부의 통일정책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평화 후통일론"[290]으로서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지향하였다는 인식이다.

다음으로 82년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단일국가"의 "자유민주주의"[291]로의 통일로 인식하였으며, 이것은 EC공동체를 이론화한 "기능적 통합론"이며, 남북연합 기구가 2개 국가의 상설연합 기구이기 때문에 "2개 국가의 합법화, 분단 고착화일 가능성이 크다"[292]는 비판적 인식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통일의 당면과제는 "긴장완화와 적대관계 해소", 7. 4 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지키며, 남북한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통일문제에 관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래서 통일논의가 "정

287) 진보정당결성을 위한 정치연합00지부, 전게자료, 11쪽.
288) 진보정당결성을 위한 정치연합00지부, 전게자료, 13쪽.
289)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4쪽.
290) 진보정당결성을 위한 정치연합00지부, 전게자료, 14쪽.
291)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6쪽.
292)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6쪽.

권의 전유물"이나 "집권층의 정권유지를 위해 악용"[293]되지 못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의 단일국가로 통일을 하겠다는 기능적 통일론으로서 분단 고착화의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7. 7 선언은 북방정책의 활로모색이나 사실은 남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에 있다는 인식을 하였는 등이다.

이상과 같은 일차자료의 인용대로 남한 통일논의에 대해 민중해방운동진영은 북한의 남침과 그에 따른 무력통일론, 선건설 후통일론, 선평화 후통일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의 단계론적 흡수통일이라는 반민중적 통일의 역사로 인식하였는 등이다. 이러한 남한의 통일논의에 대한 인식은 한다디로 민중해방운동적 인식의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2) 北韓과 관련된 統一論議

(1) 6. 25 남침

먼저 6. 25 전쟁은 "식민지 민족해방론"에 입각한 "무력통일"[294]의 "공산혁명"으로 실패하게 되자 김일성은 53년 8월에 "민주기지"[295]의 안정화를 위해 "미군철수와 남북총선거"[296]라는 평화통일을 제의하였다는 인식이다.

다음으로 이 때의 특징은 "북한에서의 공산기지를 건립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45년에서 53년까지는 "민주노선에 따른 적극적인 통일정책"[297]을, 54년부터 60년까지는 "경제복구기"로의 "평화통일안"[298]의 제시였다는 인식이다.

그 다음으로 50년대 후반 "선민주기지 건설 후통일론"의 "인민민주혁명 통일론"은 3단계로 "한국내 인민민주주의 혁명 성취", "정권의 공산화", "평양정부와

293) 진보정당결성을 위한 정치연합○○지부, 전게자료, 15쪽.
294) ○○대 총학생회학술부, 백두와 한라를 잇자, 1988, 32쪽.
295) 진보정당결성을 위한 정치연합00지부, 전게자료, 8쪽.
296) 진보정당결성을 위한 정치연합00지부, 전게자료, 8쪽.
297)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5쪽.
298)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5쪽.

의 통합"[299]으로 인식하였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민주기지는 북한에 공산기지를 건설하려는 전략이며, 6. 25 전쟁은 북한의 대남 공산혁명이라는 민주기지노선의 적극적 통일정책의 결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전쟁의 실패에 따른 민주기지의 안정화 필요에서 경제복구와 평화통일안을 제시하였는 등이다.

(2) 4. 19 혁명

먼저 북한은 "우세한 경제발전"으로 통일문제에 "여유"가 있었으며, 4. 19가 일어나자 "북한을 지지하여 일어난 인민봉기"로 규정하고 "남북협상만이 유일한 통일방법"이라고 선전하였으며, 또 "연방제 통일방안"[300]를 처음으로 제의하였음이 특징이라는 인식이다.

다음으로 북한은 광의로 평화통일이었으나 실제로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조선의 통일론"으로 기울었다. 이러한 사실은 61년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과 북조선의 애국적 사회주의 역량과의 단합, 62년 "4대 군사노선"으로 뒷받침 되었다는 인식이다.

그 다음으로 60년대 "과도적 남북연방제 통일정책" 시기로 "국방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 채택"의 "지역혁명"[301]을 제시했으며, "지역혁명으로서의 남한혁명을 엔엘피디알로 규정"하였다. 73년의 '조국통일 5대강령'의 제시는 "자주적 총선거 통일방안의 폐기"[302]라는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70년대 북한의 통일론은 "선통일 후기능통합의 논리"로 "정치, 군사문제의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통일문제를 민족 내부의 문제로 강조"[303]하였다는 등이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4 . 19는 북한을 지지해 일어난 인민봉기로 받아들여져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제안되게 하였으며, 그래서 광의의 평화통일 기조 아래

299) ○○대 총학생회학술부, 전게자료, 32쪽.
300) 진보정당결성을 위한 정치연합○○지부, 전게자료, 9—10쪽.
301)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5쪽.
302)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5쪽.
303) 진보정당결성을 위한 정치연합○○지부, 전게자료, 14쪽.

3대혁명역량의 강화와 4대 군노선 등의 대남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한국혁명으로 기울은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한의 지역혁명론으로는 민주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이 제시되었으며, 총선거식 통일방안을 폐기하는 조국통일 5대강령도 제시되었는 등이다. 그러나 70년대의 북한 통일론은 선통일 후기능통합과 통일의 민족내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高麗民主聯邦制

먼저 북한의 80년대는 "선통일 후기능통합의 논리에 입각하여 정치, 군사문제의 일괄처리를 주장"[304]하였으나 실제로는 "고려민주연방제" 제안의 시기라 할 수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1국가 2체제의 연방국가"로의 "중립국가"로 제안할 당시와는 달라진 "태도변화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며, "단일국가에 대한 전망이 없다"[305]는 등을 문제로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의 통일이란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이며,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투쟁"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른 통일론의 3가지 구체화는 먼저 6. 25 전쟁은 "식민지 민족해방론"에 입각한 "무력통일"[306]이다. 다음으로 50년대 후반 "선민주기지 건설 후통일론"의 "인민민주혁명 통일론"은 3단계로 "한국내 인민민주주의혁명 성취", "정권의 공산화", "평양정부와의 통합"[307]의 순서이다.

그 다음으로 "연방제통일론"은 "중간단계적이고 불완전한 형태"의 초기와는 달리 "완전한 통일형태로 강변하나" "국가연합(Confederation)"[308]과 "연방(Federation)"[309]의 성격을 띠는 "과도기적"이며, "한국정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통일론이 변화되나 아직도 식민지 민족해방이라는 시각이 남아 있다"[310]는 것이다. 또 연방제는 "단계적 통일론"이며, 그간의 변화도 "명칭만 다를 뿐

304) 진보정당결성을 위한 정치연합00지부, 전게자료, 15쪽.
305)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7쪽.
306) ○○대 총학생회학술부, 백두와 한라를 잇자, 1988, 32족.
307) ○○대 총학생회학술부, 전게자료, 32족.
308) 국가연합적 성경은 양 체제를 인정한다는 점임.
309) 연방적 성격은 기존 조약을 폐기하여 대외정책을 조정한다는 뜻임.
310) ○○대 총학생회학술부, 전게자료, 32족.

커다란 차이가 없다"[311]는 것이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고려민주연방제는 단일국가의 전망이 없는 것으로 비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통일론이 식민지 해방투쟁이자 사회주의 혁명투쟁으로서 ① 한국전쟁은 그에 따른 무력통일의 기도이며, ② 선민주기지건설 후통일론은 인민민주통일론(한국내 인민민주주의 성취후, 그 정권의 공산화, 평양정부와의 통합)이며, ③ 연방제는 식민지민족해방 시각의 과도기로 전개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차자료의 인용대로 북한 통일논의에 대해 민중해방운동진영은 북한이 6. 25 남침의 공산혁명에 실패한 후 4. 19 혁명을 인민봉기라면서 광의의 평화통일 명분아래 사회주의 혁명의 통일로 기울었으며, 60년대에는 NLPDR의 지역혁명으로 총선거에 의한 통일방식을 폐기하였으며, 통일의 민족내부화를 통한 선통일 후기능통합의 정치군사적 일괄타결로 제안하였는 등으로 민족해방운동의 사회주적 통일로서의 역사인식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논의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한마디로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통일이라는 사실적이며 본질적인 인식을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 運動과 관련된 統一論議

(1) 民主基地

이 당시 통일논의는 "민주기지론"과 "남한혁명론"이며, 전자의 북로당 민주기지론과 후자의 남로당 남한변혁운동론[312]은 논쟁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인식이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통일이 북한의 민주기지와 남로당의 변혁운동이라는 차원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6.25 남침

먼저 6. 25 전쟁은 "무력에 의한 선통일 후변혁의 민주기지론이 한국전쟁으로 외화"된 것이며, 미국이 "개입"하므로써 "전쟁을 매개로 한 통일운동은 실패로

311) 상게자료, 34족.

312) 정대화, 90년대 남북통일문제의 조망, 1990, 215쪽.

끝나고 그 결과 분단의 고착화가 초래되었다"[313]는 인식을 하였다.

다음으로 민주기지는 "실천과 무관하게 실패"됐으나 "실패를 당한 남한의 입장[314]에서 본다면, 남한변혁을 위한 전략으로써 민주기지 채택이라는 문제와 미국의 개입이라는 문제가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남한 내부의 통일과 반통일의 대립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적 조건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이 근본적이고 규정적이되 일차적 요인으로 제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315]는 외인론[316] 비판적 인식을 하였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6. 25 남침은 무력에 의한 선통일 후변혁이라는 민주기지론의 외화(外化)로서 북한의 남침전쟁이었음을 분명히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으로 민주기지론은 실패 되었으며, 남한의 입장에서는 통일실패의 일차적 요인이 미국과 민주기지노선의 오류에도 있다는 식의 외인론을 비판하였음도 알 수 있다.

(3) 4. 19 혁명

4.19 혁명기에는 "민자통, 중통련",[317] "장준하"[318]의 통일언급을 통일운동의 논의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 후 "민중통일 열기"[319]는 "반공법과 데모 규제법 등의 악법"으로 대처되었다는 인식이다. 그렇지만 이 때의 "민자통"과 "중통련"간의 통일논의는 5. 16 군사쿠테타라는 반통일적 조치로 인해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4 . 19 혁명이 민중통일의 열기를 확산시켰다는 인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악법과 쿠데타로 종결됐다는 인식도 덧붙였다.

313) 상게자료, 216쪽
314) 남한의 입장은 남로당의 남한혁명을 통한 통일인식의 지칭임.
315) 정대화, 전게자료, 217쪽.
316) 외인론은 분단의 원인이 제국주의라는 외인에 찾는 이론으로 내부의 책임을 면책하는 문제점이 있음.
317) 정대화, 전게자료, 216쪽.
318) 정대화, 전게자료, 216쪽.
319) 민중의 통일열기는 자주적 통일론, 남북협상론, 남북교류론, 중립화통일 론 등을 말함.

(4) NL과 PD계파

먼저 문익환 등의 "민중통일론"[320]이 있었으나 "NL"계파와 "PD"계파간에 통일논의가 그 주류였다는 인식이다. "민중운동이 88년 이후 통일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통일운동과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관계문제가 핵심적인 대립 축으로 작용"되었다는 것이다. 즉 "88년 이후 통일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NL진영에 대한 PD진영의 문제제기"로 사실은 "그간의 논의에 대한 PD진영의 일방적인 문제제기"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논쟁은 "민중운동의 일정한 성장시점에서 불가피한 문제제기"이며, "문제의식 또한 신선한" 측면이 있어서 "민중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강화에 기여"[321]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80년대에 들어 "남한의 문제가 변혁의 관점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했다"면서, 그것은 '변화된 조건'에서 운동의 '복원'으로 이해되며, 아울러 한국전쟁 이전에서 채택되지 못한 이른바 '남조선혁명론'의 "대안으로서의 역사적 복원"[322]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통일운동과 변혁운동의 "역사적 관계의 일면을 이해"[323]하지 못하는 추상적 설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진영의 통일논의는 사실상 민족해방운동진영의 NL계파와 민중해방운동진영의 PD계파간에 전개되었으며, 그 점에 있어서 90년대도 80년대의 연장이라는 전망적 인식을 하였다.

이러한 민중해방운동의 통일논의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남북, 정부와 운동, 운동간의 통일논쟁으로 취급한 다음의 〈표 3-6〉이 참고적 사례로 될 수 있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민중통일론은 NL계파의 주도에 대한 PD계파의 신선한 문제제기였다는 식으로 후자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인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민주기지의 통일실패에 따른 대안으로서 80년대의 통일은 남한변혁운동의 복권이라는 식으로 남로당의 남한혁명으로서의 통일론에 정통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여졌다. 그래서 통일논의와 운동이 90년대도 NL

320) 정대화, 전게자료, 216쪽.
321) 정대화, 전게자료, 214쪽.
322) 정대화, 전게자료, 217쪽.
323) 정대화, 전게자료, 218쪽.

계파에 대한 PD계파의 문제제기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상과 같은 일차자료의 인용대로 운동의 통일논의에 대해 민중해방운동진영은 민주기지는 실패되었으며, 4. 19의 민자통과 중통련의 통일논의는 5. 16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NL계파의 통일논의에 대해 PD계파의 신선한 문제제기에 있다는 식으로 민주기지의 대안으로서 남한혁명운동으로서의 통일운동론이 복권되어야

〈표 3-6〉 통일논쟁의 역사

시기	남 한 / 북 한	정 부 / 운 동	운 동 / 운 동
1946 1948 1949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의 반대/지지(찬반탁) 단정수립/단정반대(남북협상) 북진통일론/민주기지노선		민주기지론/남조선혁명론
전쟁	남북한, 운동, 주변 4강이 모두 전쟁에 참여(무력통일론)		
1950	유엔 감시하 총선/중립국 감시하 총선		
	북진통일론/평화통일론	북진통일론/평화통일론(진보당)	
4.19	유엔 감시하 총선(평화통일노선)/중립국감시하 총선	총선/민자통(중통련)	〈민자통/중통련〉
1960	위 선거방식하에서 선건설 후통일/남북조선 연방제	/장준하	
1970	위 총성방식하에서 교차승인론/고려연방고오하국	/김대중	
1980	민족화합민주통일/고려민주연방공화국	/문익환 김대중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민중통일론	(NL/PD)

주 : 한국전쟁 이전에는 남북관계와 정부-운동관계 구분은 무의미

한다는 남로당에 정통을 두는 전망적 역사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남한혁명운동에서 남로당의 통일운동론을 찾아 그 정통을 세우겠다는 전망도 시사

되는 민중해방운동사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나. 統一論議의 主要槪念

다음으로 통일논의에 나타난 주요개념이 어떻게 정의됐느냐를 추출하므로써 민중해방운동진영의 실상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추출은 분단, 통일과 통일운동의 순으로 접근되었다.

1) 分 斷

첫째, 분단은 "하나의 모순구조가 현실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내용물을 체제간의 모순으로 나타내고 있다"[324]고 정의되었다. 즉 분단모순은 체제모순이라는 것이다.

둘째, 분단문제는 "분단문제 해결=통일이라는 도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분단이 각각의 남북한 사회구성체에 어떻게 내면화되어, 각각의 발전을 질곡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야하는 것"[325]으로 설명되었다.

세째, 분단문제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결합된 것", 즉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가운데 분단이 확대 재생산 되고 내면화 되었다"[326]는 것이다.

이와같은 민중해방운동진영의 일차자료의 인용에서 '분단'은 체제모순, 민족모순의 결합으로 정의되었으나 자본주의 발전으로 확대 재생산된 체제모순으로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체제모순이 기본모순으로, 민중모순이 주요모순으로 시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統 一

첫째, 통일에 대해 PD계파는 "민중적 통일"[327]로, ND계파는 "민족민주변혁의

324) 학생연합, 대장정, 1993, 78쪽.
325) 진보정치대학생연합, 우리에게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3, 26쪽.
326)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계자료, 8쪽.
3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교과위원회, 전계자료, 8쪽.

일환"[328]으로 정의하였다. 그래서 통일은 "남한의 민주변혁과 북한의 개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남한의 민주변혁은 한반도 차원에서의 변혁 완성을 위한 결정적인 담보"[329]라는 인식을 하였다.

둘째, 통일은 "사회주의 국가와의 통합"이므로 "남한에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수립되고 북한의 사회주의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였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반제반독점 민중전선이 불리하다는 '약한 고리론'대로 통일논의와 통일투쟁을 하지말자는 논리[330]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셋째, ND계파는 통일이 "사회주의건설 이전에 반동권력과 미제를 타도하는 투쟁"이며, 통일의 필요가 "분단의 민중고통 제거", "남한변혁을 가로막는 장애 제거", "남북한 민중은 굳건한 동맹관계"[331]협성, "민중권력을 통한 통일 추진"[332]이라는 맥락에 있다고 하였다.

넷째, 민중적 통일은 "남북한 각국내 계투에서의 주요한 모순으로서 계급관계를 기본골격으로 한다".[333] 즉 민중이 추구하는 통일은 "민중 일반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에 참으로 부합하는 통일"[334]이다. 그러므로 통일문제는 "현상적으로 민족을 재결합하는 것"이나 신식국독자[335]사회에서 통일은 "본질적으로 분단을 확대 재생산하는 신식국독자 자체를 없애는 문제"[336]라 하였다.

이와같은 민중해방운동진영의 일차자료의 인용에서 '통일'은 체제모순의 해결로 정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일은 남한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극복의 PD, ND혁명의 완성 후에 남북한의 체제모순을 1국가 1체제로 극복하는 것으로 그 방안은 민중통일방안이다. 따라서 민중모순 해결의 PD계파의 통일과 민족민주 모순 해결의 ND계파(지금은 ND과제 포함의 SR계파의 통일)의 통일로

328)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8쪽.
329) 학생연합, 전게자료, 78쪽.
330)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8쪽.
331)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8쪽.
332)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9쪽.
333) 진보정치대학생연합, 전게자료, 26쪽.
334) 학생연합, 전게자료, 90쪽.
335) 신식민지국가독점지본주의의 약칭임.
336)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8쪽.

달리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統一運動

첫째, 통일운동은 "남한의 민주변혁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운동의 발전을 질곡하는 제반구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민주변혁수행의 전술적 영역"[337]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므로 당면의 통일운동은 "남한의 민중변혁과 북한의 민주개혁의 일환으로 변혁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져야 한다"[338]는 것이다.

둘째, 통일운동이 "통일을 가로막는 방해자를 없애는 것"이므로 통일과 통일운동을 구별된다는 것이다. 통일운동은 "독자적 전개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속에서 파생되는 여러 사안, 쟁점을 남한 사회 계급간의 대립 속으로 포섭해 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민중적 통일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대개혁 투쟁의 일환으로써 배치하고 우리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339]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운동의 주체는 "남한 민중"이며, "북한은 통일의 주체이지만 동시에 대상이 된다"[340]고 하였다. 여기서 민중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중"[341]이라는 것이다.

세째, 통일운동은 "남한의 반제반독점 민주변혁을 수행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한에서만 지지한다"[342]는 것이다.

이와같은 민중해방운동진영의 일차자료의 인용에서 통일운동은 남한에서 체제모순을 해결하겠다는 민중통일운동이나 민주변혁단계의 전술적 운동으로 정의되었으며, 자본가·관료·지주나 자본가계급 타도가 민주변혁 완성이자 통일과정으로서 남한의 민중운동과 북한의 민주개혁도 변혁운동의 연장선상의 운동으로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면의 통일운동은 남북간의 파생문제를 남한사회의 계급대립 속으로 포섭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일운동의 주체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중이며, 북한은 통일의 주체이자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진

337) 학생연합, 전게자료, 79쪽.
338) 학생연합, 전게자료, 80쪽.
339) 진보정치대학생연합, 전게자료, 27쪽.
340) ○○대 총학생회 학술부, 전게자료, 30쪽.
341)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9쪽.
342)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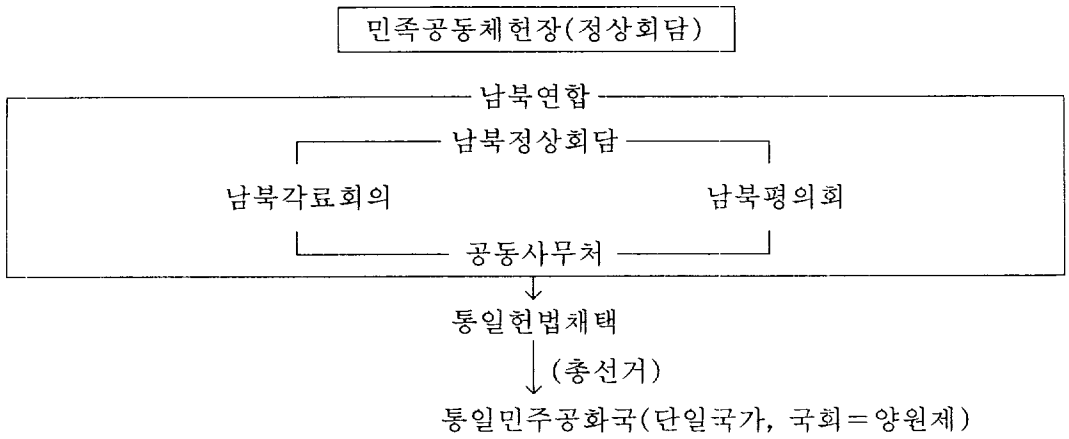
영의 통일된 통일방안은 없으나 민중모순이 해결된 후에 체제모순 해결하는 과정의 민중통일이라는 PD계파의 통일운동과 사회주의운동과 함께되는 ND계파의 통일운동으로 세분될 수는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통일방안은 개략적으로 민중적 통일방안으로 묶어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다. 南北韓의 統一方案에 대한 認識

그 다음으로 민중해방운동진영의 실상은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느냐를 밝힘으로써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밝힘은 남북한의 통일방안의 순으로 접근되었다.

1) 南韓의 統一方案

민중해방운동진영의 '한민족공동체'[343] 통일방안에 대한 인식의 인용은 다음의 〈도 3-3〉과 같으며, 거기서 지적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344]



남북정상회의 : 최고의사결정기구. 남북각료회의 : 협의조정과 실행보장기구.
남북평의회 : 통일준비기구(통일법안 마련). 공동사무처(실무지원기구).

〈도 3-3〉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343) 88년 노태우 대통령은 7·7 선언, 유엔 총회의 개막연설, 그리고 11월에 국회에서 발표한 것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안'임.

344)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6쪽.

이 〈도 3-3〉과 같이 먼저 남한(88년)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사실적으로 도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문제점은 첫째, "통일 3대 원칙을 자주, 평화, 민주"로 제시하여 7. 4 공동성명의 3대원칙 중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포기하는 대신 민주(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였다는 것이다".

둘째, 문화, 경제교류로 정치군사적 통합도 가능하다는 EC적 "기능적 사회통합"이며 남북한은 "체제가 확연히 달라", 교류 또한 "긴장적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긴장완화의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통일일정에 대한 "규제장치"와 각종 남북연합 기구에서 "통일을 성사시키는 제어장치"가 없으며, 또 현존 남북정권 당국이 "과연 전폭적인 주민의 지지를 받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넷째, "남북연합 기구는 단일국가의 국가기구"가 아니고 "2개 국가의 상설적 협의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2개 국가의 합법화, 분단고착화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것은 바로 "2국가 2체제"가 된다는 문제라 하였다.

다섯째, "민족공동체 형성만 강조할 뿐 분단구조 철폐에 우선 요구되는 남북 군사정치적 적대관계의 해소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차적이거나 소극적이다"라 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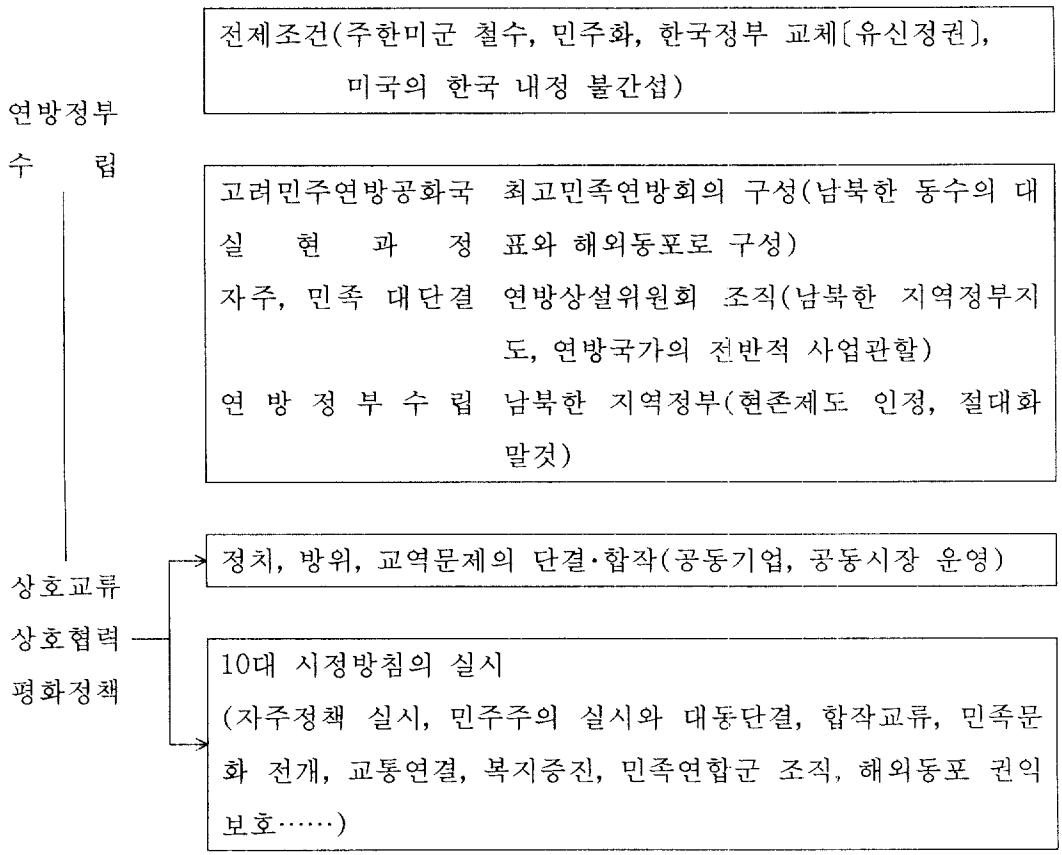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민중해방운동진영은 남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2개 국가의 합법화, 분단고착화일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비판적 인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北韓의 統一方案

(1) 實現의 諸段階

민중해방운동진영은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실현의 제단계'를 다음의 〈도 3-4〉와 같이 제시하였다.[345]

345) ○○대 총학생회 학술부, 전게자료, 34쪽.



〈도 3-4〉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실현의 제단계

이 〈도 3-4〉와 같은 인용처럼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실현 제단계가 사실적으로 일목요연화되었을 뿐 특별히 덧붙여진 인식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실현단계별 주장을 모두 망라하므로써 그 선전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민중해방운동진영은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에 대해 그 실현의 제단계를 북한의 주장 그대로 사실적인 도해를 하였을 뿐 특별한 언급을 덧붙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聯邦制의 變化

민중해방운동진영은 그간의 연방제 변화를 다음 〈표 3-7〉[347]과 같이 제시하였다.

347) 정대화, 전게논문, 211쪽.

〈표 3-7〉 연방제의 변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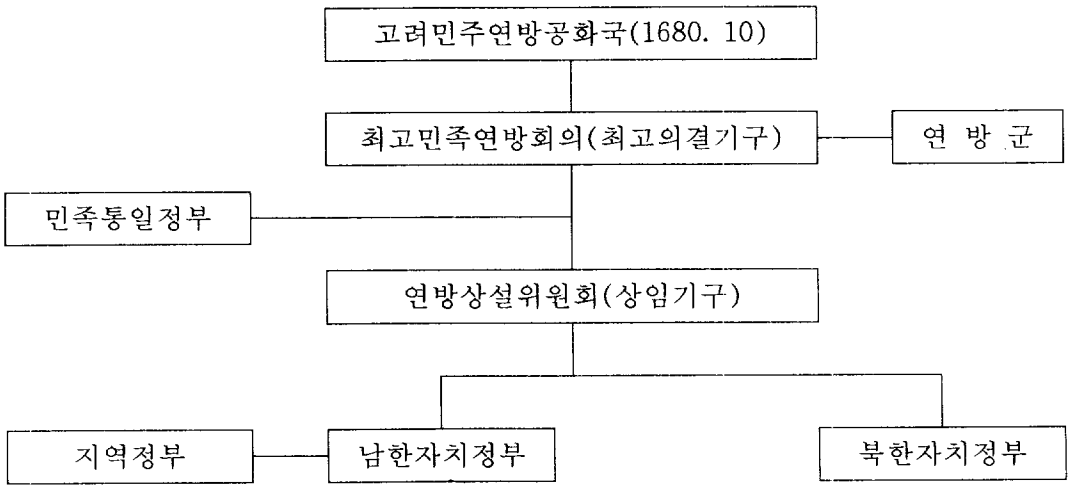
구분	제 1 단 계	제 2 단 계	제 3 단 계
제의	1960. 8. 15	1973. 6. 23	1980. 10. 10
명칭	남북조선 연방제	고려연방공화국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단계	남북한 총선거를 위한 중간단계		총선배제, 최종적 통일방안
구성	남북한 정부대표로 최고민족회의 구성	남한정부 배제한 대한민족회의 구성	남북한 동수와 해외 대표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회의 조직
권력	남북정부가 중심·두정부 활동 보장		중앙정부 중심 : 중앙정부와 두개의 남북 자치정부
역할	비정치적 목적	비정치적 문제와 외교문제(유엔가입)	정치, 경제, 외교, 군사문제 모두 포괄
남북차이	중간단계에서 남북한간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최종단계에서 해소)		통일의 단계에서도 사상과 제도의 차이 인정(통일후 처리)
조건	연방제를 위한 전제조건 없음	남북한 정부 배제 (평화적 전도)	미군철수와 사회 민주화 (남한정부의 명시적 배제없음)
초점	경제문제에 집중 (북한의 경제성과)	'두개의 한국 저지'와 경제문제 혼합	'두개 한국 저지'와 긴장완화에 촛점
남한변혁	남한변혁에 대한 언급없음	평화적 전도의 3가지 방도중 택일	남한변혁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음

이 〈표 3-7〉과 같은 인용처럼 북한의 연방제 변화가 사실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망라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연방제가 합리적 이유없는 필요에 따른 변화라고 지적하므로써 사실상 비판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민중해방운동진영은 연방제의 변화과정에 대해 한마디로 비판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北韓의 高麗聯邦制와 問題點

민중해방운동진영은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국안'에 대해 다음의 〈도 3-5〉와 같이 제시하여 그 문제점도 지적하였다.[347]



민족통일정부 : 남북한 같은 수의 대표와 적당수의 해외동포로 구성.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정치, 국방, 대외관계를 비롯하여 전민족의 이익에 관계되는 공동문제 토의, 결정(연방국가=중립국가, 1국가 2체제)

〈도 3-5〉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이 〈도 3-5〉와 같이 먼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의 문제점으로 첫째, 80년 제안후에 달라진 "입장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현재로선 불분명" 하다. 둘째, "연방군과 지방군의 충동시 제어할 장치"가 없다. 셋째, "남북에 상존하는 정치경제체제를 그대로 두는 1국가 2 체제의 연방국가라 할 때 주민들의 자유로운 여행이나 거주이전이 허용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전망"이 없다. 넷째,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단일체제의 통일국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없다"는 등이다.

다음으로 민중해방운동은 통일운동이 "견지해야 할 몇가지 사안"[348]으로 첫째,

347) 전국○○원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6-7쪽.

348)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7쪽.

"어떠한 통일방안이든 현존하는 남북한간의 적대적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조처들을 통일방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즉 "남한의 국보법, 북한의 형법 13조 철폐, 핵무기 감축, 외국군 철수, 통일인사 석방 등"이다. 둘째, "남북한 통일방안의 기조는 남북한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함을 원칙으로 '1국가 2체제, 연방제' 이후 1민족 1국가 1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망이 밝혀져야 한다". 셋째, "민족 민주운동에서의 민중적 합의에 의해 도출되는 통일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통일논의는 정권차원의 전유물이 되거나 일부 지식인 집단의 논의대상이 될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첫째, PD계파는 북한의 통일론이 대단히 "부정적"이라면서 ① 고려민주연방제를 포함 북한의 통일정책에 한결같이 관철되는 "민주기지론"은 "남한 해방론과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의 북한 유일 담보론"일 뿐이다. ② 북한이 "남한혁명을 민족자주정권 수립방침으로 바꾼 것은 남한혁명을 실제로 포기한 것으로 결국은 남한혁명의 유산에 따른 분단 고착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349]는 등이다.

둘째, ND계파는 "북한의 지도 이념과 남한에서의 주사파의 변혁운동을 비판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이 통일운동에서 가지는 위치를 중시하고 북한의 통일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① 북한의 공동 올림픽 제안과 노정권의 민족대교류가 서로 "즉각 거부"되었으나 범민족대회에서 "통일을 실지로 진전시키려고 애쓰는 등 남한 혁명진영과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② "체제와 이념을 뛰어 넘는 연방제라는 원칙은 당면 민족민주변혁에서 기본적으로 견지할 통일방안"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안은 타당한 것이다".[350] 즉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제 통일방안은 ND계파가 유사하게 받아들였으나 PD계파는 분명히 부정하였음에도 차이가 엿보이는 것이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민중해방운동진영은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349)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33쪽.
350)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33쪽.

에 대한 문제점으로 그 간의 태도변화 문제, 연방과 지방군 충돌문제, 주민의 연방내 자유로운 여행 및 거주이전 문제, 단일체제에 대한 전망이 없는 등을 지적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일차자료의 인용대로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민중해방운동진영이 양측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다같이 비판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연방제 방안의 경우에는 계파간에 정반대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비판적 인식의 핵심은 바로 남한의 방안이 분단 고착화나 흡수통일안이라면 북한의 방안은 체제통일의 전망이 없다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라. 民衆統一論과 民衆的 統一方案

마지막으로 민중해방운동진영의 실상은 통일론과 그 방안을 밝힘으로써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밝힘은 민중통일론과 진영 및 계파간의 비판, 민중적 통일방안의 순으로 접근되었다.

1) 民衆統一論과 陣營間의 批判

(1) 民衆統一論

민중통일론은 남한의 반민중적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351] 사회구성체에서 해방됨과 함께 북한 또한 민주개혁을 통한 민중사회가 된 후에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운동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구성체를 공유하는 PD계파와 ND계파의 통일 운동론에도 차이는 있다.

먼저 PD계파의 통일논의[352]는 첫째로 분단은 "제국주의에 의한 강요가 국내 계급투쟁을 매개로 관철"되었으나 이후 "남한이 예속적 자본주의의 길을 걸으며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분단문제가 "민족모순과

351)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란 한국사회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구성체라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른 민족민주혁명론(NDR), 민중민주혁명(PDR)이론대로 운동하는 진영이며, 다른 운동진영에 의해 민족민주(ND)계파, 민중민주(PD)계파로 지칭됨.

352)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33쪽.

계급모순"의 결합이라는 성격을 가졌다. 즉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가운데 분단이 확대 재생산되고 내면화되었다"는 파악이다. 그러므로 "분단의 성격이 변하면서 통일의 위상도 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은 "현상적으로 민족을 재결합하는 방식과 경로 문제이지만, 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에 있어서 통일이라는 것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자체를 없애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 통일경로는 "반제반독점 민주변혁을 이룩한 뒤 세워질 남한의 민중민주주의 국가와 북한이 과도적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즉 그 경로는 "파쇼타도, 미제축출→민중권력→연방공화국"이다.

넷째, 통일과 통일운동을 구분하여 통일은 "민중적 통일"을 말하며, 통일운동은 "민중적 통일을 가로막는 방해자를 없앤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민족국가의 혁명적 전화인 민중적 통일은 민중민주변혁을 이루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선변혁 후통일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다섯째, 현재 민중진영내에서 "민중이 반제반독점 전선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통일논의와 통일투쟁은 하지말자는 약한 고리론"도 제시되었다.

여섯째, 통일은 "사회주의 조국건설"이며, 통일은 "남한에 프롤체타리아 독재가 수립되고 북한에 사회주의가 정립됨을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사이의 통합"이다. 그리고 통일문제에 대해 어떤 "전술"도 내지 못하는 "통일무용론"을 비판하면서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통일투쟁을 활성화하여 반파쇼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353]

다음으로 ND계파의 통일논의[354]는 첫째로 통일은 "사회주의 건설 이전에 반동권력과 미제를 타도하는 투쟁"이며, 통일의 필요성은 "분단으로 인한 모든 민중의 고통 제거"라 하였다. 둘째, 통일은 "남한변혁을 가로 막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민족민주변혁의 일환"이다. 세째, "남한과 북한 민중의 굳건한 동맹관계 수립"이라는 것이다. 넷째, 통일경로는 "민중권력을 통한 통일추진을 유일한

353) 이러한 '선언그룹'의 인식은 전국00원노동조합 00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33쪽에서 재인용.

354)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34쪽.

지향점으로 제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부르조아, 소부르주아 헤게머니 밑에서 통일이 주도될 가능성을 인정"이며, 이러한 통일투쟁도 "고무하고 혁명적으로 발전시켜 노동해방 동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등이다.

이와같은 민중해방운동진영의 일차자료의 인용대로 민중통일론은 PD계파와 ND계파간에 차이를 보이며, PD계파라도 독점자본과 파쇼중에서 어느 것을 선타도의 대상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연방제에 대해 ND계파가 자기논리를 내세워 수용하였으나 PD계파는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중통일론의 골격은 대동소이하게 유지되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陣營間의 批判

민중통일론에 대해 먼저 NL계파는 "PD진영의 통일론이 민족모순을 사상한 채 분단과 통일 문제를 계급모순 차원에서만 보려고 하는 계급모순 환원론적 통일론이며, 또 통일이 현실에서 갖는 의의를 부정하고 먼 뒷날의 일로 돌리는 선변혁 후통일론이며, 그 결과 이들이 실천에서 패배주의적 태도를 보인다"[355]고 비판하였다.

다음으로 PD계파에 대해 ND계파는 "통일운동이 당면한 남한사회의 혁명을 앞당기는 중요한 열쇠"라면서 "약한 고리론"을 비판하였다. 즉 "통일운동을 통해 북한 민중과 결합할 가능성를 만들고, 반노태우전선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동권력과 미제국주의의 고립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과 통일운동을 나누는 사고는 "통일을 사회주의 건설문제로 바라보면서 통일이 당면혁명 뒤에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좌편향"이며, "통일을 열망하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반노태우 투쟁으로 묶어내는 데 실패할 수 밖에 없다"[356]는 비판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ND계파에 대해 PD계파는 첫째로 "노동자 계급의 통일투쟁이 반파쇼투쟁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관점은 잘못된 것"이며, 둘째, 민중정권이 연방제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북한의 통일론을 받아 들이는 것은 절

355)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33쪽.
356)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33쪽.

충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 사고방식"[357]이라는 비판이다. 더구나 전략적 의미를 지닌 북한의 연방제안[358]을 전술적으로만 해석한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등이다.

민중해방운동진영은 이와같은 운동진영의 통일론이 "남한정부의 기만적 공세적 통일론"과는 달리 "진지함과 논리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좌우편향을 지니는 한계도 있었다"면서 "과학적 통일론을 정립"하는 과제[359]는 첫째로 "통일문제를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한다". 즉 "사회주의시장을 향한 독점자본의 요구에 따르는 공세적이고 우익적인 통일론, 남한변혁운동과의 결합을 고려하지 못하는 맹목적 감상적 통일운동, 또 당면변혁에서 노동자계급의 헤게머니를 흐리게 하는 어떤 통일운동도 변혁운동 지향의 통일운동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둘째, "남한의 여러 모순과 민중의 고통에 대한 근본원인을 분단문제로 돌리면서 모든 운동의 범주를 통일문제로 해소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분단의 성격변화에 따른 통일위상도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통일투쟁에 대한 계획으로서 전술을 시급히 확정해야 한다". 즉 통일운동에서 어떻게 노동자 계급주위에 소부르주아를 결집할 것인가, 통일운동을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배치하고 전개할 것인가의 고민을 통해 대안을 실천적으로 마련하라 하였다는 등이다.

이와같이 민중통일론에 대한 비판은 일차자료의 인용대로 NL계파는 민족모순의 계급모순 환원이자 통일을 비현실적으로 보는 선변혁 후통일의 패배주의라 하였으며, PD계파는 ND계파적 해석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통일투쟁이 반파쇼투쟁에 집중될 수 있다는 관점은 잘못이며, 연방제 통일의 추진은 북한을 수용하는 절충주의 사고방식이며, ND계파는 PD계파적 해석에 대해 약한 고리론과 통일과

357)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34쪽.

358) 인민노련, 민족의 통일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견해, 1990, 전국00원노동조합 00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34쪽에서 재인용.
이를테면 PD계파의 인민노련은 고려민주연방제를 지지하였으나 ND계파는 인민노련의 통일위상은 좌편향이며, 남북정부의 합의에 의한 교차승인과 유엔 동시가입도 분단을 대내외적으로 승인하여 국제적 연대를 상실하고 통일문제가 더 이상 계급투쟁의 주요쟁점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하였음.

359) 전국○○원노동조합 ○○지부교과위원회, 전게자료, 35쪽.

통일운동의 구분, 사회주의 건설로 통일을 바라봄은 노동자와 민중을 반파쇼전선으로 묶는데 실패하였다는 등이다. 이렇게 볼 때 민중통일론은 대동(大同)적으로 공유되는 부분만큼이나 소이(小異)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통일론의 전개라 할 수 있다.

2) 民衆的 統一方案[360]

민중해방운동의 통일방안은 그 내부간의 다수의 이견처럼 그 방안에서도 합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민중적 통일방안이란 방향은 같으나 그 차이가 존재하는 통일방안으로서 민중'적' 통일방안이라는 '적'(的)자의 사용으로 그 미봉적 개념화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유되는 1국가 1체제라는 민중적 통일방안은 첫째로 신식민지 상황에서 한반도 분단문제는 "체제 혹은 계급문제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이다. 비록 미-소의 외세개입으로 분단됐으나 서로 다른 배경과 조건 속에서 국가의 성격은 "어쩔 수 없이 체제간의 대립으로 결과"됐기 때문에 "체제모순"의 해결 없이는 "민중들의 고통이 극복"[361]될 수 없다고 하였다.

둘째, "선변혁 후통일론"이 "통일의 계급성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통일국가의 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라 하였다. 왜냐하면 "변혁의 연장선상"에서, "변혁이 전제"된 통일이라야 비로소 그 통일은 "남북한 민중의 고통을 해소하는 통일다운 통일"[362]이기 때문이다.

셋째, "변혁의 과정이 통일의 과정"이지 "통일의 과정이 변혁의 과정"[363]은 아니다. 즉 "계급투쟁과 유리된 통일은 결과적으로 민중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궁극적으로 지배세력을 도와주는 경과를 초래한다"[364]는 것이다. 그래서 "파쇼하의

360) 민해방운동의 '민중통일방안'은 합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민중적 통일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사용되며, 이 개념에는 1국가 1체제, 선변혁 후통일을 공통으로 하였음.
361) 학생연합, 전게자료, 78쪽.
362) 학생연합, 전게자료, 80쪽.
363) 학생연합, 전게자료, 81쪽.
364) 학생연합, 전게자료, 82쪽.
365) 학생연합, 전게자료, 79쪽.

통일반대"[365]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남북합의에 의한 1국가 1체제로의 통일 밖에는 없다"고 하였다. 1국가 1체제로 통일된 국가는 "남한의 민주주의 변혁과 북한 사회주의의 민주적 개혁을 통한 대외적으로 자주적이며 민중이 국가권력에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적 국가체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국가 1체제로의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남북연합 내지 국가연합의 제형태들이 가능할 뿐이다"[366]라는 것이다.

다섯째, 당면 통일운동은 "남한사회의 변혁의 과정 속에 위치지움"이며, 지배정권의 통일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항전선"의 형성이며, "북한과의 조직적, 사상적 독립성 견지"[367]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민중진영의 통일운동의 목표는 "민중적 통일의 조건들을 쟁취하는 것"[368]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인용을 통해서 민중해방운동진영의 민중적 통일방안은 한마디로 '적'(的)자로 다양한 주장들을 그 내용물로 미봉하는 생성중인 통일방안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민중적 통일방안으로서 대동적으로 공유되는 논리는 선변혁 후통일과 1국가 1체제라는 통일국가의 상(像)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민중해방운동진영의 민중통일론, 그에 대한 진영 및 계파간의 비판, 그리고 민중적 통일방안은 그 출발에 있어서 다같이 노동자나 민중의 계급모순을 해결하는 데 도움되는 위상의 통일방안이자 계급모순해결의 완성으로서의 통일방안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지향점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運動陣營의 統一論議 比較

가. 統一論議의 歷史 比較

1) 6. 25 戰爭

민족해방운동진영은 6. 25 전쟁이 남한의 북진통일론과 북한의 조국해방전쟁

366) 학생연합, 전게자료, 86쪽.
367) 학생연합, 대장정, 1993, 91-92쪽.
368) 학생연합, 전게자료, 93쪽.

론의 충돌이며, 미·소대립이 빚은 대리전의 성격과 무력통일론이 혼재된 것이며, 미국이 UN군의 명분으로 위장하여 참전하였다는 것이다.

민중해방운동진영은 6. 25 전쟁에 남북한, 운동, 주변 4강이 모두 참여하긴 하였으나 북한의 무력통일론에 따른 도전에 한국과 유엔이 응전하였다는 것이다. 또 무력에 의한 선통일 후변혁의 민주기지론이 한국전쟁으로 외화된 공산혁명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비교를 통해서 6. 25는 전자가 그 원인을 사실상 남한의 북진통일론 및 미군의 유엔 위장 참전에서 찾았으나 후자는 공산혁명을 위한 북한의 무력남침에서 찾았다. 여기서 6. 25 전쟁에 대한 양자의 인식은 사실상 정반대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2) 4. 19 革命

민족해방운동진영은 4. 19가 북한에게 남한의 변혁운동역량의 존재를 다시 부각시켜 주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남북연방제가 최초로 제안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운동은 북한의 통일정책에 어느 정도 부응되었다는 것이다.

민중해방운동진영은 4. 19가 북한에게 그들을 지지하여 일어난 인민봉기로 인식되었으며, 그에 따른 연방제 통일방안 또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비교에서 4. 19는 전자가 남한의 혁명역량 존재의 알림이며, 그에 따른 통일운동 또한 북한의 통일정책에 어느 정도 부응되었다는 것이나 후자는 인민봉기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4. 19가 연방제 통일방안 제안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견해의 일치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3) 7. 4 共同聲明

민족해방운동진영은 7. 4 공동성명이 국민적 여망의 최초 합의이며, 이 후 남북한 통일운동의 원칙이 되는 역사적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통일적 작태를 노골화 하는 미국과 남한 정권에게 계속적인 명분열세의 부담도 지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 무력통일에서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평화통일론으로 바뀌었음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 점에 있어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고려민주연방제는 일치된다는 것이다.

민중해방운동진영은 7. 4 공동성명이 국내의 양심적 지식인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격화로 인한 위기 탈피용이었으며, 이 후의 경직된 통일론에서 단계론적 접근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비교에서 7. 4 공동성명은 전자가 국민적 여망의 최초적 반영의 합의로, 평화통일로 나가는 계기였으며, 이 후에 그것이 남북한 통일운동의 대원칙이 되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미국과 남한정권에게 계속적 명분열세의 부담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7. 4 공동성명이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위기 탈피용으로 단계론적 통일론으로 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달리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高麗民主聯邦共和國 統一方案

민족해방운동진영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이 다각적 교류문제의 전향적 제시이며, 진보적 운동역량의 현실적 성장을 배경으로 하는 7. 4 공동성명에서 평화통일 3대원칙을 인정한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시정방침이며, 60년대부터 제안돼 온 기존의 연방제와는 달리 매우 긴 시간 동안 두 개의 서로 다른 체제의 공존을 상정하는 획기적이며,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저지하면서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구조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한 통일분위기 조성을 꾀하는 전략기조라는 것이다.

민중해방운동진영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이 1국가 2체제의 중립국가로 중간단계적이고 불완전한 형태의 초기와는 달리 완전한 통일형태라는 강변이나 국가연합(Confederation)과 연방(Federation)의 성격을 띠는 과도기적이며, 한국정부 존재인정으로 변화되긴 하였으나 식민지 민족해방이라는 시각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그간의 변화 또한 명칭만 다를 뿐 단계론적 통일론이라는 점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비교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은 전자가 다각적 교류의 전향적이며 7. 4 남북통일 3대 원칙을 공감하는 시정방침이며 체제공존을 상정하는 획기적인 것으로 긍정하였다. 반대로 후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은

완전한 통일형태라는 강변과는 달리 과도기적이며 한국정부의 존재를 인정하여도 민족해방운동적 시각은 아직도 남아 있는 과도기의 단계적 통일방안이라는 비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5)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

민족해방운동진영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기존의 점진적이고 기능주의적인 사실상 반통일적인 통일론을 통일방안의 형태로 제시된 것일 뿐 반통일적 본질은 여전하며, 통일방안 또한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안도 마찬가지로 반통일성을 버리지 않는 정권연장 및 안보의 구실이라는 것이다.

민중해방운동진영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단일국가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기능적 통합론이며, 남북연합이 2개 국가의 상설연합 기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개 국가의 합법화, 또는 분단 고착화일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비교에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전자가 기능주의 통일방안으로서 사실상 반통일적 방안으로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였듯이 후자 또한 기능적 통합으로서 2개 국가의 합법화 또는 분단 고착화일 가능성이 크다는 동일한 맥락의 비판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6) 80年代 統一運動

민족해방운동진영은 80년대 통일운동에 대해 공동 올림픽이 정권의 분단 고착화 음모와 군사훈련 강행 등의 긴장격화 기도에 맞선 평화체제 구축으로서 대중적 반미의식을 표출시켰으며, 남북 학생회담이 창구 단일화 논리를 분쇄하는 통일문제의 대중화, 전면화의 의의가 있으며, 선도적 방북투쟁은 남북통일전선의 계기의 마련이며 그 구속은 정권의 반통일성의 폭로라는 것이다. 또 북한의 현저한 우위가 소멸돼 미국과 노정권이 우월한 경제력(질적으로는 종속적, 기형이지만 경제총량에서는 남한이 우위다)이나 국제적 호조건 활용의 지형변화의 과도기임으로 말미암아서 침체되었으나 범민족대회로 일정한 여건이 조성되었는 것이다.

민중해방운동진영은 80년대 통일운동에 대해 민중통일론과 함께 NL계파의 통일운동에 대한 PD계파의 일방적인 문제제기였지만 그것은 신선한 문제제기로서 민중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강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90년대 또한 80년대의 연장이라 하였다.

이와같은 비교에서 80년대 통일운동에 대해 전자는 공동올림픽, 남북 학생회담, 선도적 방북투쟁을 분단 고착화의 저지, 창구 단일화의 분쇄, 통일전선의 형성에의 기여라고 긍정하였다. 그러나 후자는 80년대 통일운동이 NL계파의 통일운동에 대한 PD계파의 일방적인 문제제기였으나 그것은 신선한 문제제기로서 민중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강화에 기여하였다는 자기비판적 긍정이다. 즉 전자의 80년대 통일운동의 실천적 맥락을 긍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전자에 대한 후자의 문제제기에 더 중심을 두는 긍정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主要槪念 比較

1) 分 斷

민족해방운동진영에서 분단은 체제모순, 민족모순, 남한내 계급모순의 복합적 결과로 정의 되었으며, 그것은 현상적으로 남북간 체제대립이나 본질적으로는 미제 및 분단지향세력과 민중주체의 통일지향세력간의 민족모순의 특정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민중해방운동진영에서 분단은 체제모순, 민족모순, 남한내 계급모순의 결합으로 정의되었으며, 그것은 자본주의 발전으로 확대 재생산된 체제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비교에서 분단개념의 정의는 광의로 공유되나 구체적으로는 전자가 민족모순의 특정한 표현으로, 후자가 재생산된 체제모순으로 완전히 달리 정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統 一

민족해방운동진영에서 통일은 민족모순을 해결하는 사회운동의 총체로 정의되었다. 구체적으로 남한에서 통일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운동의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3가지 목표중의 하나로 그 방안은 연방제이며, 그 후에 노·자모순의 철폐을 통한 계급해방으로 가는 운동이라고 하였다.

민중해방운동진영에서 통일은 체제모순을 해결하는 PD계파의 민중적 통일과 ND계파의 민족민주변혁의 일환으로 정의되었다. 구체적으로 남한에서 통일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를 극복하는 일환으로서의 민중민주혁명(PDR)운동이나 민족민주혁명(NDR)운동의 성공 후에 남·북한이 민중통일방안으로 체제모순을 해결하는 것이며, 당면의 통일은 민중고통 제거에 도움되는 맥락의 수준에서 선(先)민중민주 혹은 민족민주혁명 후(後)체제모순 해결의 운동이다.

이와같은 비교에서 통일개념은 전자가 민족모순을 해결하는 당면운동이라면 후자는 당면운동과 함께 되나 다음 단계에서 해결될 체제모순 극복의 운동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후자의 체제모순도 민중모순 해결에 도움이 되며 또 다음 단계에 노·자(勞·資)모순의 해결을 예비하는 PD계파의 통일과 민족민주 과제 포함의 계급모순 해결과 함께하는 ND계파의 통일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統一運動

민족해방운동진영에서 통일운동은 남한에서 민족모순을 해결하겠다는 자주화 운동으로 정의되었으며, 미제를 몰아내는 민주완성이자 연방제 통일의 과정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통일운동의 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며, 그 주체는 남북 해외의 전민중이며,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연방제 통일방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혁명은 남한에서 민족자주정부가 들어선 후에 북한과 연방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자주를 실현하는 것의 다름 아니다.

민중해방운동진영에서 통일운동은 남한에서 체제모순을 해결하겠다는 민중적 통일운동이나 민주변혁단계의 전술적 운동으로 정의되었으며, 자본가·관료·지주를 타도하는 남한의 민중민주나 민족민주혁명을 완성하는 수단적 과정이자 북한의 민주개혁도 함께 선행되어야 가능해지는 1국가 1체제로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통일운동의 주체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중이며, 북한은 통일의 주체이자 대상이다. 이런 조건에 맞는 통일된 통일방안은 아직도 생성중이나 선혁명 후통일의 순서로, 1국가 1체제를 국가 상으로 하는 민중적 통일로

통칭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성안되는 중이다. 따라서 통일혁명은 남한에서 민중정부가 들어섬과 함께 북한에서도 개혁된 후에야 비로소 1국가 1사회주의 체제로 전국적으로 실현되는 통일의 다름 아닌 것이다.

이와같은 비교에서 통일운동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전자가 당면의 민족모순을 해결하는 자주화운동으로 정의되었으며, 그러한 통일운동의 방안은 연방제라는 일치된 견해로 그 어떤 통일운동보다 체계적인 통일운동론의 제시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선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통일운동은 다음 단계의 체제모순을 해결하는 계급해방운동으로서 당면의 민중모순을 해결하는 민중민주나 혹은 민족민주운동의 수단으로 차별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방안은 선변혁 후통일, 1국가 1체제라는 공유외에는 차이를 인정하는 민중적 통일방안으로 미봉되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전자보다는 통일성이나 체계화 등의 모든 면에서 후진적이라 할 수 있다.

다. 南北韓 統一方案 比較

1) 國家聯合方式의 統一方案

민족해방운동진영은 국가연합방식의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으로 먼저 첫째, 사상적으로 대립 대결지향적 분열주의 사상에 기초되었다. 둘째, 분석적으로 흡수통일 지향, 국가연합 과정의 대결구도의 극대화, 예멘과 같은 불화로 전쟁 가능성이 심화된다.

다음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문제점은 첫째, 창구 단일화을 통해 민(民) 참여를 반대하였다. 둘째, 남한은 교류협력 문제만 다루었을 뿐 정치 군사는 배제시켰다. 셋째, 기능적 통합론의 기계적 적용은 유럽 공동체 교훈(경제 문화접촉, 정치 군사 통합 상태)과는 전제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시켰다. 즉 유럽공동체는 나토의 군사동맹체제 내부임에 비해서 남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북한은 조·소 우호협조조약을 맺고 있으며, 또 유럽공동체는 자본주의 국가로 동질임에 비해 남한은 자본주의이나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민중해방운동진영은 국가연합방식의 통일방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통일 3대 원칙을 자주, 평화, 민주로 제시하여 7·4 공동성명의 3대원칙 중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포기하는 대신 민주(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였다. 둘째, 문화, 경제교류로 정치군사적 통합도 가능하다는 EC적 기능적 사회통합으로 체제가 확연히 다른 남북한 교류의 긴장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긴장완화의 전제조건도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셋째, 통일일정에 대한 규제장치와 각종 남북연합 기구에서 통일을 성사시키는 제어장치가 없으며, 또 현존하는 남북한의 정권이 과연 전폭적인 주민의 지지를 받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넷째, 남북연합 기구는 단일국가의 국가기구가 아니고 2개 국가의 상설적 협의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2개 국가의 합법화, 분단고착화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바로 2국가 2체제라는 문제이다. 다섯째, 민족공동체 형성만 강조할 뿐 분단구조 철폐에 우선 요구되는 남북 군사정치적 적대관계의 해소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차적이거나 소극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비교에서 국가연합 통일방안은 전자가 북한의 연방제를 정당시 하는 입장과는 다른 부분을 모두 문제삼았다고 한다면 후자는 남북의 정권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하는 양비적 의문과 함께 남북연합이 단일국가가 아니라 사실상 2개 국가의 협의기구로 2개 국가의 합법화나 분단 고착화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으로 그 사상적 출발점에 따른 인식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高麗民主聯邦共和國 統一方案

민족해방운동진영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이 첫째, 사상적으로 민족대단결 사상에 기초되었다. 둘째, 분석적으로 민족이익 최우선시, 공존 공영 공리원칙에 입각하였으며, 자주적 평화통일 방안이라는 것이다.

민중해방운동진영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 80년 제안후에 달라진 입장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현재로선 불분명 하다. 둘째, 연방군과 지방군의 충동시 제어할 장치가 없다. 셋째, 남북에 상존하는 정치경제체제를 그대로 두는 1국가 2 체제의 연방국가라 할 때 주민들의 자유로운 여행이나 거주이전이 허용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전망이 없다. 넷째, 언제 어떤 방식

으로 단일체제의 통일국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에 대해 전자는 비판없이 긍정하였을 뿐이나 후자는 단일국가의 전망이 없다는 등으로 엄격히 비판되었다. 전자는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긍정하면서 남한의 그것을 비판하였으나 후자는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다같이 비판하였음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統一論과 그 方案 比較

1) 自主統一論과 民衆統一論

민족해방운동진영은 통일논리로 자주통일론을 제시하였으며, 먼저 그 논리는 구체적으로 첫째, 남한이 비자주의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성격으로, 정치체제상 미국의 군사적 강점아래 놓인 식민지 대리통치체제이며, 경제체제상 반(半)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민주기지의 자주사회라는 상정으로 출발되었다. 둘째, 통일은 남한에서 민족해방혁명의 반미 '자주'화의 실현공간을 넓히는 데 이바지 하는 반파쇼 '민주'화에 이은 '통일'이 연방제라는 것이다. 셋째, 통일의 경로는 파쇼타도하여 미제을 축출한 다음에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하여 북한과 연방공화국을 건설하므로써 민족의 자주권을 전국적으로 실현하게 된다는 통일론이다.

다음으로 자주통일론에 대한 민중해방운동진영의 비판은 첫째, 일반적으로 북한의 남한 혁명론과 통일론에 의존되었다면서 감상적 민족주의 이상일 수 없다는 등이다. 둘째, 민중해방운동진영에서는 민중권력에 대한 전망이 필연적으로 빠지는 우익 기회주의 통일론이며, 그 오류는 노동자 계급성을 각인하는 통일운동에 무관심한 채 통일을 절대적인 가치로만 제시할 뿐 분단체제 안에서 확대발전한 자본주의적 착취질서를 타파할 변혁에 대한 전망과 통일운동을 내용상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중해방운동진영은 통일논리로 민중통일론을 제시하였으며, 그 논리는 구체적으로 첫째, 남한이 반민중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구성체로, 정치체제상 신식민지 예속파쇼체제이며, 경제체제상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이다. 북한 또한 민주개혁을 통해 민중사회를 완성해야 하는 함량미달의 민중사회로 상정되었

다. 둘째, 통일은 남한에서 민중해방혁명의 파쇼와 독점자본제거의 유리한 조건 형성의 수단이 되는 민주변혁과 북한의 개혁이 완성된 후에야 이를테면 과도적 연방제 등과 같은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통일의 경로는 남한에서 파쇼를 타도하여 미제을 축출한 다음에 민중권력을 수립하고 북한에서 민주개혁으로 명실상부한 민중사회를 만든 후에 과도적 연방공화국과 같은 1국가 1체제로의 전국적으로 민중사회를 실현하는 하는 통일론이다.

다음으로 민중통일론에 대한 비판으로 첫째, 민족해방운동진영의 NL계파는 민족모순을 계급모순으로 환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변혁 후통일론으로서 패배주의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둘째, 민중해방운동진영 내부에서 ND계파의 PD계파에 대한 비판은 통일의 약한 고리론적 인식, 통일 및 통일운동을 나눈 좌편향, 통일을 노동자와 묶지 못한 실패라는 것이다. 세째, 민중해방운동진영 내부에서 PD계파의 ND계파에 대한 비판은 노동자계급의 통일투쟁이 반파쇼투쟁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것과 민중정권의 연방제 통일실현 주장은 북한의 통일을 받아 들이는 절충주의라는 등이다.

이와같은 전자의 자주통일론은 남한이 비자주이나 북한은 자주라는 단정에서 비자주의 자주실현으로서의 통일이라는 운동목적을 표현하는 운동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은 남한의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함께 하는 한 영역으로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로 자주를 전국적으로 완성시겠다는 통일론이다. 이 통일론에 대해 후자는 북한에 의존된 감상적 민족주의나 우익 기회주의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등이다.

후자의 민중통일론은 남한이 반민중사회이나 북한은 함량미달 민중사회라는 전제에서 반민중 및 함량미달의 민중사회를 명실상부한 민중사회로 실현시키는 운동을 계급적으로 표현하는 통일론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은 남한의 민중권력이 완성됨과 함께 북한이 민중적으로 개혁된 다음에야 비로소 민중사회로 완성된다는 통일론이다. 이 통일론에 대한 전자의 NL계파의 비판은 민족모순의 계급모순 환원론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선변혁 후통일론의 패배주의적 통일론이라는 비판이다. 그리고 후자의 민중통일론 내부에서도 ND계파는 PD계파에 대해 통일의 약한 고리적 인식, 통일 및 통일운동을 나눈 좌편향이나 통일을 노동자와 묶지 못한 것은 실패라는 비판을 하였으며, PD계파 또한 ND계파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통일투쟁이 반파쇼투쟁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것과 민중정권의 연방제

통일실현 주장은 북한의 통일을 받아 들이는 절충주의라고 비판하였는 등이다.

2) 聯邦制 統一方案과 民衆的 統一方案

남북한과 운동진영의 통일방안은 다음의 〈표 3-8〉과 같이 비교되었다.

〈표 3-8〉 운동진영과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구 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A)	범청학련 남측 본부안 (B)	고려민주연방공화 통일방안(C)	민중적 통일 방안 (D)
통일국가의 형태와 성격	국가 형태	민족국가 -성격=한민족공동체 -이념=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구성=민족구성원 모두 -1민족1국가1체제1정부	연방국가 -성격=자주적 -이념=민족적 -구성=남북동수 해외 적당수	연방국가 -성격=체제차이 인정의 완전한 연방국가 -이념=민족대단결 -구성=남북동수 해외동포 -1민족1국가2체제2정부	연방공화국 -성격=민중연방 -이념=민중민주주의 -구성=남북노동자 민중 -1국가1체제
	대내 관계		전민족회의-최고의사결정기구, 통일헌법과 각료 구성권 상설위원회-집행, 지역정부지도, 전민족회의 소집 제안, 통일정부군 조직	최고민족회의, 연방상설위원회 -민주주의민족연합군 조직 -남북간 교류협조 -지역정부 지도	
	대외 관계 국호	유엔 동시가입	반블럭 중립노선	단일국호 의석의 유엔가입 중립 비동맹 반블럭 비핵평화지대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의 추진과정	과도기	남북연합			남북연합, 국가연합 가능 과도적 연방
	단계	①화해협력단계 ②남북연합 ③1민족1국가 —선민족통일 후국가통일의 민족사회건설 우선		①연합성 연방 ②연방 ③1민족1국가2체제2정부 —선국가통일 후민족통일의 체제조립 우선	①선남한혁 혁명 북한 개혁 ②후 통일
	추진기구	남북연합단계—남북정상회담 설치, 그 산하의 남북각료회의와 평의회 설치	전민족통일협상회의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민족통일준비위원회 당국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구성방식 역할 수행	남북한 정부	남북 해외	정부 정당 사회단체	남북 노동자 민중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총선		연석회의	변혁의 과정이 통일과정
과도기 과제	정치경제	북한의 개혁 개방 남북 교류협력 민주주의 확대	자주권 보장 평화적 환경 민족대단결 의식 고양—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남한사회의 민주화 전면개방과 자유왕래 남북교류 협력 합작	파쇼하 통일 반대 북한과 조직, 사상적 독립

	군사	군사적 신뢰조성 군비감축 검증 남북한 평화협정, 불가침 선언, 협정 미(UN)군 외세아님		신뢰구축 실질적 군축병행 외국병력(미군, 핵) 철수 미북평화협정 남북불가침 선언	
	법/제도	대남 사회주의 혁명 포기 형사법 폐지 통일헌법 제정		국보법 안기부법 폐지 기무사, 안기부 철폐	
통 일 주 체		대통령, 정부 민족구성원 모두	범민련 범청학련	남북 해외 전민족 (당국 정당 사회단체)	노동자 남북한 민중
주변국 관 계		평화협정 불가침 선언 남북연합단계-조약 개폐, 미군철수, 남북한 군축	외세배격 자주적 입장	외세배격 자주적 입장 통일은 민족내부 문제	대외 자주
통 일 미래상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		10대 시정방침 실시	계급해방

이 〈표 3-8〉에 제시된 바와같이 남북한과 양진영의 통일방안 비교는 이미 그 차이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주요한 부분들을 지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언급이 가능해진다. 이하에서 편의상 표에서 명명된대로 A, B, C, D의 통일방안으로 약칭하였다.

첫째, 통일국가의 형태에서 먼저 '국가형태'에 대해 A안은 민족국가로, B와 C안은 연방국가로, D안은 연방공화국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의 '성격'에

대해 A안은 민족공동체로, B안은 자주로, C안은 완전한 연방으로, D안은 민중공화국으로 제안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가의 '이념'에 대해 A안은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로, B안은 민족으로, C안은 민족대단결로, D안은 민중민주주의으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구성'에 대해 A안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로, C안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로, D안은 1국가 1체제로 제안되었으나 B안은 제안치 않았다.

이와같은 통일국가의 형태와 성격비교를 통해서 '이념'적으로 볼 때 남한의 경우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 변할 수 없는 본질적 이념을 분명히 명시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민족해방운동진영 및 북한과 민중해방운동의 경우에는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 구현에 현재적으로 요구되는 이념의 제시일 뿐이지 결코 그의 본질적인 이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일의 추진과정에서 먼저 '과도기'에 대해 A안은 남북연합으로, D안은 어떤 형식이든 필요하다는 제안이나 B와 C안은 인정치 않음으로써 제안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추진단계'에 대해 A안은 3단계로 선민족통일 후국가통일의 민족사회 건설 우선으로, C안은 사실상 3단계의 선국가통일 후 민족통일의 체제조립 우선으로, D안은 선남한변혁 및 북한개혁 후통일로 제안하였으나 B안은 제안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추진기구'에 대해 A안은 남북한 정부로, B안은 남북과 해외로, C안은 정부, 정당, 사회단체로, D안은 남북한 노동자, 민중으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현절차'에 대해 A안은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로, C안은 연석회의로, D안은 변혁과정이 통일과정이라는 논리로 제안하였으나 B안은 제안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추진과정의 비교를 통해서 '단계' 문제를 볼 때 남한의 경우는 3단계로 민족사회 건설이 우선이나 북한은 사실상 3단계를 내용으로 하는 선체제조립적이며, 민중해방운동진영은 선남한변혁 및 북한개혁이라는 데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과도기 과제에서 먼저 '정치경제'문제에 대해 A안은 북한의 개방 개혁, 남북의 교류 협력, 북한의 민주주의 확대로, B안은 자주권 보장의 평화적 환경, 민족대단결의식 고양, 화해협력 불가침 교류협력으로, C안은 남한의 민주화, 남

한의 전면개방 및 자유 왕래, 남북의 교류협력 합작으로, D안은 파쇼하 통일반대, 북한과의 사상 조직적 독립으로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군사'문제에 대해 A안은 군사적 신뢰조성, 군비감축, 검증의 남북한 평화협정, 불가침협정으로, C안은 신뢰구축과 군축의 병행, 미군 및 핵철수, 북미평화협정, 불가침 선언으로 제안하였으나 B와 D안은 제안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법과 제도'문제에 대해 A안은 대남 사회주의혁명 포기, 북한의 형사법 폐지, 남북의 통일헌법 제정으로, C안은 남한의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 폐지, 남한의 기무사 및 안기부 철폐로 제안되었으나 B와 D안은 제안되지 않았다.

이와같은 과도기의 비교를 통해서 볼 때 남북한의 영역별 과제제시는 쌍방간의 동일영역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 같으며, 민중해방운동진영의 북한으로부터의 사상, 조직적 독립이라는 과제제시는 민족해방운동진영을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적 언급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넷째, 통일의 '주체'에 대해 A안은 대통령, 정부, 민족구성원 모두로, B안은 범민련, 범청학련으로, C안은 남북 해외의 전민족 또는 당국, 정당, 사회단체로, D안은 노동자, 남북한 민중으로 제안되었다.

이와같은 '주체'의 비교에서 볼 때 남한의 경우는 민족구성원과 그 선출의 대통령, 정부라 하였으나 민족해방운동의 범민련 및 범청학련의 운동조직으로, 북한은 지역적으로 남북과 해외 그리고 조직적으로 당국, 정당, 사회단체의 전민족으로, 민중해방운동진영은 노동자, 민중의 계급이라 하였음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주변국 관계'에 대해 A안은 평화협정 불가침 선언,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조약 개폐, 미군철수, 남북한 군축으로, B안은 외세배격, 자주적 입장으로, C안은 외세배격, 자주적 입장, 통일의 민족내부 문제화로, D안은 대외 자주로 제안되었다.

이와같은 '주변국 관계'의 비교에서 볼 때 남한의 경우는 대외관계가 남북관계의 단계적 접근에 따른 정립으로 제안되었으나 민족해방운동진영 및 북한은 외세 배격의 자주로, 민중해방운동은 대외 자주라는 정도로 대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통일의 '미래상'에 대해 A안은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로, C안은 10대 시정방침실시로, D안은 계급해방의 사회로 제시되었

으나 B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비교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먼저 이념적으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민족해방운진영의 민족 이념 및 북한의 민족대단결 이념, 그리고 민중해방운동진영의 민중민주주의 이념으로 대별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족 및 민족대단결은 주체사상으로 본 남한사회의 식민지반자본주의의 민중과 미국간의 민족모순을 해결하는 남한지역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운동의 자주, 민주, 통일에서 연방제 통일의 당면적 이념(=最小綱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민주주의는 마르크스-렌닌주의으로 본 남한사회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민중과 자본가·관료·지주간의 민중모순을 해결하는 남한지역의 민중민주혁명운동이나 민족민주혁명운동에서 수단되는 통일로서의 당면이념을 말한다. 따라서 양자가 그 출발에서는 민족모순이나 민중모순으로 달리되나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체제차이에서 오는 체제모순 해결과 함께되는 계급모순의 해결로서 통일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일방식은 단방(單邦)제와 연방(聯邦)제로 대별되었다는 것이다. 단방제의 경우에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로의 단방제와 민중해방운동진영의 사회주의를 궁극으로 하는 단방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제의 경우에는 민족해방운동진영 및 북한의 민족(=最小綱領)으로의 연방제라는 것이다. 민족 이념은 궁극적 이념(=最大綱領)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이라는 강변을 통해서 연방제의 실현과 동시에 새로운 민족적 갈등의 현실화가 예고되는 방안이라는 문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은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실현시켜왔으며 세계사적으로 확인된 보편적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민족, 민족대단결, 민중민주주의라는 특수성을 유지시키려는 통일로 대별되었으며, 그것은 이미 세계사적으로 승패가 난 일국사(一國史)적 현실에만 과도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분단의 지속일 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Ⅳ. 結　　論

1. 政治社會陣營의 統一論議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정치사회권에서 전개되었던 통일논의를 중심으로 이들의 변화과정 및 그 특징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연구의 촛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역사적 고찰과 더불어 형태별 유형화 작업과 통일방안에 대한 내용비교 등 세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논의의 역사적 변화추이를 추적해보면 1970년대 이전의 통일논의들은 대체로 외세의존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당시 미소양강대국이 주도하고 있던 냉전체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있던 한반도 상황여건에서 우리의 정책이 제한받을 수 밖에 없던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분단자체가 우리의 의사와는 달리 이들 강대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진 까닭에 분단극복의 문제도 국제적인 역학구조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시각이 외세의존적 성향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국제질서의 변화와 남한내부 여건의 호전으로 점차 통일논의는 외세의존적 성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1970년데 이후 나타난 통일논의의 특징은 자주성의 제고이다. 국제적으로 데탕트 분위기가 확산되고 특히 닉슨독트린 선언이후 한반도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자 남한정부는 체제안보적 차원에서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모색하는 등 남북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남한의 경제성장으로 대북체제경쟁력이 회복되어 북한과의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남한의 자신감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몰락으로 전후 국제질서를 지탱해온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한반도에서는 남한에게 유리한 통일환경이 조성되어지자 우리사회의 통일논의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특히 김영삼정부는 민주화에 따른 문민정부의 정통성과 월등한 대북 경제력을 바탕으

로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과감한 대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의 통일논의도 통일시대의 대비라는 입장에서 북한의 경협제공, 법제도 개선문제, 통일비용 산출등 구체성을 갖게 된다. 이는 통일문제 해결에 있어 남한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동시기 통일논의의 특징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통합형태의 유형화 작업에 따르면, 분단초기 통일논의에 등장하는 통합형태는 주로 정부의 정통성시비와 관련된 주권확장론적 입장의 통일방법이 강조된다. 즉 북한정권의 법적 부당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주권아래 총선거 또는 무력의 방법으로 편입시켜야 된다는 흡수통일론적 시각이다. 한편 북한과의 체제경쟁 기간동안에는 통일보다는 내부체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예론적 통일론이 대두되어 한동안 통일논의의 실질적인 공백기도 갖게 된다.

1970년대 이후 남북간의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어 분단의 원인제거만으로는 더 이상 분단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통일문제 해결에 대한 시각이 감정적 수준에서 이론적 접근으로 전환된다. 즉 북한체제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고 두 체제를 통합시키기 위한 정치통합론적 입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은 이시기의 특징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능주의적 통일론은 정부통일방안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통일논의에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 또한 연방제통일론과 중립화통일론은 주로 재야세력들에 의해서 선호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나타난다.

세째, 주요 통일방안의 내용 비교분석에 따르면 각 통일방안이 갖고 있는 상이점과 더불어 상당한 부분의 공통점도 발견된다. 통일방안의 특징적 성격을 규정해 주는 상이점들은 대체로 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문민정부는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민족공동체의 발전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김대중의 통일방안에서는 현실적 입장에서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통일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문익환목사는 분단을 제공하였던 과거상황의 지속으로부터 탈피함으로서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방안들이 모두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

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점이다. 즉 민족분단의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의 인식차이를 완화시킨다면 하나의 통일방안으로 수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사회진영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통일지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통일이란 또 하나의 새로운 국제적 상황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의 상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둘째, 통일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인정되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과거정부에 의해서 거부되었던 비정부차원의 통일방안들이 최근 정부에 의해서 수용된 부분이 많다는 점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문민정부의 보다 개방적이고 신축적인 통일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세째, 통일의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한다. 비록 통일자체가 최종목표이어서는 안되지만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한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등이 가능해지며 또한 북한이 민족발전을 위한 분단극복 노력에 동참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네째, 통일이란 이상이지만 또한 다가올 실천의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법제도의 개선문제를 비롯하여 통일비용의 산출문제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어야하며 동시에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후유증을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전국민대상의 통일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2. 運動陣營의 統一論議

운동진영의 통일논의는 그 일차자료의 인용적 분석으로 그 역사, 개념,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인식, 통일론 및 통일방안에 대한 진영 및 계파별로 그 실상을 드러냈으며, 그리고 진영 및 계파간의 비교로 명료화 시키려 하였다. 그렇게 명료화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리와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로서 결론에 대신하고

자 하였다.

먼저 80년대까지 남북한과 운동의 통일논의사에 대한 운동진영별 인식이 정리될 수 있었다. 우선 민족해방운동진영은 역사적으로 남한의 통일논의를 반통일적으로, 북한의 통일논의를 통일지향적으로, 그리고 자기진영의 전통으로 삼는 인식을 하였다.

그러나 민중해방운동진영은 역사적으로 남한은 물론 북한의 통일논의를 공히 비판적으로, 운동의 통일논의를 민족해방운동진영의 민주기지노선의 실패의 대안으로서의 남한혁명노선의 복권이라는 식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전자가 남한의 부정과 북한의 민주기지노선에 따른 민족해방운동사적 인식을 하였다고 한다면 후자는 남북한의 비판을 통해서 민중해방사적이며 노동계급해방의 계급투쟁사적인 남한혁명노선으로서의 통일논의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우리의 현대사적 사실을 외면하면서 자기운동진영의 역사적인 전통으로 통일논의사를 인식하려 하였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인용으로 그 의문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까지 지배한다".[369]

다음으로 통일논의에 나타난 주요개념에 대한 정의들이 운동진영별로 정리될 수 있었다. 우선 민족해방운동진영은 분단이 민족모순의 특정한 표현이며, 통일은 주요모순인 민족모순해결이며, 통일운동은 남한에서 당면의 민족모순을 해결하는 자주운동론에 따른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민중해방운동진영은 분단이 체제모순의 결과이며, 통일은 주요모순인 민중모순해결의 일환이나 그 전술일 수 밖에 없으며, 통일운동은 남한에서 당면의 민중모순을 해결하는 민중운동의 일환이나 전술로서 기본모순인 계급모순과 함께하는 체제모순 해결의 노동이나 민중운동론의 민중통일방안대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아직도 통일된 방안이 없는 민중'적' 통일방안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

369) 이명영, 조선노동당의 혁명의 역사와 통일문제, 서울:일념, 1987, 71쪽.

이와같이 전자의 통일운동이 당면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 후자의 그것은 당면의 민중모순을 해결하는 일환이나 그 전술일 수는 있어도 사실상 다음 단계의 계급모과 함께 되는 체제모순 해결의 통일운동이라는 점에서 다른 단계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운동진영별 인식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우선 민족해방운동진영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정당시하는 입장에서 남한의 국가연합 통일방안을 반통일적이라고 부정하였다.

그러나 민중해방운동진영은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분단 고착화나 사실상 2개 국가라는 비판을 하였며, 자기진영 내부에서는 북한의 연방공화국안이 수용되기도 혹은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전자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긍정하는 맥락의 통일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실천에 옮기는 수준이나 후자는 남북과 민족해방운동진영의 모든 방안을 비판하면서도 한 계파가 북한의 연방제를 수용하려 했다는 것일 뿐 통일된 방안을 아직은 갖추지 못하였듯이 통일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론과 그 상호비판과 그리고 통일방안에 대해 진영 및 계파별로 정리될 수 있었다. 먼저 민족해방운동진영은 첫째로 자주를 통일운동의 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둘째로 민중해방운동진영에 의해 북한에 의존된 감상적 민족주의의 우익 기회주의로 비판되었으며, 그들의 연방제 통일방안 또한 북한의 논리와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비교되었다.

다음으로 민중해방운동진영은 첫째로 남북한의 민중사회 실현을 통일운동의 목적을 제시하였으며, 둘째로 민족해방운동진영에 의해 민족모순의 계급모순 환원론적이며 선변혁 후통일의 패배주의로 비판되었다. 또 진영내에서 ND계파는 PD계파의 해석에 대해 약한 고리, 통일과 통일운동 구분의 좌편향으로, PD계파는 ND계파의 해석에 대해 민중정권의 연방제 통일주장은 북한의 통일을 받아들이는 절충주의로 비판하였는 등이다.

이와같이 전자가 남한에서 민족모순을 주요모순으로 상정하므로써 계급모순의 흔적을 숨기고자 하였으나 민족해방운동적 인식이 여전하며, 후자는 남한에서 민

중모순을 주요모순으로 상정하므로써 계급모순 해결과 함께하는 체제모순의 해결이라는 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표현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정리를 통해서 두 운동진영의 통일운동론은 다음과 같이 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이 모순의 해결이라면 통일운동은 분명히 분단모순 즉 체제모순을 해결하는 운동임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먼저 민족해방운동진영은 남한에서 민족모순이 주요모순이므로 통일운동은 당면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운동의 주요한 하나의 목표이며, 전국적으로는 남북체제를 서로 인정하는 연방제일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체제모순을 부차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기본모순인 계급모순 해결의 전망을 숨겼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중해방운동진영은 남한에서 민중계급모순이 주요모순이므로 통일운동은 당면의 민중민주혁명운동의 일환이나 또는 민족민주혁명의 전술일 뿐이며, 전국적으로는 계급모순과 함께 되는 체제모순 해결적 통일 일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솔직하게 민족모순을 부차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전자가 대남혁명과 함께가는 한 목표로서의 통일제시라면 후자는 선혁명 후통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가 민족으로 계급문제를 완전히 숨기려 하였다면 후자는 민중으로 계급모순 해결을 분명히 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논의의 근본적 출발점은 남한사회를 주체사상에 따른 사회성격 규정대로 식민지반자본주의나 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물사관에 따른 사회구성체 규정대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단정(斷定)으로 출발된 모순해결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진영 통일논의의 결론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통일논의의 현대사를 자신들의 사상이론에 따라 인식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학계의 학문적 비판의 세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지하의 관련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를 하여 연구하려는 전문가나 학자들에게는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이도 없지 않을 것이나 그러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조직은 정부의 어느 기관이라도 경찰에는 못미친다는 현실적 고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문제가 경찰력과 함께 학문적 연구에 따른 사회교

육의 활성화로 분담될 수 있다면 그 만큼 경찰의 부담도 반감될 뿐만 아니라 또한 문민시대로 가는 과도기적 대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사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대안은 국가, 공공기관, 그 관련 사회단체의 세미나나 기관지 등에 연구발표의 기회를 넓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가 있으면 연구라는 공급이 활성화 될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교육 또한 질적으로 향상돼 국민적 관심을 불러모우게 되어 자유민주주의자로서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지속적으로 되먹임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논의에 나타난 개념정의나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운동진영의 인식들이 평시에는 무시되다가 사건이 터지면 문제삼음으로써 갑자기 무슨 날벼락이냐라는 역효과 초래의 악순환을 벗도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에 따라서 우선 경찰만이라도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꾸준히 교육하여 인식의 공유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교육이냐 하는 견해도 있을 것이나 사회의 가장 주요한 기능의 하나가 교육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망각하는 단견극복의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같은 시사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안은 자연히 각 부처가 연구와 연수 등의 교육적 기능에 이 주제가 꾸준히 담아지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운동진영이 자신의 통일방안을 만들고 실천에 옮기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에 대한 경찰적 대안은 첫째로 통일문제가 논의와 실천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논의의 경우에는 연구적 접근을 위한 자료확보에 중심을 두며 실천의 경우라도 질서확보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통일이 남북한 공동사업적 사안이라면 운동진영의 연공연북과 우리의 교류협력을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북한의 전술적 맥락과 함께 검토하는 연구와 더불어 그에 따른 경찰력 행사의 문제도 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로 통일논의와 실천이 전국민적인 것이라면 관이 아닌 민의 대북교류협력에 대한 한계도 투명화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경찰이 통일관련 논의나 실천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정보 및 자료 수집과 그에 따른 예견, 그리고 경찰력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전 홍보 및 출동경찰의 사전교육을 통한 당위적 신념확보 등의 기능도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 관련 연구기관도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는 일이 게을리 되지 말아야 하다는 등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문제는 국민자신의 일임에 틀림없으나 그렇게 믿고 맡겨 두기에는 안으로 통일운동이, 밖으로 북한의 집요함이 상상을 초월해 왔다는 사실에서 경찰적 대응은 물론 조용하며 꾸준한 국책적 대안들도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시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내적으로 운동진영은 이미 통일논의를 끝내고 자신들의 방안을 갖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는 점이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국민을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느냐라는 경쟁을 예고받는 시점임을 숨기고 덮음으로 미봉할 것이 아니라 그 기초적인 연구를 장려해 다양한 연구지에 게재되게 함과 동시에 사회교육 및 국가기관의 재교육에 활용되도록 하는 자생화라는 제도적 가용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통일문제를 물리력으로 풀겠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 되듯이 연구와 교육의 활성화로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스스로 지키고자 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관중심에서 민중심으로 연결시켜 과도기 극복적 발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론 및 정책적 시사를 통해서 결국 통일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입만큼 산출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의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와 진지한 노력으로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의 달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야 21세기의 선진 민주국가로서 세계평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한민족 번영의 첫 걸음걸이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參 考 文 獻

김승호, 한국 사회주의운동론, 해동기획, 1994.
김삼웅, 통일론 수난사, 한겨레신문사, 1994.
김운태(외), 한국정치론, 박영사, 1977.
김학준, 반외세의 통일논리, 형성사, 1983.
민병천, 신통일론, 고려원, 1992.
민병천, 민족통일론, 고려원, 1985.
박관용, 통일문제의 이해, 한얼, 1988.
박준홍,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박영사, 1978.
박현채(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 죽산, 1989.
송건호(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80.
신정현(외), 북한의 통일정책, 을유문화사, 1989.
안병준,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통일, 법문사, 1994.
안병준, 국제환경의 변화와 민족통일, 정음사, 1986.
양동안, 민주화와 위기, 삼영, 1990.
양성철, 남북통일이론의 새로운 전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양호민(외), 남과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나남, 1994.
양호민(외), 민족통일론의 전개, 형성사, 1982.
양호민(외), 한국민족주의의 이념, 아세아정책연구원, 1977.
유석열, 남북한 통일론, 법문사, 1994.
이기택, 국제정치사, 일신사, 1993.
이명영, 통일의 조건, 종로서적, 1989.
이무웅, 안보와 통일정책, 대왕사, 1976.
이상우, 함께사는 통일, 나남, 1993.
이상우, 한국의 안보환경, 서향각, 1977.
이용필(외), 남북한 통합론 : 이론적 및 경험적연구,인간사랑,1992.

임양택, 제3의 통일방안, 매일경제신문사, 1993.
정대화(역), 중립화 통일론, 신학문사, 1988.
정용길, 분단국 통일론, 고려원, 1990.
정용석, 분단국통일과 남북통일, 다나, 1992.
조정원, 남북한 통합론, 희성, 1989.
최대권, 통일의 법적문제, 법문사, 1990.
최봉윤(외), 민중주체 중립화 통일론, 전예원, 1988.
국토통일원, 1992 통일백서, 1993.
국토통일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념과 실천, 1990.
국토통일원, 민족통일로의 전진 : 국토통일원 20년, 1989.
국토통일원, 정당.단체.개별인사 통일논의, 1989.
국토통일원, 각계통일논의 자료집, 1988.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1988.
국토통일원, 통일문제관련자료집, 1987.
국토통일원, 민족화합 민주통일론, 1982－1986.
국토통일원,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남북관계 개선방안연구,1976.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정치론, 1976.
기사연통일연구위원회, 분단50년의 구조와 현실,민중사, 1994.
남북대화사무국, 연방제의 일반적 개념, 1981.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논의의 제문제, 대왕사, 1989.
민족통일연구원, 1993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1993.
민족통일연구원, 재야통일안 연구, 1991.
북한연구소, 북한외교론, 1978.
외무부외교연구원, 한국외교의 20년, 1967.
통일연수원, 1994 통일문제이해, 1993.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 1988, 1992, 1993.
통일원, 남북경제현황비교, 1991.
평화문제연구소, 변화된 세계 새로운 통일론, 1994.

현대한국정치연구회, 탈냉전의 민족통일론, 예진, 1993.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과 통일정책", 통일문제연구, 제5권2호, 1993.

구종서, "통일방안과 통일정책의 제문제, 북한, 1994년 4월호.

권오윤, "3단계3기조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 1993, 9월호.

길정우, "미.김정일북한 수교의 조건", 신동아, 1994년, 8월호.

김강녕,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분석", 한국정치학회,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1994.

김순태, "3당 통일정책을 검증한다",월간조선, 1992년 12월호

민병천, "한국의 통일전개과정에 관한 고찰", 동국대 안보연구소, 안보연구, 제14호, 1984.

박동운, "한반도 통일과 통일비용마련", 북방경제연구,1994.4.

박용헌, "남북통일의 전망과 교육통합", 민주문화아카데미, 민주문화논총, 통권29호, 1993.4.

안병준, "동북아질서 재편의 추세", 통일연구논총, 창간호, 1992.6.

윤덕민, "북핵타결 새로운 시작이다", 신동아,1994년, 9월호.

이장희, "남북연합시대를 대비한 법제도적 과제", 안보문제연구원, 통일로, 1993년 11월호.

附　　錄

1. 남북한 통일정책연표[370]

북한	기본정책	민주기지 노선	민주기지 노선 조국해방전쟁론
	통일정책	47 말 양국선 철거 수 후제 의 남북 총 48. 4 정당석 사회 회의 단체 연	49. 6 조국전선 통일 방안 50. 6 정당회 사의 회 단체 연석
	사건	조공 북조건/조로당 창립/조로당 2차/인공수립 분국(45.12)/대회(46. 8)/대회(48.3)/(48. 9)	합당대회 (49. 6)
연도		1945　　1948	50－53 한국전쟁
남한	사건	정부수립 (48. 8)	
	통일정책	47 말 U N자 감유 시선 하거 남제 북의	
	기본정책	자유민주주의 체제수립	북진통일론
	민간차원 통일논의		

370) 최인범, 민중통일과 민중권력,서울 : 신평론, 1989, 110쪽.

2.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A)[371]

명 칭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고려연방제 방안)
통일철학	자유민주주의 (인간중심)	주체사상 (계급중심)
통일과정	화해협력→남북연합→1민족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과정 *민족사회건설 우선 (민족통일→국가통일)	연방제국가의 점차적 완성 *국가체제조립 우선 (국가통일→민족통일)
과도체제	남북연합	없음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통일국가의 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국가
통일의 미래상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	없음
통일주체	민족구성원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

371) '통일접근 방식 현격한 차이', [세계일보], 1994. 8. 18자, 4면.

3.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372]

구 분	남 한	북 한
접근방식	현상유지 또는 북한개방에 중점	분단구조 해소에 중점
	대전차 장애물 주장	콘크리트 장벽철거
	국가보안법 유지, 교류법 대체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철폐
	구속 방북인사와 무관	구속방북인사 석방
	휴전체제 유지하면서	휴전체제 평화협정으로 전환
	'두개의 한국 방식' 통해	'두개의 한국 지양'
	동시가입 또는 단독가입	단일국호→단일의석 가입
군축문제	포괄적인 군비통제 지향	실질적인 군축지향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우선	신뢰구축과 실질적 군축 병행
	주미철, 핵철거는 통일문제와 무관	주미철과 핵철거 동시진행
	군사력과 무기체계의 균형	군사력 감축 주력
교류문제	교류를 통한 북한개방의 목적	긴장완화를 위한 교류에 목적
	북한개방에 목적	화해와 동질성 회복 목적
	인도적 차원에 국한된 교류	통일을 위한 교류
	긴장완화를 대체하는 교류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교류
외세문제	자주적 통일원칙 모호	자주적 통일 지향
	미국과 유엔은 외세 아님	외세배격한 통일
	통일문제의 국제화	통일문제의 민족내부화
	교차승인 지향	교차승인 반대
	동북아 6개국 평화회의	전민족통일전선 민족통일협상회의 민족통일준비위원회
협상체널	정부간 협상, 창구단일화	전민족 참여, 자주적 민간교류

372) 미상, '독일통일과 한반도', [방송대], 1990. 8. 29-31, 3쪽.

1954–1960	1960–1961	1961–1970	1970–1972	1972–1980	1980–
민주기지노선 미해방지구해방투쟁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론)		민주기지 노선 3대혁명역량 강화론 북 사회주의 건설 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민주기지 노선(유일사상체계) 3대 혁명역량 강화론 북 사회주의 건설 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민주기지노선 (주체 시대) 남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남한의 민주화(고연제 통일안)
54.4 3 개 항 통 일 방 안 54.6 남 북체 한결 평제 화의 협 정 56.4 남 북행 당사 국 간선 무포 력제 불의 57.7 남 북국 당회 의 및소 집 유제 관의	60.4 정 당제 사의 회 단 체 연 석 회 60.8 과 도연 적방 조제 치 로제 의 남 북	61.9 남북의 의의 단 민사합 주회실 역주현 량의 과역 량 63.9 남 북 불 가 침 조 약 체 결 64.12 통 일배 문격 제 U N 상 정 66.10 남 조작 선통 일 혁 명 후 합 69.7 남 한통 정일 부협 상 전 복 후 71.4 8 개 항 통 일 방 안	남 북 공 동 성 명	73.4 남 북제 평의 화 협 정 체 결 73.6 조 국 통 일 5 대 강 령 74.3 조 을 미 평위 화한 협회 정담 체제 결의 76.3 통 일 방 안 6 개 항 제 시 79.7 3 자집 회접 담협 거상 부 요 대구 미	80.10 고 연 제 통 일 방 안 81.8 남 한통촉 당일구 국촉 제진 의회 민소 족집 83.1 남 북연 정석 당회 사의 회 단 최 86.6 3 군제 사의 당 국 자 회 담 반 공 정 책 포 기 촉 구 86.12 남 북회 고담 위제 의 정 치 군 사 87.7 단 계다제 별국의 군적 축군 을축 회 위담 한
조로당 3차 대회 (56. 4)		조로당 4차 대회/당대표자 대회 (61. 9) (66. 10)	조로당5차대회 (70.11)		조로당 6차 대회 (80.10)
1960	1961	1970	1972		1980
4월 혁명	민주당 정 권	5.16 쿠데타		10월 유신	광주/이산가족찾기 /고향방문단 항쟁/운동(83,KBS) /상호 방문
54.4 남 한남실 헌북시 법 에자제 유의 따선 른거			72.5 단 계천 적명 통 일 접 근 72.7 남 북 공 동 성 명	73.6 평 화에 통 일관 외환 교 정선 책언 74.8 평 화원 통칙 일 3천 대명 기 본 76.5 남 북해 한결 원 당칙 사 간천 명 79.7 3 자 회 담 제 의	81.5 남 북담 최 고제 책의 임 자 회 82.1 민 족방 화안 합 민 주 통 일 83.2 남 북회제 당단의 국체 및연 정석 당회 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북진통일론	선건설 후통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립 체제간 경쟁	자유민주주의 체제 남북간 점진적 교류 87. 12 김대중 3단계 통일론 (공화국 연방제)
56년 진보당의 자주적 평화통 일론	중립화통일론 자주화통일론 남북학생회담 제의		김대중 3단계 통일론(공존· 교류·통일)	76. 1 양일동 한반 도 비핵지대화 민간주도 남북교류	

4.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B)[373]

구 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통일국가의 형태와 성격	국가형태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단일국가 지향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는 연방국가(실질적으로 연합성 연방)
	대내관계	언급없음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회의, 민주주의민족연합군 조직, 남북간 교류·협조
	대외관계	유엔동시/단독가입의 언급없음	단일국호/단일의석 유엔가입, 중립화 비동맹 블럭, 비핵평화 지대화 정책
	국 호	언급없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의 추진과정	과 도 기	민족공동체서부터 통일국가까지	언급없음
	단 계	민족공동체,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를 경과	단계규정 없음
	추진기구	남북연합단계에서 최고결정기구인 남북정상회담 설치, 그 산하에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 설치	명확한 언급 없으나 민족통일협상회의 혹은 민족통일준비위원회 또는 당국·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등이 이에 해당 정부, 정당, 사회단체로 구성
	구성방식 역할수행	남북한 정부기구로 구성 명확하지 않음	언급없음

373) 상게자료, 4쪽.

과도기 과제	정치형태	북한의 개혁 전면개방과 자유왕래 남북교류와 협력	남한사회의 민주화 전면개방과 자유왕래 남북교류와 협력 및 경제합작 신뢰구축과 실질적 군축 병행
	군 사	포괄적 군비통제(신뢰구축) 미군/유엔군 외세가 아님 남북한의 평화협정 상호불가침 선언/협정	외국무력철수-주한미군, 핵무기 미-북한 평화협정 남북한 불가침 선언 국가보안법, 안기부 법 폐지 보안사, 안기부 폐지
	법/제도	안전관리 형사법 폐지	
통일의 주체		정부와 대통령 (당국)	국내외를 포함한 전민족 (당국, 정당, 사회단체)
주변국과의 관계		4대국 보장하 통일 자주에 대한 명확한 언급	자주성의 입장에서 통일문제의 민족내부화 주장 외세배격

5. 2단계 통일에 기초한 통일과정[374]

<table>
<tr><td colspan="2">구 분</td><td colspan="4">전 개 과 정</td></tr>
<tr><td rowspan="4">한반도 차원 / 남북 관계</td><td>단계</td><td colspan="3">평화체제 구축단계</td><td colspan="3">통합단계
(先정치통합 後사회경제통합)</td></tr>
<tr><td>과제</td><td colspan="3">긴장완화와 교류협력 증대</td><td colspan="3">전면개방과 자유왕래, 통일강화를 위한 조치</td></tr>
<tr><td>상태</td><td colspan="2">평화공존의 관계</td><td>(국가연합)</td><td>연합성연방</td><td>연방</td><td>단일국가</td></tr>
<tr><td>조치</td><td>평화협정
불가침 선언</td><td colspan="2">조약개폐
미군철수
남북한 군축</td><td colspan="3">비동맹. 반블럭의 중립화 선언 및 이에 기초한 새로운 조약 체결</td></tr>
<tr><td rowspan="4">남한 변혁 차원</td><td>(1)</td><td colspan="3">파시즘 체제/유사민간정부</td><td colspan="3">흡수통일 혹은 분단고착</td></tr>
<tr><td>(2)</td><td>파시즘</td><td colspan="2">민주정부</td><td colspan="3">통일정부</td></tr>
<tr><td>(3)</td><td>파시즘</td><td>민주정부</td><td>민중권력</td><td colspan="3">통일정부</td></tr>
<tr><td>(4)</td><td>파시즘</td><td colspan="2">민중권력</td><td colspan="3">통일정부</td></tr>
<tr><td colspan="2">북한개혁 차 원</td><td colspan="3">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확대</td><td colspan="3">남북한 경제교류와 대외경제교류 확대</td></tr>
</table>

374) 상게자료, 5쪽.

6. 대표적 통일방안 비교[375]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고려 민주연방 통일방안	문익환목사님 3단계 통일방안	김대중씨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방안
원칙	민족자결, 민주적 절차, 평화적 방법(외세와 맺은 체결유지, 주한미군은 외세가 아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평화적 방법	
통일의 주체	정부당국	전민족	전민족	제 사회단체와 각당 참여(최근 추측)
전제조건	교류추진을 통한 신뢰회복. 이북의 대남적화 야욕 포기 (현재는 핵사찰 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군비축소, 외국군 철수, 자유왕래, 전면개방,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현재는 이인모 송환, 핵사찰은 자주 원칙 주장 그리고 교류와 군사전제 동시병행으로 진행)	군비축소, 굴가침 조약, 외국군 철수, 민주정부 수립	핵무기 철거, 불가침 조약체결, 미군철수와 군비축소는 유엔결의 후 강대국(중러일미)의 승인으로 정치, 경제, 문화체육, 학생 등 적극적 교류

375) 조선대, '대표적 통일방안 비교', [통일학교], 1992, 11쪽.

통일정부(국가)의 상과 내요	체제	단방제 1민족1국가1체제	연방제 1민족1국가2체제	연방제 1민족1국가2체제 (체제의 결정은 후세가 지역별로 결정하자)	연방제 1민족1국가1체제
	통일정부 구성과 지위	남북정상회의(최고의결기구) 남북각료회의(교육, 정치외교, 교류, 경제, 경제 군사 5분과) 남북평의회(통일헌법 제정)	통일정부 최고인민회의(최고의결기구, 군사외교를 중심으로, 남북 동수참여) 최고상설위원회(지역정부 지도) 지역정부 구성(경제, 지역사안 등 자치권)	1단계 통일정부의 군사외교는 지역정부에게 2단계 통일정부가 군사외교권까지 관할 3단계 지방자치의 도단위로 확대	남북의 독립정부를 두고 상징적 통일정부를 동수로 구성한다
	국호	없음	고려	없음	없음
통일조국의 과제	민족, 민주, 자유, 복지 외교관계 언급없음		10대 시정방침(자주적인 정책, 민주주의실현, 민족연합군 창설 등등) 비동맹 블럭 불가담 중립국	비동맹 중립국가	없음

7. 다른 국가의 연방제안과의 차이점[376]

구 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현존하는 다른나라의 연방국가안
창립 목적	-민족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나라의 통일염원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보장	-국가간 민족간의 공통한 이해 관계 추구
연방의 구 성 연방창립의 기 초	-단일민족의 남북 두 지역자치제에 기초한 연방국가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이념에 기초	-두개 이상의 다민족, 다국가, 다자치주의에 의한 연방 -하나의 공통된 사회경제제도에 기초
연방국가의 성 격	-민족적 성격	-계급적 성격(사회주의, 자본주의 국가이거나 그를 지향하는 국가)

8.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의 완결 이전의 북한통일방안과 비교[377]

구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종전의 남북연방제안
체제	연방국가 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구성	-남과 북의 동수의 대표들과 해외동포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상설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를 구성한다 -남과 북에는 각각 지역 자치정부를 둔다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두 정부의 대표들로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한다

376)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통일로 가는 길, 1988, 52쪽.

377) 상게자료, 52~53쪽.

기능	-최고민족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 통일정부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외적으로는 통일적인 하나의 국가를 대표한다 *대내적으로는 두 지역정부를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사업을 관할한다	-주로 남북 경제, 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한다 *분열을 막고 남북한의 연계, 합작을 전면적으로 실현한다 *하나의 국호로 유엔에 가입한다
목적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직접 실현한다	나라의 완전통일 실현의 과도적 단계로서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는 데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 놓기 위한 것이다

9. 통일문제의 3차원과 3대혁명 역량[378]

통일문제의 세 차원	3대 혁명역량	변 화
남한 내부의 차원(정부/민간)	남한의 민주주의 역량	통일운동의 침체
한반도 차원(남한/북한)	북한의 사회주의 역량	당면한 정치경제적 문제
주변관계(한반도/주변4강국)	국제 혁명역량과의 관계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북방정책으로 인한 외교적 열세

378) 정대화, 전게자료, 213쪽.

10. 조국통일과 남조선 혁명전략전술[379]

구 분		조 국 통 일	남조선혁명
지역적 범위		남북 조선	남 조 선
성 격		국토와 민족의 재통합	새로운 사회제도 수립
전략전술	주 동 력	북조선 혁명역량	남조선 혁명역량
	혁명역량 편성방침	3대 혁명역량	주력군과 보조역량
	통일전선 주체	조선 노동당	남조선의 혁명조직
	통일전선의 범위와 대상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사람 모두, 관용정책	계급노선 철저히 견지 관용정책 허용 않음
	수행방도	평화적 방법 또는 비평화적 방법	비평화적 방법

*1955년에 밝힌 2가지전도론은 75년에 나온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리론'에서 체계화된 2개의 전도론과 6가지 방도론으로 정형화되었음.

11. 분단국의 통일유형 비교[380]

	베 트 남	예 멘	독 일
체제 분단기간	1995－1975	1967－1990	1945－1990
양국관계	적대적 대립관계	적대·협력 반복	경제적 대립협력관계
교류협력	실행안됨	인적교류 가능 간헐적 협력	원활히 추진
체제간 이질성	매우 큼	약함	매우 큼
발전격차	거의 없음	약간 있음	커다란 격차

379) 전국통일운동학생본부, 조선에서 한국으로 반동에서 변혁으로 분단에서 통일로, 1993, 139쪽.

380) 황병덕외, 한국 현 통일 새 모델이 필요하다. [신동아], 8월호 1994, 309쪽.

통일요인	체제의 정당성	외적·경제적 환경	체제발전격차 정당성
통일방식	무력적 흡수통일	합의 통일	평화적 흡수통일
통일후 체제	공산주의	이슬람 공화국	자본주의
통일후 문제점			
정치	거의 없음	무력대결	없음
경제	전후 재건비용	저성장 악순환	막대한 통일비용소요
사회·문화	국민통합 문제	사회혼란 가중	사회통합문제 상존

12. 범민련[331]과 범청학련[382]의 강령대비[383]

범 민 련	범 청 학 련
①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그에 기초하여 전개된 강령 및 방안, 민족공동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며 그를 활동의 근본지침으로 삼는다.	① 7·4공동성명에서 채택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이 우리민족의 조국통일강령을 다시 천명하여 이에 기초하여 92년에 발효된 합의서를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하여 90년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② 북과 남,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 남과 북이 두 제도 두정부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모든 민족성원들의 의사와 염원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한다.	② 민족내부문제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외세의 개입과 간섭도 단호히 배제 반대하며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381) 「로동신문」, 1993. 12. 17, 5면.

382)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94 대의원대회, 1994, 231－241쪽.

383) 김승호, 범민련과 범청학련 통일운동의 문제점 분석, [공안연구], 34집, 9－60쪽.

③ 우리민족의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며 조국의 영토에서 모든 외국군대 철수 및 북과 남, 남과 북에 호상군축을 실현하여 조선반도를 비핵평화지대화 한다.	③ 조국통일의 최대 장애물인 주한미군과 핵무기를 완전히 철수시키고 남과 북이 상호군축을 실현하여 한반도의 비핵, 평화지대화를 이루기 위해 투쟁한다.
④ 동족사이에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는 모든 정치적 물리적 장치들을 제거하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온 겨레의 자유로운 내왕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며 북남사이의 다방면적 협력을 실현한다.	④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하며 군사대국화를 통한 침략적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⑤ 전민족적 통일을 집약하기 위하여 북과 남, 남과 북, 해외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 사이의 접촉과 대화를 발전시키고 조국통일 방도를 확정하기 위한 폭넓은 대화의 마당을 마련한다.	⑤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유일한 길은 연방제방식의 통일임을 천명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⑥ 북과 남,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민족역량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으로 결집시키며 조국통일운동의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킨다.	⑥ 전민족의 통일방안 확정을 위하여 남과 북, 해외의 제정당 사회단체들이 거족적으로 참여하는 전민족 통일정치 협상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며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⑦ 우리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의 모든 평화옹호세력들 연대를 강화발전시킨다.	⑦ 대화창구일원화 책동을 반대하고 남과 북, 해외의 청년학생들간의 자주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투쟁한다. ⑧ 같은 동포형제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의 철폐와 장기수들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투쟁한다. 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남과 북, 해외동포들을 포괄하는 유일한 애국적 통일운동체임을 인정하며 범민련의 선봉대로서 투쟁한다. ⑩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전세계적 진보적 청년들과 전국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